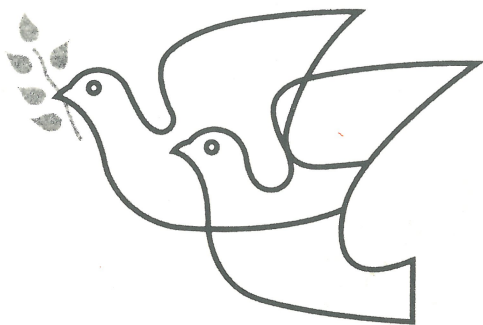


2001 여성평화아카데미



주최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후원 : 기독교사회발전협회

2001 여성평화아카데미



주최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후원 : 기독교사회발전협회



여성평화아카데미 봄강좌

여성평화아카데미 가을강좌

여성평화아카데미 겨울강좌

2001

여성평화아카데미

봄강좌

- 일시 : 2001년 4월 25일 ~ 5월 16일
- 장소 : 동북여성민우회

분단과 여성 그리고 통일과정

정현백 (평화를 만드는 여성의 공동대표,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1. 머리말

1945년 8월 38선이 그어진 이래 어언 반세기가 지났다. 그간 남과 북은 각기 다른 정치체제와 함께 변곡무쌍한 발전의 길을 걸었다. 민족 상강의 전쟁을 겪었고, 독재정치와 외세의 압력 아래에서 국민들은 가파른 삶을 살아왔다. 서로의 우위를 확인하기 위한 남과 북 사이의 경쟁은 한편으로는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었을 수도 있으나, 달리는 국민의 삶 전체를 막육강식의 전쟁터로 만들었다.

그러나 1972년 남북한이 처음으로 합의한 7·4 남북 공동성명은 남북 대화의 최초의 성과이자, 통일을 위한 첫 출발점이 되었다. 당시에 합의한 조국통일원칙인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원칙은 여전히 유효한 통일원칙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 과정에서도 북은 이를 정상회담의 기본정신으로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7·4 남북공동성명 이후로 남북관계는 긴장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1991년 12월에 다시 제5차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가 합의되고, 1992년 2월에 발표되면서, 남북관계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비로소 가능해졌다. 남북기본합의서의 서문에서는 7·4공동성명에 따른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남북이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공동 노력할 것을 함께 다짐하고 있으며, 남북관계가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를 천명한 것도 그간의 남북관계를 비추어 볼 때, 큰 성과의 하나이다. 이어 제1장(화해)에서는 상호 체

제인정과 내정 불간섭을 밝히고 있고, 제2장(불가침)에서는 서로 침략하지 않을 것과 단계적인 군축을 약속하고 있다. 제3장(교류협력)에서는 남북간에 경제분야와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을 약속하고 있다.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향후 남북관계의 커다란 골격이 짜여진 셈이어서, 앞으로 진행될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그 정신이 그대로 수용되고 계승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1992년 후반기에 들어와, 미국은 북한의 핵문제에 강력하게 제동을 걸기 시작하였고, 이는 남북고위급회담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뎀스파리트 훈련의 재개와 북한의 NPT탈퇴(1993년 3월)로 나타났고, 이후로 남북관계는 급속히 악화되었다. 1994년 6월 극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이 합의되어 한반도 내에서는 핵위기로 인한 긴장감이 해소되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김일성 주석의 돌연한 사망과 '조물과동'은 다시 남북관계를 경색시켰다. 이런 남북관계의 역사적 배경은 남북 평화공존의 수립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상대인 북한의 위상설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시도는 항상 극우 보수세력의 공격에 좌지우지되는 불안정성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바로 이런 분단 역사의 무게를 달고, 6월 12-13일 사이에 남북 정상회담을 갖게 된 것은 큰 성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회담이 남북 관계의 긴장을 극복하면서 제대로 진전되어 한반도에 평화공존의 길을 열어준다면, 이는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보다 인간적인 삶의 질을 확보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여성의 운명도 바로 이 과정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바로 이런 문제의식에서 이 글은 여성이 바라는 남북 정상회담이 지향해야 할 방향, 그 속에서 여성의 역할 그리고 그 실현을 위한 여성의 요구를 제기하고자 한다.

2. 남북 정상회담의 의미와 방향

1) 남북정상회담의 의미

이미 앞에서 밝힌 대로 남북정상회담은 분단 반세기만에 처음 성사되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미는 매우 깊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 나아가 아래의 몇 가지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앞서 제기한 역사적인 측면 이상의 또 다른 의미가 있다.

남북정상회담이 지니는 첫 번째 의미는 그것이 한반도문제의 해결구도를 '북미축'에서 '남북축'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미 개최발표문에서 "남과 북은 역사적 7·4 남북공동선언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확인하면서"라고 밝힘으로써, 남북이 자주적으로 민족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표명한 점은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북이 남북정상회담을 수용하는 데에는 우리 정부가 제시한 대북 경제지원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북·미관계의 변화도 작용했다는 주장이 있다. 즉 미국은 지난 93년 핵 확산 방지조약(NPT)에서 북이 탈퇴할 때만해도 북한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외교적 방향을 지녔지만, 지난 94년 제네바 핵 합의 이후로는 북의 대미외교와 관련된 사안을 상당 부분 한국 정부에 일임하고 있다는 것이다.¹⁾ 여기에서도 98년 김대중 정부수립이후 일관되게 대북 포용정책을 펴온 것이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크게 기여하였으리라는 것이다. 여쭙되었던 한반도 내 평화체제 구축에 남/북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은 큰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둘째로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는 남북 최고위급 지도자의 결단이었던 과거의 경험과는 달리, 그것이 구조적 산물이라는 점이다. 즉 북한이 정상회담을 수락한 것은 지난 수년간의 혹독한 시련기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서 남북간의 경제협력과 외세와의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은 김대중정부 출범이후 비교적 활성화된

1) 주간조선, 2000년 4월 20일, 22면.

남북정협과 외국의 원조로-본격적인 경제회생으로 가는 길은 아직 요원하다 하더라도- 극심한 식량난을 극복한 상태이다. 또한 정치적으로도 김정일 체제는 김일성 사망 후 대두되었던 체제보존의 위협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안정화의 길에 들어섰고, 이런 자신감이 김정일로 하여금 대외관계를 개선하고, 정상회담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위상을 최대한 높이려는 시도로 구체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자연스레 복귀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²⁾

세세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관계는 그간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벗어나서, 상호협력적 공생관계로 전환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섰고,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은 의례적인 만남의 차원을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 여갈 수 있는 상황적 조건을 창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을 북이 수용한 배경에는 경제적 실리추구가 그 중요한 동기로 작용하였겠지만, 그에 못지 않게 북이 김대중 정부를 '인정'했다는 사실이다. 북은 그 동안 정부의 햇볕정책을 격렬히 비판하면서도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남북 정부의 개별정책을 격렬히 비판하면서도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남북 정부의 제안에는 과거처럼 심한 어조로 비난하지 않았다. 또한 그사이 북은 지속적으로 그리고 세밀한 경제적 실리 계산 없이 자신을 경제적으로 지원할 국가는 결국 남한밖에 없다는 사실도 인식한 것 같다.³⁾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실질적인 남북관계의 개선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조건이 성숙한 시점인 것 같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전 국민이 높은 지지와 관심을 표명하는 이유는 바로 지금이야말로 남북관계가 성큼 비약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서 있기 때문이다.

2) 향후 대북정책의 원칙과 방향

크나큰 민족의 여망을 담고 있는 남북정상회담은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2) 신동아, 2000년 5월, 123-4면

3) 신동아, 2000년 5월호, 125면

로 나가야 할 것인가? 이를 위해서 우리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원칙과 방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 포괄적인 의제선정과 신중한 접근의 조화

정상회담이 통일 터담기와 유기적으로 접목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정상회담이 화해, 협력, 평화, 통일이 현실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앞으로의 정상회담에서는 민족의 평화와 화해 및 통일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쟁 방지와 평화구축, 군비축소, 서해교전과 같은 충돌의 방지책과 같은 정치 군사적 문제가 경제교류에 못지 않게 회담의 중심의제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절실히 요구하는 생존권 요구인 평화체제, 한미일 공조에 의한 대북한 군사적 압박의 중지를 담보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회담의 초두부터 군축과 같은 정치적인 사안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회담 자체를 결렬시키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는 경제와 정치군사문제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제'로 회담을 진전시켜야 하겠지만, 초두부터 포괄적인 의제선정에 대한 강박증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의미이다.

나. 자주외의 원칙과 <남북기본합의서>정신의 구현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외교는 대외의존성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특히 한-미-일간의 공조체제는 우리 외교를 규정하는 중요한 가이드라인이었고, 사실상 우리 민족의 진정한 이익과는 상치되는 대북정책이 시행된 것도 사실이다. 마찬가지로 북한 역시도 남한과의 대화를 기피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에 대달려왔다. 이제 우리의 경제력이나 정치적 발전정도에 비추어볼 때, 자주적인 대북관계를 스스로 펼쳐 나갈 시점에 이른 것 같다. 지금부터 우

리도 남북간 정상회담의 정례화 및 당국자회담의 상설화를 통해 민족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미 1992년에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의 기본정신을 다시 되새겨보고, 그것을 현실화하는 데에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정상회담의 합의문이나 예비회담 과정에서 7·4공동성명의 조국통일 3대 원칙이 자주 거론되고, 이가 보수언론에게 정상회담에 대한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⁴⁾, 우리측에서는 7·4공동성명의 기본정신과 더불어 1991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함께 강조하는 것이 좋다.

다. 인도주의적 문제의 분리원칙

인도주의적 문제는 정치 및 경제 등의 문제와 연계되어 협상함이 없이 분리하여 처리한다는 원칙이 정해져야 한다. 우선 북한에 대한 식량 및 의료 지원과 같은 문제는 다른 정치적 문제와 분리하여 다루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이산가족문제와 비전향 장기수의 송환도 인도적인 문제로 다루어, 조건 없이 처리해야 한다. 뿐 만 아니라 여성들은 지난 몇 년간의 기아로 인해 많은 북한 여성들의 모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이를 통해 우리 민족의 미래를 담보할 어린이들이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손상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다. 따라서 여성들은 우리 정부를 향해 모성과 어린이 보호를 위한 인도주의적 특별지원을 신속하게, 조건 없이 시행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라. 비동가성, 비동시성의 원칙:

'상호주의 원칙은 남북관계의 진전을 가로막고 대북 신뢰감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는 인도적인 차원의 대북 관계와 남북대화의 진전

4) 보수언론은 조국통일 3대원칙이란 주한미군철수와 한/미/일 공조파기, 국보법 철폐와 안기부 해체, 한중연 등 통일세력의 활동보장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면서, 김대중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미군철수를 전향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주간조선, 2000. 4.27, 28-30면 참조.

을 방해해온 냉전수구세력들에게 정부의 전향적인 대북 정책을 가로막을 수 있는 장애거리가 되어왔다. 지금처럼 남북관계가 비대칭적이고 불균형적인 상황에서는 남쪽의 유연한 자세가 요구되고, 반드시 지원한 만큼을 그대로, 당장에 되돌려 받아야 한다는 사고를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의 “정상회담과 뒤이은 남북교류에서는 ‘비등가성, 비동시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하고, 그래야만 진정한 남북 상호이해와 평화체제 실현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한 대 국민 홍보가 필요하다.⁵⁾

마. 평화주의 원칙의 실현

오랫동안 정부 정책이나 통일운동은 통일방안 중심의 통일은의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래서인지 우리의 일차적인 관심은 남북 정치권력의 형식적 기계적 결합에 집중되었고, 이런 와중에서 각각이 상대방의 흡수통합 야심에 대한 의심에서 헤어나지 못하였다. 최근에는 경제교류와 자본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나, 이런 변화가 통일을 둘러싼 과거의 발상법에서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니다. 이제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 특히 여성들은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통일이슈에 평화주의적 시각을 결합할 것을 촉구한다. 이는 북과의 관계에서는 공존공영의 원칙아래 적대적 군사대결구조를 완화하고, 화해·협력의 정신 속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고, 동시에 남한 사회 내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산·남남대화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군사주의 문화의 제거를 실천하는 일이다. 이런 평화주의 원칙의 표방은 앞뎀 보기에는 남북정상회담의 의제와 큰 관련이 없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전쟁공포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소극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평화의 실현 없이는 우리의 통일은 진정한 ‘내적 통합’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통일이나 평화체제의 구축이

5) 이철기, 남북정상회담의 의미와 다루어야할 의제: 정치·군사분야를 중심으로, 통일권 통일협회/학술단체협의회 주최, 남북정상회담의 의제와 방향 자료집 (2000. 4. 25), 30면 참조.

양 체제 중 어느 한 편, 혹은 양 체제하에서 살아가는 집단 중 어느 누군가를 희생시키지 않은 진정한 내적 통합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우리는 평화주의 원칙을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혈상 태이들에서 동시에 관철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이번의 정상회담에서부터 우리는 이 평화주의 원칙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

3. 왜 여성은 참여해야 하는가

남북정상회담은 민족의 동질성을 확인하는 언술과 함께 남한 사회 내에서 민족주의 이념을 고양시키고 있다. 지난 반세기동안 벌어진 남북한간의 차이와 갈등을 해소하는 데에 가장 큰 동력이 되는 것은 한 민족임을 확인하는 일이다. 우리 민족처럼 거의 반 만년동안 외세에 위협받고 고통당해온 민족에게는, 민족주의 담론이 주권을 지키는 생존전략이 되는 것은 당연하기에, 이를 비난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민족주의가 담고 있는 구체적 내용들이 문제이다. 혈통적 민족주의 혹은 문화적 민족주의에 근접한 남한 민족주의는 분단이후 극단적인 자본주의 경쟁사회 그리고 군사주의 문화에 의해 더욱 정격되었다. 이 이념이 통일문제와 결합할 경우에 지니는 문제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민족의 생존'이라는 최고 가치를 위해, 일반 민주주의가 약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군부독재를 물리치면서, 간신히 형식적 민주주의가 정착한 우리 현실에서, 폐쇄적 민족주의와 통일운동의 결합은 민주주의의 실질적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남한의 민족주의는 이미 남한 사회의 경제적 발전 정도나 국제적 위상과는 맞지 않게 폐쇄성을 지니고 있음이 학계에서도 종종 지적되었다. 우리 경우는,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끼인 약소국이지만, 외세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민족주의 운동 단계를 넘어서 이제 민주주의 담론이 사회의 전면에 내세워지는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의 국가와는 대조적이다. 이제 우리도 강력한 민족주의적 호소력을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애호심

으로 서서히 전환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독일통일은 자신들이 성취한 사회적 시장경제, 개방사회, 민주주의 혁명에 대한 체제 애호심(Verfassungspatriotismus) 때문에 반쪽의 성공이냐마 거둘 수 있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⁶⁾

물론, '민족의 생존'이라는 거대담론 앞에서 여성이나 여타 소수집단의 인권침해가 무시될 공산도 크다. 역사를 들여다보자면, 대다수의 식민지 국가에서 자율적인 민족국가를 구성하고, 근대화해 박차를 가하는 것이 지상최대의 과제가 되었다. 봉건적 관제에 무정하면서 민족정체성을 만들어 가야 했던 민족주의자들에게, 근대화된 민족의 이미지를 내세우기 위해서 여성은 개화되어야 했고, 또한 민족해방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민족주의 운동에 통합되어야 했다. 식민지 조선의 담론에서도 주권을 상실한 조국은 '어머니'로 상징화되면서, 모성은 찬미되었다. 아버지를 대신하여 생계를 꾸려가는 강인한 어머니의 모습이 강조되었지만, 이는 임시방편적이었다. 독립국가, 민족을 상징하는 아버지의 역할이 회복된다면, 모성의 역할은 다시 수동적이거나 주변화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민족주의와 여성의 결합은 민족주의 운동 내에서 여성의 중요성을 인지케 하거나,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민족주의자의 어머니 담론은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는 여성의 이익을 희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학습시켰다. 식민지 치하에서 여성은 남편과 아들의 투옥을 말없이 뒷바라지하는 생계담당자이자, 식민지 자본주의의 값싼 노동력으로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로 살아갔고, 이는 여성이 민족차별과 성차별이라는 이중착취의 희생자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성은 민족주의자들에 의해서 여성은 단지 민족차별의 희생자로만 비쳐졌다.

6) 이를 위하여 한운식, 하나의 민족, 두 개의 과거: 독일인의 민족의식(1945-1994)과 내력

통일의 문제들, 『해외지역연구』, 제1권 제1호 (1997), 148-151면 참조.

식민지 해방이후 생겨난 주권국가에서는 민족주의는 보다 위험한 방식으로 여성과 결합하였다. 식민지 후기의 제3세계에서 식민지 통치를 통해 구축한, 법·관료·군대·교육제도 등을 그대로 물려받으면서, 탈식민 기획은 실패하고 만다. 동시에 식민지 통치에 대한 반감은 '민족문화 찾기'라는 명목 아래 가부장제의 봉건적 유제를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결국 식민지적 유제와 봉건적 전통의 결합은 근대화과정에서 기묘한 동력으로 작용하면서, 여성에 대한 노동착취와 성차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남한의 경우에도 70,80년대 공업화를 위한 값싼 여성노동력의 동원과 착취는 여성의 전통적인 비덕으로 알려진 충순과 희생정신을 매개로 이루어졌다. 나아진 여성노동자들의 희생이 한국의 경제발전의 토대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공순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편식을 견디어야 했고, 이런 여성의 공헌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온당하게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⁷⁾

결국 여성은 민족주의에 대해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지닐 수 밖에 없다. 근대 민족주의는 여성에게 일정한 자리를 할당해주면서도, 동시에 주변화시키는 이중기제를 행사하였기에, 여성들은 민족주의 담론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역사적 경험은 남북관계가 황성화되면서, 재연될 소지도 있다. 남북 경제협력의 본격화될 경우 노동력의 활용이 어떤 방식으로 성별화될지, 그리고 통일 과정이 성별이나 출신지역에 따라 내부 식민지를 증충적으로 만들어내지나 않을지를 여성들은 냉철하게 판단하고 대비해야 한다.

정상회담이 진행된 요즈음에, 쟁점이 되고 있는, 그러면서 민족문제와 연관하게 결부된 이슈는 미향리 사격장문제와 한미행정협정 개정이다. 전자는 민족문제이자 생존권의 문제라면, 후자는 민족자주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성차별과 연결되어 있다. 특히 불공정한 한미행정협정문제를 폭발시킨

7) 이를 위하여 70, 80년대 여성노동자 수기를 참조하기 바란다. 장남수, 『배앗긴 딸들』, 〈창작과 비평사, 1984〉; 석경남, 『공장의 불빛』, 〈일월서각, 1984〉

기록제는 기지촌 여성에 대한 미군범죄였다. 그러나 여성의 입장에서 개탄스러운 점은 기지촌 여성문제가 떠오를 때마다, 이는 늘 민족문제로 상징화되면서, 피해자 여성의 인권문제나 성차별은 논의의 핵심에서 사라지는 현실이다. 예를 들면 몇 번에 걸쳐 일어났던 잔혹한 기지촌 여성 살해현장을 취재하러 모여들었던 기자들이나 운동가들은 그것이 확실한 미군범죄일 경우가 아니면, 이내 관심을 잃고 흩어져버리고, 힘없는 기지촌 여성들은 홀로 힘겨운 싸움을 계속해왔다. 군위안부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평가될 수 있다. 일본 제국주의자의 잔혹한 착취나 조선의 순결한 처녀가 일본 군인들에 의해 더러워졌다는 데에 대한 분노가 주된 담론이 되었고, 이렇게 희생당한 여성들이 해방된 조국에서 50년 동안 멸시받으며 숨죽인 채 살아야 했던 통한의 세월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은 한번도 제대로 반성되지 않았다. '민족자주'와 '민족통일'에 대한 높은 관심에 비해, 남한 내 외국인 노동자문제나 기지촌 배출부의 70%를 이루는 외국인 여성의 갖바치는 인권에 대한 상대적 무관심도 우리 민족담론이 지닌 양면성이다. 여전히 민족주의 담론이 분단이라는 비극적 현실을 극복하는 동력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이 과정이 국민의 절반인 여성이나 소수자 집단의 이해관계가 도외시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이 또한 참된 민족국가의 형성으로 나아가는 길이라 말할 수 없다. '여성'이라는 새 주체의 참여를 통해서야 비로소 그간 은폐된 현실이 가시화될 것이고, 이는 통일과정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집합이자, 미완의 민족국가를 완성하는, 즉 성이나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과정이 될 것이다.

그간 여성운동은 통일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왔다. 1991년 여성운동은 일본 여성단체의 중개로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남/북/일본여성이 모두 참여하는 토론회를 다섯 차례에 걸쳐서 동경, 서울, 평양에서 개최할 수 있었다. 이 만남은 분단이후 최초의 실질적인 '민간차원의 남북교류'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고, 특히 명실상부한 최초의 남북간 민간교류를 여성들이 해내었다는 사실은 우리 통일운동의 역

사에서 길이 기록될 만한 사건으로 평가된다.⁸⁾

그러나 냉정하게 관찰하자면, 전 국민의 절반이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통일에 관심을 지닌 여성들은 여전히 소수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성주의자들은 통일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성인지적 관점의 중요성을 언급하는가? 한국여성들이 통일문제에 대한 여성의 적극적 참여를 깊이 자각한 것은 독일 통일을 통해서였다. 독일통일은 여성의 지위, 특히 동독출신 여성들의 지위를 현격하게 악화시켰다. 통일이전에 동독에서 여성은 가계수입의 40%를 벌었고, 이에 비해 서독여성의 수입은 단지 18%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통일 이후 동독지역에서 여성의 일자리는 40-45%가 줄어들었고, 여성의 실업률은 13배로 늘어났다. 거기다가 국가에서 경영하는 탁아소가 자본주의적 영리경영으로 전환되면서, 탁아비가 엄청나게 올랐고, 결국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여성들은 일자리를 떠나야 했다. 이런 현실들이 동독지역 여성들의 임신기피로 이어지자, 결국 통일 독일정부는 탁아의무제도를 위시한 여성에게 유리한 몇 가지 정책을 입안할 수밖에 없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옛 서독여성들은 통일 이후 여성정책면에서 과거에 비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었으나, 옛 동독 여성들의 지위는 형편없이 열악해졌다. 결국 분단되었던 사회주의권과의 통합은 자본주의권 여성들에게는-사회주의 국가의 여성정책 수준에 부응하려다보니-어느 정도 이득을 가져다주었으나, 그 반대로 여성들에게는 반대의 결과를 가져온 셈이다.⁹⁾

이런 독일의 역사적 경험을 우리 현실에 적용하자면, 무인할 수 없는 사실 하나는 통일은 여성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리라는 것이다. 이 점이 바로 왜 여성들이 통일운동에 참여해야 하는가의 당위성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다. 독일의 경우 서독지역 여성들의 지위향상에 통일이 기여한 것

8) 정현백, 한국여성통일운동의 현황과 과제, 미발표원고, 305면 참조

9) Colneric, Ninnon, Wiedervereinigtes Deutschland- Haben wir die Chance genutzt?, 1999.

8. 27 한국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강연회 원고 참조.

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통일이 남한 여성의 지위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남성=생계부양자'라는 이데올로기가 훨씬 강력하게 작동하는 한국의 경우, 통일이 되거나 남북 경제교류가 더 활성화되면, 남한 여성의 경우 일자리를 두고 북한 남성노동력과 경쟁해야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통일에 한 발자국씩 다가갈수록 군축이 진행될 것이고, 이를 통해 축소된 국방비를 여성복지비로 전용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평화체제 구축이나 통일은 여성의 일상적 삶과 직결되어 있다. 그래서 통일 이후 성평등이 실현되는 사회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여성이 통일운동에 참여하고, 통일정책의 입안과 집행과정에 능동적·주도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결국 통일정책에서 여성주의적 혹은 성인지적 관점의 관철이란 바로 통일의 실현이 양성평등사회를 달성하는 것과 동일한 것임을 확인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으로 전 국민이 들떠있는 이 시점에서 여성계에서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되는 통일정책을 내세우는 것에 대해, 사회 모두가 이를 생경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지향하는 남북공존의 사회가 평등과 민주를 실현하는 사회이어야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정부 당국, 시민사회운동 그리고 전 국민은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감수성을 회복해야 하고, 이와 함께 통일문제는 '남성의 임무'라는 고정관념도 깨도록 해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여성들은 여성의 요구를 제기해야 한다.

4. 정부에 대한 여성들의 요구

민주국가에서 여성이 배제되는 방식은 우리의 통일정책이나 통일운동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간의 통일정책이나 통일운동에서도 여성은 보이지 않았다. 정부의 통일정책과 관련하여 여성들이 제기하여야 할 첫 번째 요

구는 정부 대표단구성이나 실무 혹은 각종 정부 관련위원회에 여성들의 참여를 높이는 것이다.

<표1>¹⁰⁾ 통일 관련 위원회의 여성 비율

	제(전체인원)	여 성 (명)	비 율 (%)
통일고문회의	27	6	22
정책자문회의	48	4	8.3
통일정책평가회의	15	0	0
민주평통자문회의	13340	1998	14.9

1998년 여성특별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통일관련 위원회 등에 대한 여성의 참여는 여전히 여성제가 요구하는 30% 할당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다. 여성은 통일고문회의의 22%, 정책자문회의의 8.3%, 통일정책평가회의의 0%, 민주평통자문회의에 14.9%가 참여하고 있을 뿐이다. 뿐 만 아니라 평화적 통일을 위한 초석이 될 <남북 기본합의서>의 부문별 부속합의서 이행 및 정부당국간 교류를 위한 공식기구인 분야별 공동위원회중 사회문화공동위원회에 1998년부터 여성특별위원회의 국장급 여성공무원 한 명이 겨우 참여하고 있을 뿐이다. 이를 통해서도 통일정책에서의 여성대표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여성의 주도적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첫째로 정부차원에서 통일 정책 추진과정에서 여성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시키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도 미진하였다.¹¹⁾ 둘째로 통일문제의 중요성과 여성의 능동적 참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여성들에게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유교적 전통과 분단현실에 의해 강화된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는 통일정책본

10) 여성특별위원회.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과 여성교류현황 (통일간담회 자료), 1998, 11.

10명

11) 같은 글, 10면

아를 남성의 영역으로 간주하고 여성 참여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사실 통일문제 관련 분야에 여성 전문인력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나마 갖추어진 여성인력도 남성 중심적 구조 속으로 제대로 진입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지금이라도 서둘러 정부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정상회담 준비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높이는 일이다.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10일전에 한국여성단체연합, YWCA,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홍사단 여성위원회 등이 남북정상회담에 즈음한 건의문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여성들은 몇 가지 요구를 제기하였다. 첫째로, 여성들은 정상회담과 관련된 대표단 구성이나 실무에 여성들의 참여를 높여주고, 둘째로 남북여성교류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셋째로 후속실무회담에서 여성의제가 함께 제기되고, 동시에 경제협력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서 여성에 대한 배려와 우대조치가 취해지기를 요구하였다.¹²⁾ 그러나 정상회담 과정에서 여성은 보이지 않았다. 특별수행원과 수행기자로 각각 1명씩이 선발되었을 뿐이다.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하여 붓물 터지듯 쏟아진 TV프로나 신문 지면에서도 여성은 보이지 않았다.

당장 남북정상회담과정에서 여성의 요구가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여성계가 낸 건의서는 작은 성과는 거두었다. 통일부의 정책자문회의에 여성의 비율이 25%로 향상되었고, 일부 여성공무원이 통일정책실로 진출하면서, 승진하는 등의 성과도 있었다. 또한 이산가족방문에서도 우리 정부의 경우, 여성의 비중을 최소한 30%를 채울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아직 여성의 통일정책에의 참여는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통일정책이나 운동 분야에서 여성참여율의 향상과 관련하여 부딪히는 또 하나의 딜레마는 과연 여성참여가 비율상으로 증대된다고 하여, 그를 마냥 손뼉치고 좋아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개별적인 연결망을 통해서 통일 관

12) 정한택,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여성의 요구와 역할,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제1회 여성통일평화포럼 (2000년 5월 16일) 발표요지문 참조.

권위원회에 참여한 여성의 경우에는 그들의 활동이 여성주의적 관점에 역행하거나 기독교적 세력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래서 정상회담의 준비나 향후의 교류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어떤 여성대표들이 들어가야 하는지, 즉 여성총원의 선별기준도 문제삼아야 한다. 조직된 여성운동에서 대표성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 여성은 개인의 견해나 이익이 아니라 여성 집단 전체의 견해나 이익을 대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요구는 여성교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다. 정상회담이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후속작업에서 사회 문화교류가 활발해진 것이라 예측되지만, 여기에서 다시 여성이 소외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여성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북한동포돕기운동이 활발해진 이후, 민간교류는 자칫 남성교류, 경제교류, 기독교총 교류 등 특정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남성과 같은 경제력을 지니지 못한 여성들의 경우, 남북교류의 기회가 여성들에게는 매우 제한적으로 주어진다. 통일된 미래 사회가 균형 잡힌 민주제제를 지향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북한 여성들과의 교류를 통해, 서로의 동질성 그리고 그에 못지 않은 이질성을 확인하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치하면서 상호이해의 과정을 확실히 밟아가야 한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대로 우리 여성운동은 1991년이래 북한여성들과 다섯 차례에 걸친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이를 통해 서로간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경험이 있다. 이런 모임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어진다면, 여성들은 그간 지속된 대화와 토론의 연장선상에서 남북 여성들간의 견해차를 좁히면서, 상호공존의 모델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는 남북교류에서 여성에 대한 특별우대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반 세기동안의 분단으로 남북사이에는 많은 이질감이 생겨났지만, 그런 이질감이 가장 극대화된 것이 여성부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간 한국의 여성과 여성운동은 일상생활에서의 서구화나 서방에서 유입된 인간해방사상의 영향으로 북한 여성과는 의식구조나 태도

에서의 크나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통일 후에도 독일인이 겪고 있는 내부분단을 우리도 겪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통일과정에서 여성이 피해자집단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 정부는 활발한 여성교류를 통해 남북여성간의 상호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여성들은 곧 있게 될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아닐지라도, 후속과정에서 여성의제가 함께 제기되고, 동시에 여성에 대한 배려와 우대조치가 취해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후의 남북 교류과정에서 여성을 위시한 소수 그룹에 대한 특별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남북 쌍방간에 합의되기를 희망한다. 특히 정상회담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향후 남북교류는, 특히 경제지원을 통해서 상당히 가속화될 전망이다. 바, 우리 여성들은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관에 대한 남한정부의 보증이나 북한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에서 여성경제인이 우선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지기를 바란다.

5. 여성의 과제와 역할

남북관계의 변화 속에서 여성들이 해야 할 일은 대단히 많다. 우선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百家爭鳴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이를 통해 자칫 국론의 분열이 일어날 소지도,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보자면, 없지 않다. 이는 자칫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체제의 실현에 장애요인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또한 민족의 화해협력과 평화체제 실현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기여해왔던 그간의 민간사회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정부의 일방적인 주도권 장악과 합제 정상회담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여성들은 남북정상회담의 대표단 구성에 민간단체를 포함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여성단체들의 과제와 역할을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1) 우선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힘 실어주기'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정략적 이용에 대한 제어하기'와 '장기적·지속적'이 되도록 건인 및 추동하기' 등의 역할도 해야 한다. 특히 경제협력의 과정에서 정부가 취하는 조치들이 남한 내 특정계벌의 이익만을 보호하면서, 남한 국민의 이익이나 북한의 장기적 개발전략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작용하지나 않을지를 감시하는 기능도 필요하다. 즉 이번 정상회담은 민간차원의 남북경협이 북한 사회간접자본 확대 및 농업개발 지원 등 민간·정부차원의 대규모 경제협력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경협이 북한 스스로의 경제회복과 자율적인 발전방향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감시하고 추동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여성운동은 정상회담과 그 후속사업이 남북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조치가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2) 남과 북의 주도하에 한반도 평화체제를 정착하는 과정에서 외세가 강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여성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운동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동아시아의 평화체제 구축이 실현되지 않는 한, 한반도의 평화가 실현되기는 어렵다.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는 대중국의교가 중요해지고, 이를 통해 다자간 외교를 통한 동북아시아 균형체제가 실현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이 과정에서 일본이나 서방 강대국들이 한국과 중국의 우호적 관계에 대해 제동을 걸 경우, 여성들은 여러 시민사회운동 단체들과 함께 여론형성을 통해 강대국의 간섭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특히 최근 공화당 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의 강경노선으로의 선회와 더불어 대북 포용정책에 대해 미국이 가하는 압력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어렵게 성사되어가고 있는 남북평화체제 수립에 미국 정부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여성들은 미국정부와 미국의 대한반도 문제 싱크 탱크 혹은 미국 평화운동단체에 한반도평화체제 수립을 촉구하는 호소

문을 내고, 이런 우리 주장을 확산하기 위한 여론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시도하는 국가미사일방어체제(NMD)나 지역미사일체제(TMD) 구축에도 여성들은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여가야 한다.

3) 현재 통일과 관련된 국민들의 의견이 하나로 결집되어 있지도 않고, 또한 결집될 수도 없다. 그러나 어떻게 성사된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조정되면서, 정상회담에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합의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특히 실리주의적 이익 때문에 정상회담을 시작한 북한이 부담스러워서 술쩍 밀쳐놓고 있는 예민한 사안들을 사회운동 단체들이 앞서서 끄집어내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한 미군천수나 군축 등의 원론적인 주장들은 그 자체로서는 명쾌하지만, 현실적인 적용에서는 우리가 따르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해결하기 쉬운 문제에서 시작하여, 서서히 '포괄적인 의제'로 접근하도록 여론을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여성단체들, 그 중에서도 연합체 조직에서는 다양한 산하 단체들간의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이나 관련된 활동의 수위를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에는 시민사회운동의 성급한 원론적인 문제제기가 북한을 곤혹스럽게 만들어 지속적인 회담의 진행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성단체 내에서도 서로간에 발언의 수위를 조절해갈 필요가 있다.

4) 이미 앞에서 정부에게 성인지적 관점과 통일운동의 결합을 고려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성 평등과 통일의 실현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임을 대국민과 대정부를 향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즉 정상회담과 후속과정이 장기적으로 성인지적 관점의 통일정책과 결합하는 것이어야 함을 천명하는 것이다. 이런 여성들의 문제제기와 요구는 우선은 남북 정부를 향해서 제기되어야 하지만, 국민들 사이에서 광범한 공감대를 확보해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작업이 되리라 생각한다. 여전히 평화·통일이슈

는 여성대중이나 국민대중에게 추상적이고 난해한 이슈이다. 이를 어떻게 알기 쉽게 우리 일상생활과 직결된 문제인가를 이해시키는 문제를 둘러싼 여성들의 치열한 고민이 요구된다.

5) 그간 여성운동은 미디어감시운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것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북의 경우, 언론매체의 반응에 대단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우리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가 정상회담을 그르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여성운동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언론의 태도와 역할을 감사하여, 언론의 부정적인 역할을 최소화시키는데 앞장서야 한다. 물론 언론시민연대와 같은 시민운동단체들이 언론보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여성들의 역할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객관적이고 올바른 보도를 추동하는 것에 못지 않게, 이번 회담과 후속작업에 대한 언론매체들의 보도에서 성인지적인 관점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도 감시해야 한다.

6) 여성들은 자신의 활동영역에서 평화통일의식을 확산하고, 평화통일운동의 지원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여성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남북한 주민간 이질성 극복과 통합을 위한 교육 및 사회적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또한 여성들은 남북관계나 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여성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여성단체들은 회원이나 여성대중을 상대로 '정상회담의 의의와 과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입장을 공유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시행이 시급하다.

7) 현재 여성단체들의 스펙트럼은 매우 다양하다. 정상회담이 상당한 정도까지 진행될 수 있음을 감안하고, 이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 우선 여성들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간의 견해를 좁혀 가는 대화와 토론과정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평화공존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한 사회 내에서 남·남대화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여성들

에게도 여·여 대화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특정한 의사소통구조를 통해 여성들간에 남북정상회담이나 평화공존체제의 구축에 대해 서로가 지닌 각기 다른 像을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견해차를 좁히면서, 공동의 합의과정을 찾아가는 데에 우리 여성들은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고, 그를 위해서 여타 곳에서 여성평화통일포럼이 마련되어야 한다.

6. 여성, 평화 그리고 대안사회의 실현

지금 한반도의 상황으로는 당장 통일의 실현이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통일의 실현이 반드시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통일 실현에 못지 않게 평화를 일상화하려는 여성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니, 경우에 따라서는 평화의 실현이 통일보다도 더 우리 현실에 직결되어 있는 과제이다. 통일된 미래사회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여성의 삶이 당장 분단현실과 직결되어 있고, 그래서 여성이 분단의 최대 피해자라는 사실만으로도, 여성이 평화공존체제의 실현에 동참해야 할 더욱 절실한 이유가 발견된다. 우리 어머니세대가 겪은 이산의 아픔이나 홀로 가족을 무양해야 했던 어머니들의 고통에 못지 않게, 분단된 사회가 군사주의를 유포하고, 타국에서는 유례가 없는 정도로 성폭력과 매춘의 일상화를 초래한 것은, 이런 분단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매춘이나 성폭력 외에도 군사화는 일상생활과 사회관계 곳곳에 모세혈관처럼 스며들어서, 우리 삶을 폭력화·황폐화하는 사실도 도외시할 수 없다. 물론 병영생활에서부터 시작하여 남성에게 부과된 가부장적 의무로 치자면, 남성이든 피해자이다. 그렇더라도 여성에게 있어서 군사주의의 피해는 훨씬 중층적이다.¹³⁾

13) 젊은 남성들 역시도 불합리한 병역제도와 군대문화로 고통당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남성성'의 규범아래에서는 남성들은 이런 피해를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없거나, 아예 이런 군사화된 일상문화를 문제로 인식하는 감수성을 결여하고 있다. 그런 까닭에 공무원시험 국가안전체제를 둘러싸고, 남성과 여성들은 모순의 본질은 비껴간 채, 선정적이고도 격렬한 대리전을 치루었던 것이다.

최근에 와서 여성학자들을 중심으로 군사주의를 새로이 개념화하고 문제제시하려는 노력이 있다. 군사주의는 가시화된 폭력을 유발하는 기제만은 아니다. 군사주의는 내재화된 가치체제나 일상적인 실천 속에 자리잡은 이념이나 무의식적 관행을 의미한다. 군사주의와 젠더의 관련성을 분석한 여성학자 인로(Enloe)는 집단적 폭력을 자초하는 집단이 유지되거나 강화되는데 필요한 소위 말하는 전사로서의 남자다움, 그리고 그런 남자다움을 보조하는 여자다움의 사회적 형성과 더불어 이런 집단의 보존을 위한 단일한 위계질서, 훈련 그리고 역할분업들을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하는 여러 제도적 신념적 장치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군사주의를 인식하였다.¹⁴⁾ 이런 군사주의의 특징은 여성 혹은 남성들 스스로가 자신이 군사주의에 끌려 들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점이다.

군사주의를 이런 새로운 개념으로 고찰할 경우, 우리는 더 이상 여성이 군사주의의 피해자만이 아니라, 가해자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보통 여성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작업에서 여성사가들은 여성 대중이 반드시 '전쟁'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자성적인 논의는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일본의 여성사가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전쟁을 통해 일본여성들은 '공적 영역'에 참가하게 되고, 이는 여성에게 무엇인지 알 수 없는 흥분과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여성이 역사의 주체가 아닌 주체라고 하는 페미니즘의 패러다임 전환은 여성이 단지 전쟁 피해자가 아닌 능동적인 가해자였다는 인식을 불러왔다.¹⁵⁾ 정리해서 말한다면, 여성은 분명 군사주의와 전쟁의 가장 중추적인 피해자인 것만은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여성들 스스로가 피해자로서 면죄부를 받게 되는 것만은 아니다. 이제 여성들도 '내 안에 있는 군사주

14) 권인숙, 우리를 살육해 군사주의: 여성과 군사주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미발표원고, 5면

15) 우에노 치즈코, 이선이 옮김, 내셔널리뷰와 젠더, 박종철출판사 1999, 57-8면

의'를 스스로 읽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분단의 중층적 피해자에서 '내 안에 있는 군사주의'를 문제삼는 적극적 주체로의 전환과 함께, 여성들은 바로 평화주의와 통일운동의 결합을 주도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물론 군사주의 해소만으로 여성해방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더라도 군사주의의 제거는 여성 지위향상의 가장 큰 걸림돌을 제거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

지난 30년간의 군부독재 체제의 탄압 하에서 우리 통일운동은 정치지향적인 운동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이와 더불어 통일방안 중심의 통일논의나 남북 정치권력의 형식적 기계적 결합을 중심으로 한 통일담론이 그 중핵을 이루었다. 또한 통일운동내의 문화도 남성적, 가부장적이었다. 그러나 남북 공동선언과 함께 이제 평화공존체제의 모색이 우리의 인차적인 과제가 되었고, 이를 위해서는 적대적 군사대결구조를 완화하는 작업이 시급해졌다. 따라서 통일운동을 포괄하는 보다 확장된 범주로서 평화운동의 중요성을 제기할 시점에 이르렀다. 각급의 통일운동이 화해·협력체제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평화운동에 접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자체로서 평화운동이 되기는 힘들다. 우리 통일운동에서는 여전히 민족주의 담론이 그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고, 현재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평화운동의 새로운 문제의식과 공유하는 바도 적다. 한 국가의 안보는 이제 국제적 연대나 제휴 없이는 달성하기 어렵기에, 시민사회운동은 통일운동을 '국제적 시민공동체'의 건설과 연관지어 사고해야 한다. 기아와 국제적 고립으로 고통받는 북한을 생각하자면, 이런 발상 자체를 '한가한 소리'로 치부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과정의 중요성이 생략된 운동의 비극적 결말을 자주 보아왔기에, 평화운동의 문제의식이 우리 의 통일담론에 적극적으로 수용되어야만, 진정한 내적 통일이 가능해진다고 항변하고 싶다. 이제 여성들은 여성의 개입을 통해 패거리의식, 헤게모니 장악 욕구, 질차의 비민주성 그리고 성차별이 사라진 운동문화를 지향하고자 하고,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 미래사회의 희망을 읽고 싶다.

한국 여성운동은 이미 70년대 말 이래 지속적으로 평화운동을 전개해왔고, 한반도 안에서 가장 먼저 평화운동을 시작한 집단이다. 교회여성연합회가 주관한 원자폭탄폐해자 지원활동, 여성단체연합과 기독교 여민회가 주관한 <여성평화한마당>, 핵발전소건설 지지운동, 핵무기와 군사기지 철수운동, <페트리엇 미사일 설치를 반대하는 여성모임>, <방위비 삭감을 위한 연대모임>, 1987년의 쿠투탄추방운동 등이 그 좋은 예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여성들이 지닌 평화에 대한 높은 감수성과 평화운동은 가부장적 언론에 의해 무시되었고, 또한 세인의 관심을 끌 정도의 대중운동으로 발전하지 못함으로써, 상징적인 의미만을 지니고 있다. 그렇더라도 여성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은 이런 여성평화운동의 전통에서 출발하였음이 환기되어야 한다. 이에 기반하여 향후 통일문제에서의 여성적 접근도 그간의 통일운동에 평화주의적 그리고 성평등적 관점을 추가하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여성들은 본성적으로 평화에 대한 감수성과 자각이 남성보다 훨씬 높다거나 여성이 생명을 잉태하고 키우기 때문에 기질상 더 평화운동에 적합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이는 잘못하면 본질주의로 흐를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여성을 둘러싼 성별분업을 더 고착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평화운동가이자 여성학자인 루딕(Sara Ruddick)은 여성의 생활상의 실천이나 노동방식이 생명을 돌보고 배려하는 것에 가깝기 때문에 여성이 현재로는 평화운동에 더 강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모성적 사고 그리고 여성들이 지닌 '돌봄의 윤리'는 군사주의와 같은 기존의 지배적인 사고방식과 실천들을 비판할 수 있는 가장 우월한 관점이자, 일상생활의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정초지가 된다.¹⁶⁾ 또

16) 여기에서 잊고 넘어갈 점은 여성들이 사용하는 평화개념은 전쟁을 종식시킨다는 의미의 소극적인 평화를 더 이상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 곳곳에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 때로는 가시적으로, 때로는 무가시적이지만 모세혈관처럼 퍼져있는 폭력들에 저항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폭력이란 물리적인 폭력만이 아니라, 구조적 폭력이나 감정적 폭력도 포함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평화운동은 갈등하는 국가나 사회집단간의 분열을 극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양 집단간의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하

한 여성은 권력의 배분과정에서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권력자의 전쟁관에 더 쉽게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따라서 통일운동에의 여성참여,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주의적 관점의 결합은 우리 통일운동이 정치 일변도의 운동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성은 평화, 남성은 전쟁이라고 하는 '도식적' 분류를 반대하고, 남성성이 지닌 다양한 기질을 남성 스스로가 봉쇄하고, 공격적이고 경쟁적인 단일한 남성성의 모습만을 드러낼 것을 거부장제가 강요한다는 점을 간파해서는 안된다.¹⁷⁾ 마찬가지로 이런 여성 참여가 은연중에 여성은 평화운동, 남성은 통일을 둘러싼 정치적 운동으로의 역할분담을 촉진한다면, 이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사실상 군사주의·국제적 담합자본주의·인종차별주의·성차별주의·제3세계의 빈곤은 서로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¹⁸⁾, 남/녀 간에 은연중에 이루어지는 역할분담은 여성에게는 정치경제의 구조적 특성, 남성에게는 일상생활의 비평화와 군사주의를 제대로 포착하는 것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화·통일운동이 요청되는 현실에 대한 총체적 이해, 구조적인 차원의 문제해결 모색 그리고 일상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작은 비평화의 관행에 필요한 싸움을

여 공통의 이익을 증진하고 평화를 실현하는 적극적인 평화전략에 기초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켜지는 평화(protected peace)'가 아니라 작용하는 평화(working peace), 평화유지(peace keeping)가 아니라 평화 만들기(peace making)를 지향하여야 한다. 김윤옥, 남북한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실천들, 여성·평화·화해를 위한 실천들, 여성·평화·화해 (한국여성단체연합 10주년 기념 국제여성평화심포지움 자료집), 109-114면

- 17) Sara Ruddick, "Notes Toward A Feminist Peace Politics", Miriam Cooke & Angela Woollacott eds., Gendering War Talk, (Princeton University Press: New Jersey) 1993, op.cit., pp.112-113
- 18) Cynthia Enloe, Bananas, Beaches and Bas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0 참조

동시적으로 전개하는 일이다. 더불어서 여성운동이 남성들이 정치적인 차원에서 풀어보고자 하는 통일과 평화체제를 좀 더 평화주의의 관점에서 그리고 일상생활 속의 평화 실현과 관련시켜 풀어보고자 노력할지라도, 이런 평화운동이 통일운동으로부터 괴리될 경우, 결국 여성들은 앞에서 말하는 역할분리를 다시 받아들이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통일과 관련하여 여성들이 제기하는 또 다른 문제의식은 비록 통일사회의 실현은 대한사회의 모색과 결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 시민운동이 아직 출발단계에 있는 까닭에, 대한사회의 모색에 관심을 두기 보다는, 당장 급한 정치적 개혁현안에 몰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한다면 진보적 여성운동은 상대적으로 '대한사회의 실현'과 '여성운동의 결합'을 더 큰 소리로 외쳐왔다고 생각한다. 특히 자본의 전지구화가 2 : 8의 사회로의 진입을 계속하면서, 공/사영역의 분리나 남성=생계부양자의 이데올로기와 함께 여성은 임금노동이나 시장경제에서 더욱 빠른 속도로 배제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노동 뿐 아니라 역할에서 주변화되는 여성이 모색할 수 있는 역공은 대한사회 실현을 위한 운동에 적극적인 주제로 나서는 일이다. 대한사회 모색에서 전제가 되는 것은 시장경제력 강화를 중시하는 시장경제에 대한 비판과 완전고용의 환상으로부터의 탈피이다.¹⁹⁾ 최근에 들어와 평화의 개념이 확장되면서, 국제 여성평화운동은 생태계의 평화도 포괄하게 되었고, 여러모로 대한사회를 실현하는 과제와 더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 평화운동은 오히려 광범한 이슈를 포함하는 것보다는 한반도 내 평화체제의 정착과 일상생활의 평화를 회복하는 일에 집중해야 하지만, 바로 이런 작업이 대한사회 실현과 연결된다면, 여성은 대안적인 노동형태나 노동에 대한 대안적인 평가기준을 만들어가면서, 기존의 권력관계와 경제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19) 김미경, 노동사회의 미래와 대한사회를 위한 여성주의 정책,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한사회정책연구소 창립 심포지움(2000.2.23) 자료집 참조.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북한을 끌어내어,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려는 마당에 대한사회를 논하는 것은 '구름 잡는 소리'로 들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여성들은 또 다른 반쪽의 땅에서도 남한처럼 매춘여성이 100만을 넘고, 성폭력과 음란물이 난무하고, 여성이 직장에서 축출되는 그런 사회가 생겨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시민·사회운동이 이제부터라도 대한사회의 상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획득해 가는 작업에 나서야 하고, 바로 여기에서 여성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제 여성운동은 기존 정치에 '끼여들기'에 못지 않게 대한정치를 지향하는 '새 판 짜기'를 시도하면서, 통일운동의 주체로 적극 나서야 한다.

7. 끝맺는 말을 대신하여

지난 10여 년 사이에 한국 여성의 지위는 놀랄 만치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양적으로 분석하자면, 여전히 여성해방적 의식을 지닌 여성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특히 통일운동은 여성에게 거의 불모지에 가까운 분야이다. 일반 통일운동단체들이 지닌 뜨거운 열기와는 대조적으로 여성들은 여전히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각종 정부 관련분야에서도 여성의 진출은 매우 더디다. 따라서 전체 정상회담의 준비와 그 후속작업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기는 어려운 구조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단체들은 여성대중을 상대로 지금부터라도 통일운동에 여성이 참여할 필요성 그리고 통일운동에 평화주의적 시각이 가미될 필요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동시에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정부의 통일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또한 여성들은 평화·통일운동을 함께 하는 남성들에게도 통일운동과 여성적 관점의 결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사회 전체의 감수성을 높여 가는 작업을 함께 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이런 여성들의 주장은 정부나 통일운동

에 참여하는 남성동료들에게도 생경한 주장으로 들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감수성의 회복은 바로 그 사회가 얼마나 민주적인 사회인가를 측정하는 실질적인 척도임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기지촌매매춘과 여성인권

김현선 (새움터 대표)

1. 군대매춘

기지촌은 한국의 땅이면서도, 한국과 미국정부라는 두 개의 정부에 의해 운영되고 통제되는 공창지역이다. 그리고 이 두 정부는 '미군에게 안전한 휴식과 오락을 제공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서로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왔다.

한국정부는 미군에게 성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지촌의 포주들의 불법적 행위를 묵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까지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또한 미군을性病과 에이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기지촌여성에 대하여 정기적인性病검진을 실시했다. 그리고 미국정부는 불평등한 주둔군지위협정을 통해 오로지 한국 내에서 미군들의 지위와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하여, 주둔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의 논란을 철저히 무시해 왔다.

이러한 한국정부와 미국정부의 정책은 기지촌의 포주들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들은 이 두 개의 정부가 기지촌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큰 이익을 챙겨왔다. 이들은 1990년대까지 '한미친선협회'를 운영하여 미군당국자와의 정기적인 모임을 주선했는데 이것은 한국정부의 비공식적 외교채널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또한 이들은 포주임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광업협회'라는 사단법인을 조직하여 기지촌을 관광특구로 지정받기도 하고, 조직적으로 외국인여성들을 성매매함으로써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였다. 그리고 기지촌여성들에 대한 착취를 통해 발생한 엄청난

난 이득은 이들을 지역유지교 만들었으며,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처럼 두 개의 정부가 기지촌을 통제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기지촌의 포주들은 한국사회 내에서 확고한 정치적·경제적 지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군대매춘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한군지위협정이나 미국정부, 미군당국 모두 군대매춘이나 기지촌에 대하여 절대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성을 매매하고 대상화하는 기지촌은 미군기지의 중요한 한 요소임이 분명하다.

미군관료들은 미군의 성적행위가 자신들의 군대의 중요한 욕구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중앙아메리카, 베트남, 필리핀, 한국, 일본, 푸에르토리코, 미국, 독일, 이탈리아에 주둔하는 미군의 기지촌들은 미국방성이 매춘을 미국 군대의 필수적인 요소로 보고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미군의 군함과 전투기에 연료를 공급하듯이 미군들은 미군기지주변의 여성과 소녀들로부터 재충전된다는 생각하는 것이다.²⁰⁾

이러한 미군관료의 견해에는 한국정부도 동의하고 있으며, 기지촌과 같은 미군을 위한 휴양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고 관리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기지촌여성에 대한 정기적인性病검진과 치료를 통해 미군들의 “안전한 매춘”을 보장하여 주었다.

2. 주한미군에 의한 군대매춘의 역사

기지촌의 역사는 한국매매춘의 역사이다. 한국의 매매춘은 일본제국군대에 의해 형성되었고, 미국군대에 의해 확산되었다. 이러한 매매춘의 확산은 한국의 경제를 성산업에 의존하게 하였으며, 현재 매매춘현상은 한국사회의

20. Gwyn Kirk(2000), 241쪽.

보편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한국과 비슷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필리핀이나 태국과 같은 아시아국가의 공통적인 모습이기도 하다.

한국 기지촌의 역사는 크게 여섯 시기로 나눌 수 있다. 그것은 일본제국군대 기지촌, 해방직후부터 한국전쟁 전까지의 미군정, 한국전쟁 후 1960년대 말, 1970년대 초부터 1980년대 중반,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 그리고 1990년대 중반이후이다.²¹⁾

가. 일본군대의 기지촌(~1945년)

첫 번째 시기는 일본제국군대가 조선에 주둔하고 있던 시기이다. 한국의 태춘은 일본제국군대의 조선진입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기지촌의 형성도 일본군대의 주둔의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조선의 개항 이후 일본의 공창제도는 우선 조선 내의 일본인 거류지에 도입되었고, 청일전쟁 이후 거류지의 유곽은 더욱 성행하여 일본당국은 거류지에서도 자신들의 관행에 따른 공창제도 관련 법규를 발포하였다. 일본군의 기지 주변에는 일본군을 상대로 기지촌이 형성되었다.²²⁾

나. 미군기지촌의 생성(1945-1950년)

두 번째 시기인 해방직후부터 한국전쟁 전까지의 미군정시기는 미국식의 새로운 매춘문화를 인식하는 시기였다. 군정으로 시작된 미군의 주둔으로 전국 곳곳에 미군기지가 생겼고, 미군들에게 군대매춘을 통해 휴양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미군관료들에 의해 급속도로 기지촌이 형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예전에 일본군기지촌이었던 지역도 미군기지촌으로 적극 이용되었다. 기지촌에는 빈곤 때문에 다른 생존수단을 찾고 있는 많은 한국여성들이 유입되었으며, 그 주변에 미군과 기지

21. 새움터, 한국의 기지촌, 새움터 자료집(1997), 10쪽.

22. 박종성, 한국의 태춘, 인간사랑(1994), 65쪽.

존여성들에 의존하여 생계를 꾸려나가려는 많은 한국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다. 미군기지촌의 확산(한국전쟁부터 1960년대 말까지)

이 시기는 기지촌대촌문화가 정착되고 확산되는 시기이다. 한국전쟁이후 미국은 한반도 전역의 주요 도시마다 주력부대들을 진주시켰고, 따라서 전국의 곳곳에 미군기지촌이 형성되었다. 미국정부의 원조와 함께 기지촌에서 벌어들이는 외화는 한국경제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 당시 기지촌여성들이 벌어들이는 외화는 가난한 기지촌여성들의 가족의 생계를 유지시켰을 뿐만 아니라, 미군과 결혼해서 미국으로 이주한 여성들에 의해 미국으로 초청된 가족들은 미국이민자들의 1세대가 되었다.

라. 기지촌에 대한 한국정부의 통제(1970년대 초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1971년 미군당국은 한국정부에 기지촌정화사업을 요구하였다. 마침 한국 정부는 미군감군 정책과 관련해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다. 1960년대 말부터 미군철수설이 흘러나오다가 '닉슨독트린'이 발표되자 1960년대 말에는 약 6만2천명이었던 미군이 1971년에 2만 여명이 철수하여 4만5천 여명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다. 박정희정권은 미군당국의 요구를 즉각 받아들여 그전까지는 보사부에서 개인병원에 의뢰하거나 미군들에 의해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져왔던 성병진료를 매주 실시하도록 하고 전국의 기지촌에 성병진료소를 세웠다.

한국 정부는 미군과 협력 하여 BCCUC (기지촌 정화를 위한 외무부 시행 기획)을 설립했다. BCCUC에서는 미군의 협조를 받아 기지촌의 환경을 정비하고 도로를 건설하였으며, 기지촌의 대촌여성들에게 미군들을 상대할 때의 에티켓과 행동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들을 실시했다.²³⁾ 또한 한국정

23 마이카 요셉 테일러,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한국 내 미정부 기구의 활동 방향 연구,

부는 BCCUC에 성병진료소와 낙점자수용소를 짓도록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직접적으로 기지촌여성에 대한 성병관리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모두 미군들의 편의와 건강을 위한 사업이었을 뿐 기지촌여성들의 환경과 생활은 전혀 변함이 없었다. 그리고 한국정부가 기지촌매춘에 깊숙이 개입하고 직접적이고 집중적으로 관리와 단속을 실시하게 되면서 기지촌매춘은 공창의 성격을 띄게 되었다.

마. 기지촌산업형매춘(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

다섯 번째 시기인 1980년대 후반 이후의 가장 큰 특징은 기지촌에 '전통형 매춘'과 새로운 '산업형 매춘'이 혼재하게 된 점이다.

해방 후 1970년대 이전까지 한국은 산업화과정에서 급속히 도시화되면서 농촌이 해체되는 변화를 겪는다. 이 과정에서 농어촌사회에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많은 여성들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또는 동생들의 학비를 벌기 위해서 무과정 상경을 하였고, 역전에서부터 인신매매조직에 걸려들면서 매춘을 하게되는 것이 1970년대 초까지의 일반적인 모습이였다. 이렇게 절대적 빈곤 때문에 고향을 떠나 일자리를 찾으러 서울이나 도시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미군기지촌이나 특정지역으로 유입되어 집단을 이루며 포주와 연결되어 행해지는 매춘을 '전통형 매춘'이라고 한다.

그런데 1970년대에 들어 한국경제의 산업화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적 고용정책으로 여성노동력이 비공식적 노동부문 등에 제한되어 있는 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채, 접객서비스업 부문의 여성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새롭게 창출되었다. 경제구조의 불균등 발전과 상관없이 접객서비스업이 비대화되고 새로운 직종인 호스텔스, 맛사지점, 안마사, 면도사 등에 여성이 대거 고용되면서 신종 매매춘이 늘어나게 된다.

기지촌에는 80년대 후반이 되어야 비로소 이러한 '산업형 매춘'이 나타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석사학위(2000), 22쪽.

나게 된 것은 정부가 미군기지와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기지주변을 강력한 개발규제조치로 묶어놓았었고, 기지촌이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공창 지역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이다.

산업형 매춘업소들은 기지촌의 상황을 적절하게 이용하였다. 미국의 문화를 상품화하여 젊은이들을 기지촌을 끌어들이었고, 한국정부에 의해서 기지촌에 제공되는 특혜중 하나인 무자료술을 암거래하였다. 정부의 단속을 피해 한국남자손님이 늘어난 것도 이 시기의 변화이다. 또한 개발규제가 풀리면서 야에 관광특구로 만들어서 기지촌을 향락도시로 발전시키려는 움직임도 시작되었다.

바. 외국인여성 성매매(1990년대 중반이후)

여섯 번째 시기는 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외국인여성들에 대한 성매매로 시작된다. 필리핀여성들로 시작된 외국인 여성들에 대한 성매매는 기지촌업주들의 모임인 한국특수관광업협회의 주도로 한국정부의 승인 하에 이루어졌다. 외국인여성들에 대한 성매매는 한국정부와 미국정부, 그리고 기지촌의 포주들에게 모두 큰 이익을 주는 정책이었다.

1992년 윤금이씨 살해사건은 한국국민들에게 미군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반미감정을 일으켰다. 그러나 그 후로도 기지촌여성들에 대한 살해사건이 계속 발생하였고, 그 때마다 사회적 이슈가 되어 반미감정은 점점 심화되었다. 이러한 반미감정에 미군관료들은 당황했고, 미군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느꼈다. 이것은 미군들에게 안전한 유흥지역을 제공할 것을 미국정부로부터 계속 요구받아왔던 한국정부로서도 반감지 않은 상황이었다. 한편, 90년대 초부터 급격하게 기지촌의 경기가 식으면서 한국여성들이 기지촌으로의 유입을 꺼리게 되었고, 따라서 포주들은 매춘으로 인한 이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3자에게 외국인여성의 성매매는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이었다. 배타적인 민족감정이 강한 한국인들은 같은 미군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한국여성인가 외국여성인가에 따라 매우 다른 반응을 보이곤 한다. 또한 기지촌으로 유입된 외국인여성들은 한국보다 가난한 국가에서 유입되었기 때문에 한국여성들보다 적은 급여를 줄 수 있고, 도움을 청할 가족과 친구도 없는 외국이어서 포주의 억압에 대항할 힘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통제가 훨씬 쉬웠다.

이렇게 성매매되는 여성들은 처음에는 기지촌 내의 업소에서만 종사하였다. 그러나 기지촌을 찾는 한국남성 손님들로부터 새로운 수요가 생겨났고, 이러한 외국인여성에 대한 한국남성의 선호는 외국인여성들이 성매매되는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시켰다. 또한 백인여성에 대한 한국남성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러시아계의 여성들이 많이 성매매되어 한국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3. 기지촌의 현상황 - 경기도를 중심으로²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지촌여성들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신뢰할만한 통계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략 지난 40여년 간 기지촌매춘여성의 총인구를 25만에서 30만 명으로 추측하며, 기지촌의 경기가 가장 활발했던 1960년대 중반, 대략 3만 명의 기지촌매춘여성이 있었고 80년대 초에 이르러 2만 명 선으로 감소한 후 계속 감소하다가 1990년대 중반 외국인 여성들을 성매매하면서 다시 급반등하는 추세에 있다.²⁵⁾

지금까지 전국의 기지촌을 대상으로 한 기지촌과 기지촌여성에 대한 연구조사는 전혀 실시되지 못했다. 다만 1999년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서 서울

24. 새움터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도내 기지촌지역 매춘여성 실태조사 및 정책대안 연구, 경기도(1999), 5쪽.

25. 새움터(1997), 7쪽.

터와 경기여성단체연합에서 경기도지역의 기지촌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조사가 유일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휴전선의 접경지역이라는 특성과 서울을 둘러싸고 있다는 지형적 중요성으로 인해서 미군기지가 집중해서 분포되어 있으며, 따라서 기지촌과 기지촌 여성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 경기도내의 기지촌 지역은 크게 동두천시와 평택시, 의정부시, 파주시에 위치하고 있다. 1999년도에 이 기지촌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기지촌 여성은 내국인 1,579명, 외국인 835명 등 총 2,414명이다. 그러나, 이 수치는 클럽 등 비교적 공개적인 형태의 성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주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조사자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가능한 여성들만의 숫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1980년대 이후 주한미군이 점차 감소하고 기지촌의 경제가 침체되면서 기지촌은 계속 축소되어 왔지만, 1997년부터 외국인 여성들이 기지촌으로 유입되고, 동두천과 평택시 기지촌이 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다시 기지촌의 성산업은 번창하게 되었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IMF 경제위기에 따른 대량실업과 여성우선책으로 인한 여성가장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실직 여성들이 기지촌으로 유입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내의 기지촌들은 그 지역마다 각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지촌의 대표적인 예는 동두천시 보산동과 평택시 신장동의 기지촌이다.

우선, 동두천 기지촌의 경우에는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으면서도 전통적인 모습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지역이다. 윤금미, 이기순, 신차금, 이정숙씨 살해사건 등 사회적으로 알려진 미군범죄 외에도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으나, 살해사건을 제외하고는 거의 신고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평택시 신장동 지역의 기지촌의 경우, 1990년대 들어 그 규모가 계속 커져가는 산업화된 기지촌의 대표적인 형태이다. 기존의 전통적인 기지촌의 형태를 모두 정비해서 관광특구로 지정되었으나, 동두천과 마찬가지로 외국

인 관광지는 거의 눈에 띄지 않으며 미군과 한국남성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지역은 실직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유입되는 여성들이 많은 지역이기도 하다.

요즘 기지촌에는 한국남성들이 부쩍 늘었다. 단속기간을 제외하고는 한국남성들이 자유롭게 기지촌 업소에 드나들 수 되었으며, 기지촌의 한국인 남성손님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현상은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동두천시 보산동과 평택시 신장동에서 가장 심각했지만, 안정리와 같은 전통적인 기지촌도 단속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한국남자를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

한국남성들이 기지촌의 클럽을 찾는 이유는 기지촌에서는 변세주를 볼기 때문에 술값이 싸다는 점과, 무엇보다도 외국인 매춘여성들을 쉽게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남성손님들은 외국인여성들을 매우 선호하고 있다. 특히 같은 아시아권의 필리핀여성들보다 러시아여성들을 더 선호하고 있어서 최근 2년 사이 기지촌에는 러시아여성들이 급속도로 증가되었다. 이것은 백인에 대한 인종주의와 남성우월주의가 작용하는 것으로서, 한국인남성손님들은 “매춘행위를 통해 백인여성을 소유한다”고 느끼며, 이것은 동시에 남성으로서의 능력을 나타내며 특히 “백인남성”에 대한 상한 자존심을 회복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또한, 기지촌 인근 지역에 많은 유흥업소들이 생기면서, 기지촌의 피해적인 서구의 하위문화가 주변 지역으로 폭넓게 확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기지촌주변이 개발되면서 예전처럼 “주변이 미군 기지와 논밭으로 둘러싸인 기지촌”은 거의 사라지고, 기지촌과 그 인근 지역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면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4. 기지촌여성과 아동의 삶

가. 기지촌여성들의 생활-빛의 굴레

기지촌여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빛의 굴레는 기지촌여성들의 노력만으로 벗어나기가 어렵다. 기지촌여성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온갖 것들이 모두 빛으로 제산되곤 한다. 포주가 여성들을 사오면서 직업소개소에 내는 소개비-일반적으로 직업소개소나 인신매매범들은 포주로부터 성인여성은 300만원의 소개비를 받고, 미성년자는 500만원정도의 소개비를 받는다.-도 빛으로 제산되며, 포주가 제공한 매춘을 위한 방의 선불 방세도, 업소에서 입을 옷과 방의 가구들도, 낙태비용도, 몸이 아파서 쉬는 날에 대한 벌금도, 모두 빛으로 제산된다. 소개비와 방값 등으로 처음부터 적어도 500만원 이상의 빚을 지고 시작하게 되는 매춘업소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여성들의 수입만으로 빚을 갚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표면상의 월급과 실제받는 월급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탈매춘을 시도할 때,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빛의 굴레이다. 대부분 업소에서는 여성들로부터 차용증을 받아놓고, 다른 여성들에게 보증을 서도록 강요한다. 만약 여성들이 빚을 갚지 않고 도망치는 경우, 포주들은 이 여성들을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은 포주들을 대신해서 이 여성들을 찾아준다. 물론 현행 윤락행위등방지법의 제20조는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은 무효”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그 상대자가 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내지 윤락행위의 강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이에 협력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매춘여성들의 빛이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무관계라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효성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나. 기지촌의 외국인매춘여성들

현재 전국적으로 기지촌의 매춘업소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여성들

이 성매매되고 있다. 이 여성들은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볼리비아, 페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연변 등으로부터 1996년부터 본격적으로 유입되었다. 그 중 대부분이 필리핀과 러시아에서 성매매되는 여성들이다.

필리핀 여성들의 경우에는, 필리핀 현지에서 브로커에 의해 모집되어 한 국내의 기지촌으로 유입되었는데, 대부분이 경기도 지역의 기지촌으로 유입되었다. 러시아 여성들의 경우 1998년부터 한국으로의 유입이 급증하고 있다. 앞서서도 살펴보았듯이, 러시아여성들이 급증하는 것은 기지촌을 찾는 한국인남성손님들이 선호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현상은 관광 자원의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아시아 각국 정부의 지원과 국민을 통해 성산업이 점차 규모를 확장하고 있으며, 최근 아시아를 강타한 경제 위기와 점차 심화되는 국가 간의 빈부 격차가 국가 간의 여성매매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확산되고 있다. 극심한 빈곤과 실업으로 해외이주 노동을 원하는 동남 아시아 각 국의 여성들은 한국, 일본 등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로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다. 국가 정책적인 장려와 값싼 노동력에 대한 수요에 의해 촉진되고 있는 노동력의 이주는, 여성 인신매매알선자들이 활개를 치면서 더욱 부채질되고 있다. 이 여성들은 한국의 매춘업소로 유입된 후 매춘 강요, 확대 갈취, 폭행, 감금 등의 학대행위로 인해 고통받고 있지만 도움을 청할 곳 없는 외국인이라서 참고 견딜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외국인여성들은 계약 내용과 다른 노동이나 성적 서비스를 강요당하더라도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 일을 그만두려면 3,000~5,000달러의 계약 위반료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매춘을 강요받게 되는 경우 이 여성들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매니저를 통해서 다른 클럽으로 옮기거나 도망을 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나, 업주가 어권과 계약서를 가지고 있고 여성들 대부분이 클럽 안에 있는 방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도망을 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설사 도망친다 하더라도 바로 불법 체류자가 되고, 한국 정부는 물론 필리핀 정부로부터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상황에 빠질 뿐이다.

다. 혼혈아동

기지촌여성과 미군사이의 성관계의 결과로서 1945년 미군의 주둔 이후 많은 혼혈아동들이 태어났다.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혼혈인들은 특별한 낙인이 찍히는 계층이었다. 혼혈인들은 피부색과 어머니의 직업으로 인해 편견과 차별의 고통을 당해왔다.

대부분의 혼혈아동들이 가난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빈곤에 고통을 겪는다. 학교에 들어가면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게 되고, 결국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 교육을 포기하게 된다. 혼혈아동의 중·고등학교 중퇴율이 전체 평균의 7배에 달한다. 학교교육을 포기함으로써 혼혈인들은 교육이나 직업훈련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이것은 이후에 성인이 된 후 취업을 하려고 할 때 피부색에 대한 편견과 함께 커다란 장애가 된다. 피부색에 대한 편견은 혼혈인이 택할수 있는 직업을 연에 계통이나 단순기능직으로 한정시키고 있다. 뿌리깊은 사회적 편견이 혼혈인들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가로막고 있다. 결국 가난하게 태어난 혼혈 아동은 평생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출구를 찾지 못한다. 빈곤의 악순환이 혼혈인들을 옥죄고 있다. 결국 남성혼혈인은 범죄자가 되거나 여성혼혈인은 어머니처럼 때문에 종사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혼혈인들은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순수 혈통이라는 민족적 가치에 손상을 입히는 존재로서 멸시의 대상이 되었으며, 민족 구성원으로 수용되기 보다는 격리되고 소외되어 왔다. 외국의 남성, 특히 평소 극단적인 권력 차이로 인해 한국의 남성들이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미군에 의해 손상된 한국(여성)의 순결성을 나타내는 코드로서 읽히지면서, 혼혈인은 한국사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존재였던 것이다. 부계 혈통을 중요시하는 가

부장제와 수 천년을 순수 혈통으로 살아왔다는 자부심이 혼혈인을 한국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기지촌을 외부로부터 차단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²⁶⁾

현재 한국에는 약 1,000여명의 혼혈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미군이 한국에 주둔한 이후에 50여 년 동안 태어난 혼혈인의 수는 훨씬 많지만, 대부분은 미국으로 이주하거나 입양되었다. 현재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혼혈인의 대부분이 미군 기지 인근의 기지촌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 역시 한국 사회의 뿌리깊은 순수 혈통에 대한 집착과 무관하지 않다.

대다수의 혼혈인들이 기지촌을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는 이유는 기지촌이 상대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지역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혼혈인들의 어머니가 기지촌에서 태춘 관련 직종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자녀 역시 기지촌을 벗어날 수 없는 현실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지촌에 만연한 군사 문화, 향락 문화가 혼혈아들에게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외국인 태춘여성의 자녀들이 태어나고 있는데, 이 아동들은 무국적자로서 교육은 물론이고 의료혜택도 받을 수 없는 국도로 소외된 상태에 놓여있다.

라. 미군범죄

기지촌여성들은 심각한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 미군손님이나 포주로부터 살해되거나 살해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강간이나 폭행을 당하기도 한다. 태춘여성들이 범죄피해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외국의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이다.

미국에서 태춘에 유입되는 여성의 평균연령은 14세이고, 적어도 75%의 태춘여성들은 성적으로 육체적으로 학대당하는 아동들이며, 90%이상의 태춘여성들이 포주의 통제 하에 있고, 70%의 태춘여성들이 손님이나 포주,

26. 새움터, 한국 기지촌의 혼혈인 실태와 해결방안, 자원활동가 교육자료집, 2000, 45쪽.

다른 남성들에 의해 강간을 당해왔고, 태춘여성들은 매주 한 번 물로 강간을 당하고 있다. 케냐나에서는 일반인들에 비해 태춘여성들의 사망률은 무려 40배 이상이다. 하물며 “불평등한 주둔군지위협정에 의해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에서 자유로운 미군들”을 상대해야 하는 기지촌여성들의 상황은 어떠하겠는가?

정부에 의한 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 1968년과 1998년 사이에 '한국인 보호'라는 명분 하에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45,183명의 미군들이 39,452건의 범죄를 일으켰다. 다시 말해서, 이 기간동안 미군들은 하루에 평균 2건의 범죄를 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⁷⁾ 강간, 절도, 그리고 육체적 학대와 같은 범죄는 기지촌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범죄 유형이다. 특히 강간과 성폭행과 같은 성적 범죄들은 피해자가 클럽 주인이나 가해자로부터의 보복을 두려워해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1950년, 한국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미국은 직접적인 개입을 위해 한국과 여러 가지 조약을 맺었다. 이것은 불공평한 것으로서 한국 시민에 대해 범죄행위를 일으킨 미군을 미국에게 인도하도록 하는 권한을 주었다. 따라서 미군이 일으킨 범죄 행위는 대부분 해결되지 않았으며 범죄자들 또한 처벌되지 않았다. 1953년 미국은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음으로써 한국전쟁 이후에도 한국에 미군이 주둔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으며 1967년에는 SOFA가 제정되었다. 표면적으로 SOFA는 그 전의 조약들에 비해 개선된 점이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도 SOFA는 미국에게 미군이 관재된 대부분의 범죄 사건들에 대한 사법권을 미국에게 주고 있었다.²⁸⁾

미군 범죄 행위에 대한 사법권과 관련하여 논쟁이 되고 있는 주 항목은 SOFA의 제22 항이다. 비록 미군이 1967년과 1987년 사이에 39,452건의 범죄행위(45,184명의 미군에 의해)를 저질렀지만 단지 234건만이 한국에서 제

27.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아직 끝나지 않은 아픔의 역사 미군범죄, 개마서원(1999), 17쪽.

28. 마이카 요셉 에틀러(2000), 15쪽.

판되었다.²⁹⁾ 1985년과 1990년 사이에 미군 범죄와 관련된 한국의 재판권은 1% 미만이었으며, 보다 최근의 자료인 1998년의 자료에 의하면 미군 범죄에 대한 한국의 재판권은 불과 3.9% 밖에 되지 않았다. 1991년에 비록 SOFA가 개정되었지만 미국은 한국과 미국의 본질적인 불평등은 시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증명되고 있다.³⁰⁾

5. 기지촌여성운동

가. 자치회³¹⁾

사회적 무관심과 멸시 속에서 기지촌여성들은 스스로를 보호해야 했고, 기지촌여성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1970년대 기지촌마다 자치회가 결성되자 이러한 활동은 더욱 활발해 졌다.

한국정부는 기지촌여성들을 효과적인 통제하기 위하여 기지촌에 자치회를 구성하고 자치회의 활동을 후원하였다. 자치회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기지촌여성통제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기지촌여성들을 착취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치회는 그 임원을 기지촌여성들이 담당하면서 필연적으로 기지촌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재화를 지원하는 활동을 벌이게 되었다.

대부분의 자치회는 미군범죄와 포주들의 횡포에 맞서서 기지촌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미군범죄가 발생하면 목격자를 만나고 범인을 찾아내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경찰과 정부·재판부에 합의하였다. 포주들의 착취가 심해지면 기지촌여성들을 모아서 급여를 올리기 위한 생존투쟁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몇몇 자치회에서는 부지적 차원의 활동을 벌

29. 윤동본부(1999), 17쪽.

30. 윤동본부(1999), 25쪽.

31. 새움터자료집(1997), 22쪽

이기도 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동두천의 자치회에서 80년대 진행했던 “증병사업”이다. 자치회에서는 역시 기지촌여성들이었던 임원과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해서 일년 내내 클럽과 기지촌여성들로부터 빈병을 수집하였다. 이렇게 빈병을 수집하면서 자치회는 기지촌여성들 개개인의 상황과 문제를 파악할 수 있었다. 빈 병을 판 돈으로 쌀이 떨어진 여성, 아픈 여성, 연탄이 떨어진 여성, 기지촌에서 벗어나고 싶은 여성들을 지원하였다.

나. 두레방

두레방은 사회운동세력이 기지촌여성들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최초의 단체라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두레방은 1986년 의정부기지촌에서 개원하였다. 기지촌여성들의 인권문제에 관심이 있었던 문해팀씨와 매촌여성문제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던 유복남씨가 1986년 3월 의정부시 가능동에 두레방을 개원하였다. 이것은 어떠한 사회운동도 있을 수 없었던 기지촌에 귀중한 여성운동의 씨앗이 뿌려지는 순간이었다.

두레방은 개원 후 80년대 말까지 기지촌여성들의 일상적인 문제들을 파악하고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사회에 알리고, 문제해결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시도하였다. 기지촌 여성들의 일상 문제를 이해하고 그 해결을 시도하는 방안으로 상담과 교육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개인상담, 집단상담, 의료상담, 방문상담 등의 상담사업과 영어교실, 요리교실, 문화강좌 등의 교육사업을 실시하였다. 두레방은 기지촌여성들이 억압된 상태에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인신매매 과정에서 겪은 폭력과 매매춘업소에서 착취당해온 경험을 극복할 뿐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억압과 충격의 연속이었던 어린시절의 상처 또한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 두레방의 상담자들은 기지촌여성들의 이야기를 항상 경청하고 용기를 주면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1989년에는 최초의 매춘여성전업프로그램인 두레방항사업이 시작

되었다. 두레방은 기지촌여성들의 전업과 자립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기지촌여성들에게 전업에 대한 희망을 주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춘여성의 사회복귀프로그램을 경제적 자립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두레방은 대학생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인 기지촌활동을 시작하였고, 대학생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였다. 대학생들은 두레방을 방문하여 활동하면서 기지촌여성들의 실태를 경험하게 되었고, 이들은 기지촌여성운동의 씨앗이 되었다.

다. 새움터

새움터는 기지촌여성들과 함께 기지촌여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본격적인 기지촌여성운동단체로서 출발하였다. 1996년 동두천에 처음 문을 열었으며, 처음부터 한국정부와는 철저하게 독립적인 위치를 유지하였다. 새움터의 운영위원회와 실무진은 그동안 활동해 왔던 기지촌여성운동가들과 관련여성운동가들, 그리고 기지촌여성들로 구성되어 있다.

새움터는 국내외 여성단체들과 연대하여 피해자들의 상황을 알리고,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기지촌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현재 동두천, 문산, 의정부, 평택, 군산 기지촌의 기지촌여성들과 아동들에게 자립을 위한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공동작업장, 상담, 의료지원, 법률지원, 보육지원, 기술교육 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종합적 지원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다.

라. 기지촌여성과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하면 매춘을 알선하고 강요하는 중간 매개자와 남성 고객뿐만 아니라 매춘여성도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매춘여성을 범죄자로 규정함으로써 매춘여성에 대한 학대행위를 오히려 용인하

는 결과를 낳고 있다. 매춘여성들은 포주나 남자손님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해도 신고할 수가 없다. 신고할 경우 자신이 매춘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처벌받기 때문이다. 즉 매춘여성을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매춘여성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음으로써 이들에 대한 학대행위를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기지촌 여성들은 군 대대춘의 피해자로 규정하고 현행법과 제도를 그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0년 9월 19일에 발생한 군산매춘업소화재사건을 계기로 여성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매춘여성들의 심각한 상황에 공분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다. 그 중에서도 한국여성단체연합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칭)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의 제정은 기지촌여성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활동이다.

기지촌여성과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주둔군지위협정도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을 중심으로 요구하고 있는 여성계의 개정안은 다음과 같으며 이러한 내용으로 여성계는 2000년 11월에 국회의원을 하였다.

●SOFA 개정에 신설되어야 할 여성인권보호 조항

1. 여성과 아동의 인권 보호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 1) 미군과 그 군속에 대한 성인지적 교육과 인권교육을 의무화한다.
- 2) 주둔지역 여성과 아동에 대한 미군의 모든 폭력을 금지시키고 이들에 대한 범죄는 이들이 사회적 약자임을 고려해 양국의 처벌조항 중 보다 엄격한 것을 적용하고 피해자 배상에서도 양국의 배상관례 중 피해자에게 보다 유리한 것을 따르도록 규정한다.
- 3) 성범죄 피해자가 여성이나 아동일 경우 전담 여성수사관에게 피해자 진술을 할 권리와 제 3의 장소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음도 명시한다.

2. 혼혈아동의 친부 확인을 적극적으로 주선하고 친부에게 양육비를 부담하게 하는 조치를 신설해야 한다. 미군이 친부임이 확인된 아동들에 대한 교육과 직업훈련, 미국 입국시의 지원책도 규정되어야 한다.
 - 1) 현재 한국에 1,000여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혼혈아동은 혼혈아이자 태춘여성의 자녀라는 이유로 사회적인 낙인과 편견을 받고 있으며, 편견과 교육 부족으로 인해 고용 등의 차별을 받고 있다.
 - 2) 입법례로서 미-독협정(The US-German Agreement)과 교환각서(Exchange of Notes)에 있는 '부양요구(maintenance claim),(1956. 4.18-1959. 8. 3)를 참조해야 할 것이다.
3. 미군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에 대한 지원방안을 신설해야 한다.
 - 1)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의 안전을 위해 미군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성병/에이즈 검사를 실시하는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
 - 2) 기지 반환 및 접수시 기지전용 계획에 기지촌 여성과 혼혈아동 지원 대책을 포함시킨다.
 - 3) 미군을 대상으로 매춘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점차적으로 매춘금지를 명문화한다.
4. 미군의 주둔국 배치 직전과 직후에 주둔지역의 관습과 법(특히 성폭력 특별법), 남녀관계(gender relation), 지역정서와 문화 등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5.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관련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 1) 미군주둔과 군사훈련으로 인한 모성 및 주민의 건강피해와,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관련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 2) 미군주둔과 작전수행에 따른 재반 환경오염정도와 이것이 모성 및 주민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오염피해에

대한 미군당국의 배상의무, 오염정화 및 원상회복 책임 조항을 신설하도록 해야한다.

6. 미군차량의 보험가입 의무화 조항을 신설해야한다.

- 1) 어린이와 주민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는 미군차량에 의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지급과 손해 배상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미군차량을 보험에 가입시키는 규정과 한국에서 운전면허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야한다.

7. 과다한 방위비를 분담시키는 [주둔경비특별협정(1991)]을 폐지해야 한다.

- 1) 이 협정은 합중국이 합중국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한 본 협정 제5조 제1항을 위배하고 있다는 점에서 폐지되어야 한다.
- 2) 선진국 방위비 분담비율(일본은 76%, 독일은 33%, 나토회원국은 25%)에 비해 경제력이 약한 한국정부가 과도하게 주한미군 주둔비용(주한미군주둔비용의 78%)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폐지되어야 한다.
- 3) 사회복지망이 취약한 한국상황에서 과도한 군사비를 여성과 노약자의 생존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복지비와 사회안전망 비용으로 전환해야 한다.

8. 미군기지 내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노동권과 인권보호를 위한 조항을 신설해야한다.

- 1) 최소한 한국의 여성노동관련 법(남녀고용평등법 등)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일상에서 평화 만들기

-여성이 만드는 평화와 인권-

김숙임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공동대표, 평화교육위원장)

당신은 평화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 정다운 언어로 평화운동을 말 할 수 있는가? 그것은 평화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평화로운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면 평화를 위한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자신이 미소짓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미소짓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면 결코 평화운동에 기여할 수 없다.³²⁾

나의 마음은 평화로운가

나와의 평화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자신과의 불화는 없는가, 가까운 사람과 의사소통이 되는가, 나는 충분히 안전한가, 자신과 주변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가, 자신이 생각할 때 나는 가치있는 존재인가, 내 안에 평화를 느끼는가, 자신 안에 평화의 부재는 없는가.

내가 평화로운 심성을 갖고 있지 못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맺지 못하여, 평화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평화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누구를 위한 평화인가, 함께 가는 평화, 쉽게 하는 평화, 서로를 보듬고 축복하

32) 2000. 탁남한 저, 서보경 역, 『이른 아침 나를 기억하라』, 지혜의 나무

는 평화, 나를 평화롭게 하는 평화, 나를 필요로 하는 평화,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는 평화, 차이를 넘어... 너에게 다가갈 수 있는 평화, 서로 다룰 수 있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수용하는 평화, 이러한 평화가 기본이 되는 평화운동을 할 수 있을까?

평화운동은 이제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간 평화운동은 평화운동의 주요변수인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 주로 운동을 전개해왔고 정치적 변수에 상당히 좌우되는 경향이 많았다. 일정 정도 정치적 변수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평화의제들을 일정한 정치적, 제도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야겠지만, 기본 변수는 정치적인 변수를 넘어 대중의 일상 삶 속 깊이 개인의 구체적인 이해관계 가운데로 들어가야 한다. 정치적 변수에 기반한 평화운동은 소수의 정치지도자의 결단과 이론적 전문가에 의해 주도됨으로써 대중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어렵게 한다.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과 역할이 없기 때문이다.

개인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내면과 일상, 구조적인 측면에서 동시에 접근하여야 한다. 기존의 고전적인 운동방식(정치적 변수에 따른 운동과제 설정)을 넘어서 평화주의적 시각에서 개인의 일상과 사회통합을 보아야 한다. 국가나 민족, 세계의 평화로서 거대담론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자신의 생활에서 자신의 마음 속에서 우선 출발하여야 평화운동이 인간을 위한 현실적인 운동이 될 수 있다. 자기 자신과 구체적인 대상을 위한, 그들을 그 지역을 위해 가시적으로 성과나 혜택이 보이는 그러한 운동이 되어야 한다. 사람을 위한 평화운동, 사람이 하는 평화운동, 보다 많은 사람이 하는, 개인에서 조직, 지역사회, 국가, 세계의 반평화를 통찰해서 보는 평화의 눈을 키워야 한다.

우리 삶 속에 평화가 멀리 있는 이유

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을 물으면 "평화"라고 대답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개인의 심리적 차원, 가족의 차원, 제도와 국가의 차원 등에서, 그러나 평화를 구체적으로 느껴거나 표현하는대는 무척 곤혹스러워 한다. 너무나 추상적이고 거창하고 정치적인 것 같아서 거리감을 느낀다고 말한다. 그래서 자신이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없다고 한다. 이것이 우리 평화의 현 주소이다. 무엇이 우리들의 생각에서 평화를 멀리, 또 어렵게, 내 문제가 아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으로 만드는가.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다음 몇 가지 지점에서 평화가 우리에게 멀리 있는 원인을 찾아 볼까 한다.

개인의 인권에서 출발하지 않는 평화 그리고 안보

일상에서 우리가 무심코 쓰는 말:

오늘은 내가 출제, 누가 총대를 댈 것인가, 남자는 군대를 갔다와야 사람이 된다. 풀여줬더니 군기(軍紀)가 빠졌구만. 군기 잡아, 군번이 어떻게 되나. 지원 자격, 확인사살 ...이러한 일상화된 군사용어 속에서 우리는 일상의 많은 문제를 군대식으로 해결하려는 의식이 담겨있음을 우리 스스로에게 발견할 수 있다.

자신이 태어난 이 땅에서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느끼며 살고 있는가? 한 국가사회는(북한도 마땅가지) 전국이 군사시설로 가득찬 거대한 군사기지, 병영국가이다. 우리가 조금만 눈여겨보면 모든 도처에서 군사시설의 흔적을 볼 수 있고 군사시설을 중심으로 한반도 군사지도를 그릴 수 있다. 그리고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보면 군사기지 주변에서 벌어지는 태대준 문화뿐만 아니라 군대폭력, 군의문사, 미군주둔으로 인한 주한미군범죄, 무기비리, 병

33) 군기(軍紀):군대를 통제하기 위한 규율이나 풍기, 풍아세국어사전, 동아출판사 1996년

역비리, 군가산점과 병역제도의 모순, 대인지뢰피해자 등이 보인다. 나아가 오랜 군사권력의 통치로 인한 군사주의문화와 폐해에 너무나 둔감한 대중과 여성의 삶을 볼 수 있다.

오늘날 우리에게 북한을 주적으로 지목하여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 전쟁의 위기에 대한 긴장감 조성, 또 이를 대비한 유사시 긴급수용의 자세를 요구(민방위훈련), 국가방어의 신성화, 국민개병제, 30년 이상의 군사통치가 가능했던 토대와 그 이념적 기반, 거기에 따른 문화 형성 등 한 사회의 군사화 과정은 군대문화의 시민사회로의 접목인 군사문화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이미 사람들의 내면과 일상에 하나의 이념이나 가치체제로 자리잡은 또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 군사주의는 전쟁을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사회활동으로 보이게 하는 가치체제나 전쟁, 전쟁준비와 관련한 사회적 행동의 총합으로 이해되고 있다. 34)

재클린 폭은 현대의 민족이나 우방들 또는 집단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명분 하에 갈등의 해결을 위하여 집단적 폭력을 사용하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이념의 줄기가 군사주의라고 규정했다. 갈등 및 분쟁의 해결을 위해 평화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힘의 논리에 초점이 가 있는 군사주의는 남자는 강해야 하며 힘의 논리에 적응하여 성공해야한다는 가부장적인 남성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남성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징병제에 의해 군대에 복무를 해야하고 그의 가족들 또한 군대폭력의 피해를 우려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제대하는 시기를 기다려야 한다. 현재의 징병제도는 국제정세와 남북관계의 변화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병역인구가 과잉현상이 되어도 합리적으로 병역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 여전히 국방의무는 신성한 국민의 의무이고 국방부는 어떤 문제도 제기할 수 없는 성역으로 군림하고 있다. 병력수급의

34) 권인숙, "우리를 삶 속의 군사주의", 여성평화아카데미2000,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108-109쪽

모순 뿐만 아니라 변화된 경제와 인권의 자유가 무시된 징병제, 군대내의 비민주적 비합리적인 풍토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가 국민들에게 확산되고 있다.³⁵⁾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목숨을 걸어야 하고 사람을 죽여야하는 징병제에 의한 사병근무는 제도적인 합리성의 관점을 넘어 도덕성에서도 문제제기를 받고 있다.³⁶⁾

여기서 우리는 인권을 위해 안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안보를 위해 개인의 인권이 철저히 무시당하는 모순을 볼 수 있다. 누구를 위한 안보인가? 인간의 인권을 위해 안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위에 군림하며 인간을 조작하는 안보는 너무나 역설적이다. 분단과 군사안보라는 이유만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일까? 개인에게 선택의 자유를 용납하지 않는 강압적인 징병

35) 김창수, "한국징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징병제와 군복무의 실태 및 대안 모색을 위한 워크샵 자료집 2001, 4-7쪽

그는 향후 병력규모를 남쪽 60만 상비병력규모로 남한의 30만 병력을 16만 직업군인과 14만 지원병으로 구성된 정예부대로 구성하는 방안과 함께 현재의 징집제를 지원제로 전환하여 직업군인제도와 모병제를 혼합하는 방식을 제기하였는데 장교와 하사관은 직업군인제, 사병은 모병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직업군인제는 군인으로 장기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은 지원에 의하여 복무를 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제도로 생활보장을 위한 보수의 지급과 함께 가치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 모병제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국가와의 계약으로 군벌, 신분별, 병과별 희망에 따라 지원하여 병역에 복무하는 제도라고 설명하였다.

36) *홍광욱, "대한민국 징병제의 또 하나의 폭력-군사제도와 징병제에 것발한 양심", 징병제와 군복무의 실태 및 대안모색을 위한 워크샵 자료집 2001, 24-26쪽

현재 '양심적 거부자'로 수감 중인 여호와의 증인 신도수는 현재 1400여명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특정한 종교적 신념이나 교리를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있고, 단지 종교적 교리로서가 아닌 그 교리가 폭력과 살상에 반대하는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분단상황인 한국에서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할 때 병역에 준하는 다른 의무가 적용되지 못하고 병역에 해당하는 징역을 살게 된다. 그 근거는 20세 이상의 남성이 누구나 지야 하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범죄에 준한다는 것이고 거부자들은 전과로 인해 평생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양심적 거부권은 종교인에만 국한되지 않고 만권이나 살상거부권을 주장하는 사람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001년4월1일 KBS 9시 저녁뉴스 방영

제도가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남성 당사자가 인권의 차원에서 저항하거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은 자신에 대한 정체성보다 국가에 대한 정체성에 비중이 더 크기 때문일까, 아니면 이러한 군사주의에 동의하는 것인가, 사회적응을 위한 자발적 자기 인권의 중지행위인가. 자기 정체성에 대한 포기인가 보류인가.

일상에서의 군사주의 현상은 획일적인 교육제도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청소년 사춘기의 예민한 시기이자 자기정체성을 향해 고민이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인 중학교 때부터 아이들에게는 획일적인 수업방식과 교과과목, 대입전망, 두발규제, 복장규제, 지시문화... 선택의 자유가 없다. 다양한 개성, 다양한 희망을 가진 아이들이 선택할 학교가 다양하지 않다. 오직 명령과 복종, 전체주의적 방식은 다양성과 인권, 자발성, 창의성을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학교에 자율이 아닌 규율과 규제의 군대식 문화가 답습되고 군사주의 문화로 운영되는 폐해를 답습하면서 계속 유지되는 것은 자율과 인권의식을 가진 독립적인 시민을 양산하지 못하는 교육철학의 빈곤, 교육제도의 근본적인 성찰의 문제와 함께 군사주의에 대한 인권의식의 부재가 아닐까.

그간 군사정권들은 국민들에게 전쟁가능성을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정서가 크게 흔들리지 않으니까 안보불감증까지 강조한 바가 있다.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군사비가 정부예산의 20%이상을 차지해도 그 지출내역과 쏟아지는 다양한 국방비리에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시민의식이 발휘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군사주의에서 과연 자유로운가, 6.25전쟁이후 군사안보가 정권안보의 논리로 사용되면서 냉전, 반공주의와 함께 결합하여 안보이데올로기가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군사주의 영역은 거대한 성역으로 아무도 이 논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자신의 돈과 귀중한 생명과 시간을 모두 바치면서 자신의 인권에 대해 발언하거나 보장받을 수 없다면 이미 제도적 군사주의는 일상에서 사람들의 내면에 '우리 안의 군사주의' '내 안의 군사

주의'로 확고히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결국 안보논리에 의해 국민의 일상
에 내면에 억압과 부자유, 불안과 긴장이 자리잡게 되었다면 바로 그 안보
에 의해 평화가 보장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의 안보는 군사적인 방법, 무기에 의한 힘에 의한 안보가 아니라
정부와 비정부의 외교능력, 갈등을 조정하는 협상과 중재 등의 능력과 기술
을 제고하여 평화에 의한 합리적인 안보, 인간을 위한 안보로 전환되어야
한다. 평화능력의 향상을 통해 폭력과 분쟁을 방지하고 해결해야 한다.

우리 안의 또 하나의 자율신경, 반공주의

군사주의와 함께 반공주의는 한국사회에서 국가권력의 핵심 이데올로기
의 역할을 오랫동안 수행하고 있으며 냉전, 국가안보이데올로기의 주요 기
반이기도 하다.

반공주의는 이제 단순히 북한공산주의에 대한 비판이나 거부가 아니고 한
국사회의 억압적이고 불평등한 질서를 정당화하고, 보호하고 그것을 재생산
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생체권력이 되어버렸다....외부적 이데올
로기의 차원을 넘어서.... 반공주의는 이미 한국사회 구성원들의 정신과 가
슴 속에 '한국적 정서'의 일부로 내면화되었으며 따라서 그것은 국가권력
못지 않은 또 하나의 권력인 것이다.³⁷⁾

권혁범 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반공주의는 폭에 대한 적대적 감정과 비난
을 사회구성원의 정신과 가슴속에 오랜 시간 내면화 과정을 통해 자동적으
로 특징한 정치 사회적 사고와 행위를 유발시키는 기제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을 '반공주의 회로판'이라고 표현했다. 따라서 특정한 자극이 주어지면
정해진 회로판에 따라 자동적으로 조건반사적 대응(예:수상-불순-좌익/좌경

37) 권혁범, "내 몸 속의 반공주의 회로와 권력", 우리 안의 파시즘, 삼인출판 2000.
61쪽

-원복-용공-간첩)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사상적 획일성, 단순성, 때타적 감시자적 태도, 굴종적 순응주의, 군사 동원주의 등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이다.³⁸⁾

반공법, 국가보안법, 반공표어 등을 통해 사람 들 사이에 불신과 긴장을 조장하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인간의 내면을 억압하고 위축시키고 진보적이고 도전적인 생각과 행위들을 탄압해 왔다. 내면화된 반공주의는 냉전문화의 축으로서 북한공산주의에 대한 거부만이 아닌 모든 비판적 세력의 저항을 봉쇄하고 길들였다. 모든 형태의 사회적 도전과 이탈을 두려워하는 사회적 심리가 한국인의 심성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³⁹⁾ 자신의 눈보다 타인의 눈을 끊임없이 의식하며 타인의 시선이 중심되는 삶을 살도록 강요당한 것이다.

반공주의적 냉전문화는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는 민주주의 사회와 시민형성에 치명적인 장애와 함께 사람을 적과 동지로 나누는 병리적 현상을 일으켜 비정상적인 사회를 만든다. 또한 유사시 물리적 충돌에 대한 호응성이 높은 위험성을 갖게 된다.⁴⁰⁾

나는 언젠가부터 태극기를 보면 태극마크가 음양의 조화가 아니라 레드와 블루의 대치, 남북의 대립, 대결을 느껴져 되었다. 순간 순간 내 의식 안에 뿌리깊은 체제이데올로기를 체감한다. 가장 큰 고민은 자기에게나 타인에게 정당하게 못하다는 것, 무언가를 항상 의식하고 있다는 것, 집단주의 사고를 강요받으면서도 공동체적이지 못하다는 것, 자신의 혼란이 우리 현대사의 단면이라는 것을 알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 내 긴장의, 정서적

38) 권혁범, "우리 몸 속의 반공주의 회로판 읽기", 여성평화아카데미 2000,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96쪽

39) 냉전(冷戰): (군사 행동에까지는 이르지 않지만) 서로 적대시하고 있는 국가간의 대립상태, 동아세국어사전, 동아출판사 1996년

40) 권혁범, "우리 몸 속의 반공주의 회로판 읽기", 여성평화아카데미2000,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104쪽

41) 위 자료 인용, 105쪽

불안의 뿌리를 찾는 일이다.

최근에 일어났던 송두율 교수의 북한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여부와 특정신문의 환런 기고에 대한 논란으로 일부언론과 정당의 색깔 공세가 이어졌다. 또 다시 불거진 색깔논쟁은 뿌리깊은 냉전문화에 힘입은 맥카시즘적라 수법이라고 볼 수 있다.

면이은 색깔공세로 참여연대 등 진보적 성향의 시민·사회단체에게 “시민운동의 의피로 사회주의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실체를 가리지 말라”며 전경련 산하 자유기업원과 한국경제연구원 등 일부단체들은 현 정부가 이들과 합세해 좌경화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면서 냉전에의 회귀를 기도하고 있다.(2001. 5.10 한겨레, 안수환 기자) 개혁을 주장해 온 시민단체들을 좌경집단으로 규정하고, 좌우익의 대립을 조장하여 제별개혁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이다. 가진 자들의 공격적인 방어기제로서 여전히 냉전반공이데올로기에 기초한 색깔론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장희 교수는 최근 한겨레신문(2001. 3. 30 일자) 기고에서 “아무리 훌륭한 대북정책으로 남북 간에 신뢰를 쌓아도 지난 50년 동안 우리 남한 내부에, 나아가 우리 의식 속에 잠재해 있는 냉전의식을 깨지 않는 한 대북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하며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에게 역사관과 세계관이 개혁될 수 있도록 평화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냉전문화가 지배하는 상황에서 이뤄진 정치적 합의나 선언은 군사적 변수나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쉽게 와해될 수 있다. 정말 향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냉전문화를 평화문화로 바뀌어나가는 일이다. 그것이 확인적, 폐쇄적, 배타적인 반공주의냉전문화에 길들여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줄 수 있는 대안이다. 인간에 대한 불신, 경제에서 벗어나 남을 지지하고 축복하는 문화로 갈 수 있도록, 또 나의 의식세계가 진정 자연스럽고 자유롭기 위한.

42) 맥카시즘(McCarthyism): 극단적인 반공주의 및 용공적인 언론·사상·정치활동에 대한 억압을 뜻하는 말, 동아새국어사전, 동아출판사 1996년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가 - 우리가 만든 집단주의, 관념주의

집단의 이해와 투쟁의 성과가 제일로 강조되는 권위적·남성적 집단 분위기에서, 여성이라는 소수 집단이 자기 문제를 발현하고 성차(性差)를 인정받으면서 여성으로서의 정체성도 함께 찾아나가는 활동이란 근본적으로 불가능했다는 거죠⁴³⁾

우리는 누구인가, 위계와 권위의 멘탈리티⁴⁴⁾를 가진... “우리는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를 많이 생각해야 한다” ... 권인숙씨는 80년대 시대상황에 청춘을 바친 세대를 중심으로 우리 시대의 집단적 멘탈리티의 문제를 제기한다.

식민지, 전쟁, 분단, 개발, 군부독재 등으로 점철된 현대사 속에서 우리 내부에 내재되어 있는 의식의 뿌리를 들여다 보면 체제유지를 위한 교육과 의무로 억압된, 표현과 행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 온 자신과 함께 독재타도, 계급, 민중, 역사, 민주주의, 통일, 민족이라는 거대담론, 이념적 당위에 몰두하며 기존의 모든 질서를 부정하고 맞서며 자기 자신까지 부정했던 자신이 동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체제에 대한 순응과 저항의 혼재된 삶이 동시대 동일인을 속에서 함께 있었음을.

시대적 상황의 전박성에 의해 일정한 대의만 공유된다면 집단내부의 권위주의적인 문화와 함께 갈 수 밖에 없었던, 그리하여 또다시 권위주의 집단문화를 답습하는... 결국 대안 세력으로 자처하는 사람들조차 한국사회의 과시증적 겉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근래 화두로 떠오른 ‘우리 안의 과시증’, ‘일상적 과시증’의 문제 제기는 정치적, 제도적 과시증의 극복만으로 한계가 있으며, 일상적 과시증 즉 우

43) 권인숙, 1999, ‘우리는 누구인가- 위계와 권위의 멘탈리티’, 『당대비평』 겨울호

44) 멘탈리티 mentality : 정신성, 심성, 지성, 심적 상태, 심리, 사고방식, 성향, 성격

리의 의식과 일상적 삶의 심층에 깊이 내면화되고 구조화된 규율권력의 극복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권력과의 싸움에 있어서 정치영역에서 일상적 삶의 영역으로 그 외연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⁴⁵⁾

진보적 이념이 삶의 뿌리에서 나온 것이 아닌 관념적이고 이분법적인 논리에 의해 생산된 시대적 경험에서 사실 우리 모두 자유롭지 못하다.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것이다. 지나친 이데올로기 중심이 현실과 세계, 역사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우리의 눈과 귀를 막았다는 것이다. 개인과 조직, 인간과 역사가 철저히 분리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분리적 관념적 사고는 이념은 진보적이나 삶은 보수적인 형태를 띄게 되는데 하나의 예로 여성을 동원대상으로 주변적인 역할을 맡게 하는 것이다. 군사적 권위주의 문화는 여성을 함께 가야 할 동반자라기 보다는 보조적인 존재라는 남성중심적이고 집단적인 위계문화를 낳았고 진보적인 남성조차도 이 관념과 과시즘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어떤 계층보다도 여성에게 가족하고 당당하게 집단적 담합이 잘 되어 있는 것을 일상에서 흔히 목격할 수 있다.

“한국인들은 들쭉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80년 당시 존 워렌 주한미군사령관의 말

지배와 피지배의 담론 즉 권력담론에 익숙한 우리는 탁월한 카리스마를 지닌 지도자를 동경하는 습관이 있다. 권위주의 통치에 너무도 익숙한 그래서 모든 하부집단, 운동단체까지도 권위주의문화에 젖어 있다. 한 사람의 주인을 위해 만인이 종이 되는 사회... 사람의 가치를 쉽게 대상화, 수단화시킨 반면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관계문화가 형성되지 못했다.

내가 우선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해야 한다는 성공, 출세, 일등, 일류주의 등의 권력담론이 내가 속한 조직이 다른 조직보다 더 유명해야 하고 강고

45) 임지현, “과시즘은 살아있다”, 『우리 안의 과시즘』, 삼인, 13쪽

해야 한다는 논리로 전개되는 경향이 있다. 모두 함께 나아가며 발전하는 연대정신을 깨고 다른 조직 위에 군림하려는 패권주의에 빠지게 된 것이다. 상대적 권보에 가려진 위계와 권위문화 또 한편의 내면화된 힘의 논리의 표출, 집단주의의 발로이다.

힘의 논리가 자기중심주의를 낳고 집단주의, 민족중심주의와 자국중심주의를 낳는다. '이상수의 동서횡단'(한겨레21, 4월26일 355호)에서 이상수는 "우리는 일본의 극우적 사고방식을 비판하면서 우리 자신의 똑같은 자국중심주의적 사고방식을 '민족주의'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하는데 익숙하다"라고 말한다. 최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과동, 히노마루·기미가요의 법제화 등 소수의 우익에 의해 극우로 치닫는 현상에 대해 도미니카 켄이치는 "헌법상으로 일본은 정치적 근대화를 달성했지만 단 한번도 밀로부터의 개혁이 성공한 경험이 없고 위로부터의 개혁만 있었기 때문에 시민혁명이나 시민사회의 단계를 거친 서구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서울대 김용덕교수는 '이는 결국 독자적인 자기판단을 할 수 있는 개인의 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이 성숙되지 않은 사회에선 리더십이 잘못돼도 저항보다는 모두 따라가는 양태로 나타난다.'고 말한다. (한겨레신문 2001년4월17일 21면 '적지만 강한 우익, 광기의 구심력' 김영희기자)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자율적인 인간이 형성되지 않을 때 올 수 있는 국가주의는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소수의 광기적이고 자폐적인 집단에 좌우되는 이유가 국민들의 자기정체성이 없다는데 있는 것이라니.....! 우리의 역사적인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유사한 측면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힘의 논리는 인간의 내면에 규율권력을 심어 인간을 억압하는 기제를 생산하고 맹종을 요구하며 민주주의의 형성을 방해한다. 힘의 논리로는 민주적 시민사회 발전은 불가능하다. 힘의 논리가 아닌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성숙한 인간과 인간의 자발적 연대를 지향해야 한다. 우리 내면에 스며들어 있는 반평화의 과시즘을 몰아내야 한다.

집단주의나 권นิยม주의, 즉 군사주의와 반공주의에 기반한 과시즘의 내면화된 결과로서 우리 내면의 과시즘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개인의 자유로운 정체성을 억압하고 왜곡시켜 더불어 사는 능력을 파괴시키는데 있다. 정상적인 사회는 한 개인이 한 사회에 대한 건강한 소속감을 가질 수 있고 그에 기반한 진정한 자존감, 자기실현이 가능한 사회를 말한다. 나아가 나와 다른 사람과 공존하며 살 수 있는, '나는 그간의 모든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로운가', '진정한 자기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진지하게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할 때이다.

평화를 위한 대안적 가치, 기술 훈련

우리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획일적인 군사주의, 인간의 가치보다 우선된 군사안보, 반공주의적 냉전문화, 우리 내면의 과시즘 등의 반평화를 넘을 수 있는 평화지향적 세계관을 어떻게 형성하고 내면화할 수 있는지가 우리의 과제이다. 우리가 흔히 겪는 조직생활의 위기는 우리 안의 공존의 철학이 부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평화적 공존 능력을 우리부터 향상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평화를 일상화, 생활화하기 위한 가치와 태도의 형성, 기술훈련 등이 다양하게 요청된다.

평화교육의 일상화

함께 존중하며 사는 평화문화의 형성을 위해 다양하고 전문적인 평화교육이 절실하다. "전쟁의 근원, 폭력문화의 근절을 위해 평화교육운동의 세계적 차원의 전개와 교육부의 평화교육의 의무적 실시, 지원"의 문제가 3차 헤이그평화회의의 또 하나의 핵심 아젠다였다.⁴⁵⁾ 그러나 한국사회에서는 최

45) 참조: 헤이그 평화회의 www.haguepeace.org

근 몇 년 동안 극소수의 평화단체에 의해만 평화교육이 이뤄져왔다. 평화교육의 부재 속에서 평화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긴 것도 아주 최근의 일이다. 제도적 정치적 변화만으로 될 수 없고 개개인의 세계관이 확장되지 않으면 어떠한 평화도 기대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성찰이 지금에서야 나오고 있는 것이다. 평화교육의 전문화, 즉 개인에서 구조적인 차원까지, 다양한 계층과 연령에 맞는 교육내용, 방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관용하기

라틴어 *tolerare*에서 온 톨레랑스, '견디다, 참다'를 뜻하는 말은 16세기 초에 처음 등장하여 18세기에는 하나의 가치로서 확립되었고, 그 정의는 오늘날까지 확대 발전되고 있다.⁴⁷⁾ 우리 말로 '관용'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우리말 사정에서는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톨레랑스한다는 것, 그것은 견디는 것입니다.....내가 동의하지 않는 상대방의 의견이나 생각을 바꿀 수도 있지만 그대로 용인하는 것을 말합니다."⁴⁸⁾ 필리프 사시에

관용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의 불완전성은 자연의 법칙이고 과오는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이다. 또한 인간은 전혀 동일한 정신유형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견해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⁴⁹⁾

관용할 수 있는 조건은 틀 이상의 대상들 사이의 갈등에서, 타인의 자유와 권리의 확대에 기여하되 불관용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관용은 힘이 없어 밀려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폭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

47) 필리프 사시에 저, 홍세화 역, 『왜 톨레랑스인가』, 상형문자, 29-33쪽

48) 위의 글, 16쪽

49) 위의 글, 67-68쪽 79쪽

가 불관용할 수 있는 힘이 있으나 관용하는 것이다. 즉 자비를 베풀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하거나 싫지만 싫어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행위의 자발적 중지로서 상대방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다.⁵⁰⁾

관용은 비폭력 합리주의 원칙에 따라 개인의 갈등에서 국제적 갈등까지 적용할 수 있는 윤리적인 전략이며 기본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관용의 한계로는 “언제 어디까지 용서할 것인가?”하는 문제로서 팔레랑스를 보존하기 위해 “어느 선에서 건디는 것을 멈추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다시 우리를 가치의 문제에 직면하게 만든다. 무제한적인 용서라는 강자의, 가진 자의 논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불관용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용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인 것이다. 정당치 못한 것, 불법, 부도덕, 전쟁, 폭력 등이 불관용의 사례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관용을 실천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자기 이익을 무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사람들을 불관용으로 가게 만드는 것인지 모른다. 선입견, 상설의 두려움, 공포 등등이.

우리에게 관용이 요청되는 곳은 너무나 많다. 이태을로기 극복과 민족의 이질성 극복 즉각자의 체제에 익숙해진 서로의 것들을 관용하기 위해, 타자의 권리존중을 위한 인권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평화교육과 인권교육을 위해, 인종차별 의식의 극복을 위해, 배타적 자국 중심주의의 극복 위해,⁵¹⁾ 아이를 믿고 꾸준히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자녀교육과 서로의 차이와 다름에도 서로에 대한 부정적 행위의 자발적 중지가 요청되는 부부관계 등 가정에서도 원만한 가족관계를 위해.

그러나 우리는 관용에 대해 너무 관용적이지 못한 경향이 있다. 관용철학이나 갈등해소방법론 등이 서구중심적이고 강자의 논리이며 한국상황에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것이다. 물론 비판적인 측면도 없지 않으나 이러한 철

50) 김용환, '관용·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도덕적 명명', 평화교육자료집 21세기 평화를 통해 여성,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95-96쪽

51) 김용환, 위의 글, 98-102쪽

학과 방법의 한국사회 적용은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의 몫이지 이것을 소개하는 그들의 몫이 아니다. 상대적으로 권보적인 사람들의 타문화에 대한 비수용적인 태도를 볼 때 우리가 타문화에 얼마나 배타적인지를 재형할 수 있었다.

지난 1995년은 유엔이 정한 '세계관용의 해'였다. '인류의 평화와 번영, 개인의 인권과 자유의 신장'이라는 유엔의 창설정신 즉 자기정체성 확보를 위한 고언이자 노력이었다. 2000년 '세계평화문화의 해'를 이어 2001년은 '문명간 대화의 해'로 선포되어 있다. 사무엘 헌팅턴이 말한 21세기 문명간의 충돌과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이다.⁵²⁾ 관용의 정신이 없이는 갈등을 해소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갈등이 완전히 해결된다는 것은 이상주의적 발상이다. 갈등은 인간사회의 불가피한 요소이며 언제나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다만 차선책으로 관용 등의 철학을 통해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할 뿐이다.

갈등해결 능력 기르기

차이를 없앨 수는 없다. 또 바랍직하지도 않다. 그러나 차이가 갈등과 분쟁으로 진행되거나 진행되는 과정에서 차이와 다름을 다루는 이해와 기술이 필요하다. 가치와 문화의 차이를 수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 삶의 갈등을 근원적으로 성찰한다면 서로의 차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고 차이를 수용하는 능력을 훈련하고 배양하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과의 갈등, 가족, 친구, 동료, 조직, 국가 간의 갈등과 분열에서 결코 헤어날 수 없다. 갈등해결 기술은 평화를 만들기 위한 기술로서 사람과 사물을 대하는 기술, 객관적인 안목을 형성하게 하고 발전적인 관제 형성과 함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는데 도움이 된다. 갈등해소 즉 '폭력적 갈등의 예방과 해결'은 1999년 3차 헤이그국제평화회의의 핵심적인 의제였

52) 김용환, 위의 글, 93-94쪽

다.

갈등해결 기술을 위한 훈련 내용에는 갈등의 의미, 갈등해결의 수단과 과정, 갈등·분쟁에 대처하는 유형, 갈등해결 과정의 의미, 협동적 문제 해결의 과정, 갈등해결 방법으로서 협상의 원칙, 중재와 공공분재의 해결, 국제 분쟁과 평화 만들기 등이 있다.⁵³⁾ 갈등에 대한 과학적이고 섬세한 접근과 기본적인 태도와 원칙을 세우고 체계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성별, 연령별, 계층별, 지역별 등에 따른 이해관계와 처지에 따라 더 구체적인 접근과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한국사회는 권위적인 정권에 대하여 투쟁하여 왔기 때문에 협상, 중재 등의 기술과 경험이 열악하다.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인 수단으로서 갈등해결 훈련 프로그램이 아직은 극소수의 전문가를 훈련하는 단계에 있지만 일상의 평화형성과 평화운동의 기술로 한국상황에 맞게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갈등해결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상의 크고 작은 분쟁과 통일과정에서의 갈등을 조정하는 시민평화 전문가들이 많이 배출되어야 한다.

배려와 돌봄의 윤리 수용

평화운동은 타자의 고통을 연민의 마음으로 성찰하는 것이다. 따뜻하고 사려깊은 덕목이 요청되는 운동이다. 루터은 여성의 생활 상의 실현이나 노동방식이 생명을 돌보고 배려하는 데에 가깝기 때문에 평화운동에 대한 감수성이 여성에게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모성적 사고와 여성이 지닌 '돌봄의 윤리'는 군사주의 등 기존의 지배적 사고방식과 실현을 비판할 수 있는 우월한 관점이며 일상에서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초석이라고 할

53) 강영전, 「갈등분쟁 해결 트레이닝 매뉴얼」,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여성단체 연합, 자주 평화통일민족회의, 미국친우봉사회가 주최한 갈등해소훈련워크샵자료집, 2000

한다.⁵⁴⁾

일상성과 생명에 대한 친화력을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진 여성들은 전쟁과 폭력 및 반평화적인 현상을 거부하고, 타자의 고통에 대한 감수성과 공감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돌보는 평화지향적인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돌봄과 배려의 여성윤리는 성평등적 관점에서 제도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기여함과 동시에 보편적인 인간의 윤리로 발전되어 다양한 인간들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정신적인 토대가 되어야 한다.

일상에서 만드는 평화로운 삶

일상의 영역에는 전통, 규범, 습관, 생활양식, 언어 등이 포함된다. 일상엔 '문화'라는 이름 하에 총체적인 삶의 양식을 담고 있고 그 일상 안에는 뿌리깊은 권력과 억압이라는 사회문제가 존재하고 있다.⁵⁵⁾ '일상'에서 평화를 다룬다는 것은 개인의 경험 세계를 섬세하게 들여다 봄으로써, 구조적인 반평화가 한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하는가를 분석하고 개인적인 경험으로부터 구조적인 반평화를 개선하려는 노력이다.

그간 평화운동은 눈앞의 이익을 담장 개인에게 가시적으로 보여 줄 수 없는 특성과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이제 평화운동은 자신의 내면적 성찰과 일상에서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운동, 인간관계를 풀어나가는 도구가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평화적인 불편함에 너무 익숙해져 둔갑한 우리의 감수성을 회복하는 일이 우선 중요하다.

모든 것을 평화적 관점에서 생각하고, 그것을 일상에 적용하는 노력이 평

54) 정현백, '한국여성통일운동의 현황과 과제', 여성과 평화 1호, 한국여성평화연구원 191-192쪽

55) 김현미, '일상의 반평화와 여성의 삶', 여성평화아카데미 2000,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131쪽

화운동의 과정이자 본질이며 시작이며 끝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안에 내재된 일상화된 반평화를 역사적 통찰력과 인간에 대한 연민의 눈으로 일관성 있게 생활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특히 한국에서 평화가 마땅히 누려야 할 인간의 보편적 권리, 인권으로 자리잡기에는 평화에 대한 우리들의 권리의식과 의무감이 동시에 너무나 부족하다. 평화를 얻기 위한 치열한 노력과 책임이 뒤따라야 가능할 것이다. 평화운동가들이 군사주의자들의 “평화를 원하면 전쟁에 대비하라”는 말에 “평화를 원하면 평화를 준비하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평화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자기 삶 속에서 만드는 것’이라는 교훈을 새길 필요가 있다.

일상에서 평화를 위한 습관을 만들어 보기

- * 평화의 눈으로 세상보기
- * 자신의 세계관을 확장하기
- * 다양한 가치와 사람 만나기
- * 차이를 인정하는 습관 기르기
- * 남이 옳을 수 있고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 * 남의 생각을 경청하기,
- * 나와 다른 세상으로 여행하기-다니다 어디로든, 평화기행이면 더 좋고.
- *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권리 찾기
- * 일상수행으로 자기 활동 속에 평화 담기
- * 평화로운 몸 가꾸기
- * 평화주의자의 삶 알아보기

어떤 평화친구의 ‘평화를 만든다는 것’

평화는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가꾸는 노력이다. 여기서 공존은 강자가 살기 위해 약자는 죽어도 된다는 허울이 아니라 그야말로 함께 산다는 것, 모두가 주체가 된다는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평화정착'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지만 나는 평화란 어떤 정치적 격변을 통해 정착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평화란 어떤 행위의 정형화된 결과물이 아니라 '집단의 노력'을 동반한 '저항과 과정'이다. 진정한 평화는 구체적인 개인의 인권을 중시하고 인간의 삶에 고통을 주는 폭력에 못 견디려 하는 심성이 성숙될 때 비로소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상적 폭력, 내면의 과시즘에 저항할 줄 아는 힘을 키우는 것, 그 폭력에 몸서리치도록 민감해질 수 있는 것, 그 노력이 바로 평화를 만드는 과정인 것이다. 폭력과 차별에 익숙한 사회성, 그것을 가능케하는 인식의 틀에 대한 깊은 성찰과 분석, 그 폭력을 해체하려는 시도가 '무엇 무엇을 하자는 선언'보다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⁵⁶⁾

56) 정유진, '평화를 만든다는 것', 제주인권학술회의2000, 400쪽

2001

**여성평화아카데미
가을강좌**

- 일시 : 2001년 10월 10일 ~ 10월 31일
- 장소 : 여성사회교육원 청산교육장

북한여성과 성문화

김 해 영 (이화여대 BK21 박사연구원)

I. 서 론

흔히 통일은 체제간 결합이나 제도만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성원들의 생활세계와 가치관의 통합을 의미하는 생활문화의 통합을 통해 완성된다고 한다. 독일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통일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통일 후까지 지속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구조와 제도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심리적, 정서적 이질감이다. 따라서 생활세계와 가치체제의 통합은 통일의 핵심적 관건일 수밖에 없고, 이러한 점에서 남북한 주민의 생활문화에 관한 상호소통과 이해는 매우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북한사회의 고립성과 폐쇄성은 사실상 북한의 일상적 생활문화와 실태에 관한 경험적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민족의 문화적 동질성이 어떻게 얼마나 변화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특히 생활문화가 체험되고 재생산되는 장인 가족생활과 남녀관계의 면면을 이해할 수 있는 섹슈얼리티와 같은 사적 영역에 관해서는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할 수 있는 연구가 거의 없다. 이러한 사정은 북한을 이해하는 유일한 통로가 북한이 공개적으로 제시한 강령이나 법규와 같은 공식적, 간접적 문헌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한국사회에서조차 섹슈얼리티가 갖는 정치성과 사회성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 수 년 전에 불과하기 때문에 북한 사회의 성문화와 성규범에 관한 진지한 논의와 연구를 기대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분단 50년 동안 한국사회는 강력한 국가주도의 산업화 정책과 자본주의

경제질서의 도입으로 서구적인 생활양식과 근대적 가치체제로 급속하게 변모되었다면,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건설과 이를 위한 가정생활의 혁명화⁵⁷⁾ 사업이 전개되어 왔기에 남북한 사회는 민족의 전통문화의 공유에도 불구하고 이질화된 가치와 생경한 생활양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남북한 가족 연구자들은 적어도 가정생활과 성 역할에 대해서는 전통적·유교적 가치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한 사회의 동질성을 지적해 왔다(박해란, 1997; 이문용, 1996; 이은옥 1993; 장하진, 1996; 조형, 1988). 물론 오랜 세월 남북한 여성들은 전통적인 성역할 논리에 따라 가정생활의 전담자로 인식되어온 반면, 공적인 영역에서는 언제나 소수만의 전입이 허락되는 이차적 존재로 간주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성적 정결성을 강요받아왔다는 점에서 남북한의 가부장적 문화는 문화적 동질성을 확인시켜 준다.

그러나 90년대를 기점으로 한국사회는 가부장적 성문화를 불식시키려는 다양한 노력들이 제도적 성과를 거두면서 남녀관계와 가족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의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성의 정체성과 역할의 경계 허물기와 더불어 전통적 성문화의 해체적 증후군이 발견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일반인 모두에게 보편화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전통적 성담론과 질서에 도전하는 영화나 인물에 대한 대중의 수용이 유연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의 색수열리티는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 가운데서도 여성들이 제기하고 있는 성역할 규범에 대한 도전은 강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의 성문화는 급진전하고 있다. 이에 비해 북한사회는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위해 적극적인 성평등 정책을 실시하였고 가부장적 가족구조와 성문화를 부정하였던 초기의 정책이 가부장적 성체제를 이용한 가족주의적 사회주의를 주창하는 퇴행적 과정을 밟음으로써 오히려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문화를 심화시켜 왔다고

17) '가정혁명화'란 "은 가족들을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 교양하며 그들의 머리 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철저히 뿌리뽑고 언제나 혁명적으로 일하고 계우며 생활하도록 함으로써 온 가족이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몸바쳐 싸우는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되게 하는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현대조선말사전』, (평양: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편찬, 1988:5; 도흥범(1999:384에서 재인용).

보는 것이 지배적이다. 물론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은 가부장적 권위를 지탱해 왔던 사회심리적 기제를 해체하고 있다는 탈북자의 증언도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부장적 가족문화와 성문화가 유지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단순히 가부장적 생활문화의 전통을 공유해 왔다는 사실을 들어 남북한의 동질적 성문화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관계의 초석이 되는 섹슈얼리티에 대한 상호소통은 매우 중요하고, 통일한국의 모형정립을 위해서도 반드시 선결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다. 왜냐하면 통일한국의 청사진에는 성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정책의 수립과 구체적인 시행방안의 마련을 통해 여성들이 적극 참여하지 않는다면 통일한국 역시 여성의 억압과 소외가 되풀이되는 절반의 성공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성평등 정책의 기초는 무엇보다도 남녀 정책성에 관한 전통적 인식의 탈피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남북한의 성질서에 관한 통합기반의 구축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특히 한국의 가족생활에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생활문화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남아있고 그 이면에는 유래 깊은 가부장적 의식이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한국에서도 문화전통이나 민족통합이라는 대의명분으로 가부장적 가족문화가 그대로 수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통일한국에 적합한 민주적이며 유연한 성역할 모형을 구상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일상의 생활 속에서 발견되는 여성의 기질과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제해석함으로써 경쟁, 공격성, 지배욕과 같은 남성적 가치에 대해 여성적 가치라고 여겨지는 타인에 대한 배려, 보살핌 등은 남성들도 공유해야 하는 보편적인 사회가치로 승화하고, 이를 통일한국의 중심가치로 확대시킨다면 정보화시대에 잘 맞는 사회적 인성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곧 억압과 배제의 논리에서 보살핌의 윤리로, 근임 없이 타인과의 경쟁을 유도하는 성공 지향적 사회에서 다르지만 조화를 모색할 수 있는 유연한 문화적 사회로의 재구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II. 북한연구의 경향과 과제 : 섹슈얼리티 논의의 한계

최근 김대중 정부에 들어 실질적인 남북한 교류가 급진전되고 통일에 관한 전망이 가시적으로 활성화됨에 따라 민족통일의 문제는 사회의 주된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물론 통일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영역별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지만, 권위주의적 정권 하에서 통일문제는 항상 이데올로기 통제의 일환으로 연구방향과 내용이 결정되어 왔기에 주로 국가나 공공기관 주도의 연구가 중심을 이루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사회에 관한 연구가 북한 사회의 고유한 내적 논리에 따라 이해되고 분석하기보다는 남한사회의 우위성을 입증하는 수단적 방법으로 이용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이데올로기의 세계적인 몰락과 남한의 쉰민정부 수립에 따라 보다 객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남·북한사회 연구들이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사회에 관한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북한사회가 갖는 폐쇄성과 남북한의 복잡한 정치, 사회적 관계로 인해 자료의 제약과 실증적인 연구접근이 개방되지 않는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연구의 객관성과 엄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요행히 탈북자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결과들이 발표되면서 북한연구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민간차원에서의 문화예술교류가 시도되고 있고 일부에는 부분적이지만 학술교류도 추진하는 등 북한연구는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진행되어온 북한여성에 관한 대다수 연구를 역시 공식적으로 발표된 북한의 법령과 정책 및 경제지표에 의존하거나 선전물을 비롯한 각종 소설이나 영화와 같은 문화장르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진행되어 왔다. 그 결과 이제까지 북한여성 연구의 주된 방향은 북한여성의 범률적, 공식적 지위를 남한사회와 비교, 분석한 것이거나 공식적으로는 양성평등을 표방하면서도 오히려 전통적인 가족관계를 복원시킴으로써 사회주의체제 속에서 지속, 강화되어온 북한의 가부장적 사회구조와 가족생활에

관한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또한 이 같은 연구들은 대체로 반세기 동안의 분단 상황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공히 가부장적인 성질서를 존속시켜 왔다는 점에 공통적으로 주목하고 있다(박혜란, 1997; 이문웅, 1996; 이은숙 1993; 조형, 1988).

대단히 제한되어 있는 자료들을 상호 종합적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연구들은 내용의 차별성이나 은밀한 사적관계로 치부되는 남녀관계에 대한 성문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지 못하다. 무엇보다도 가족법이나 정책, 당 강령의 분석을 통한 연구방식으로는 북한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관한 실제적 정보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 모습과 법률적, 혹은 이념적 형태의 일치 혹은 지역적, 계층적, 연령적 차이가 반영되지 못한 논의만이 전개되는 자기모순을 함시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사회와는 달리 북한사회는 이념적 통일성을 강조하고 엄격한 사회통제가 유지되어 왔다는 점에서 기존연구 결과가 지적인 바와 같은 가부장적 성문화 속에서 여성의 성적 정체성이 규정되고 통제될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기존의 남북한 여성연구의 방향을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나누어 본다면 연구 내용적 차원과 방법적 차이에 따라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연구내용적 측면에서는 남북한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로, 주로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강조점의 차이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는 기본적으로 오랜 세월 문화공동체를 형성해 온 한민족의 역사현실과 더불어 반세기 동안의 이질적인 문화변동의 경험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에 기인하는 것이다. 특히 외현적인 삶의 방식을 결정짓는 가치와 선념은 대립적 이념체제에 따라 심각한 가치격차(value gap)의 문제를 가져왔으며, 8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한 생활소비 및 생활기회의 격차는 남북한의 문화적 이질화를 더욱 확대시켰다는 점이 강조될 수 있다. 다른 한편 사적영역으로서 남녀관계는 원초적인 인간관계에 기초한 일차집단이기에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생활규범이 강하게 유지되는 속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 인성을 만들기 위한 북한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에도 불구하고 사적 영역의 주된 원리는 전통적인 생활문화방식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다른 어떠한 영역보다도 동질성과 이

질성의 문제가 복잡하게 연루되어 있는 영역이 바로 가족일 수밖에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통일문화의 출발지인 동시에 정착지로 귀환될 가능성이 크다.

연구방법의 측면에서 본다면 가장 주류를 이룬 연구방식은 제 3국을 통해 입수된 북한사회의 공식 자료와 북한의 소설이나 영화와 같은 작품분석에 의존하여 북한의 가족생활을 재구성해 보는 방법이다. 최근에 시도되는 또 다른 방법은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경험적 연구이다. 전자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실적 가족모습이 반영되지 어렵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면, 후자의 방법은 탈북자들을 통해 과연 북한생활의 현주소를 정확히 읽어낼 수 있는가의 대표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최근 탈북자를 대상으로 하는 북한연구들이 질문지법이나 인터뷰와 같은 실증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연구들은 주로 가족생활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연구의 진전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대부분이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자 소수와 실증면접을 통한 연구방법에 의존하거나 탈북자 가운데 일부만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기법을 채용하는 방법들을 병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방법은 이들이 북한에 거주하던 당시를 회상하여 응답하는 방식으로 접근되고 있으며, 이 결과를 다시 재구성하여 북한사회의 일상생활이라는 조각을 구성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가사용품의 구비와 소비실태와 같은 항목에 대해서는 비교적 정확한 응답을 얻어낼 수 있지만, 당위의 영역인 개인의 가치와 의식의 측면에 대해서는 이들이 남한에 정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의식지형의 변화효과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의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가 과연 북한주민의 의식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인가 하는 대표성의 문제이다. 왜냐하면 탈북한 사람들을 통해 북한사회를 이해하는 방법은 현 수준에서 가장 유효한 방법이지만, 탈북자 자신이 이미 북한사회에 대한 가치평가를 내리고 가치판단에 따라 북한을 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가치와 의식의 형태가 북한주민들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결론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북한연구

는 이들의 탈북 시기와 그들이 처해 있는 생활환경이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논의를 통해 북한여성들의 성문화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북한의 사적 영역은 우리와 동질적 측면보다는 이질적 요소가 많은데 이는 이념체제보다는 오히려 90년대 이후 날로 악화되는 북한의 경제 사정이 더욱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결과로 본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가족생활을 위시하여 북한 사회의 사적영역을 둘러싼 사고방식은 사회주의 이념과 전통적인 의식이 혼재되어 있다고 한다. 예컨대 아동의 사회화와 훈육은 사회주의 인성의 양성이라는 대전제가 비교적 충실하게 계획되고 시행되고 있는 반면, 가정이나 일상적 영역에서는 자녀위주의 가치관, 가족유구 충족을 위한 부모의 헌신적인 노력, 효를 강조하는 등의 혈연 중심적인 가족가치, 남성과 여성의 성별위계와 남성 중심적인 성문화, 그리고 세대간의 질서를 강조하는 유교문화가 공존하는 것과 같은 의식의 이중성이 제형화되고 있다고 한다.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섹슈얼리티의 변화에 기반한 가족문제와 성질서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한국사회의 섹슈얼리티는 부분적인 경제허물기, 개방화, 유연화와 급속히 확산되어온 성상품화이다. 이러한 섹슈얼리티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여성의식의 변화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당부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이러한 개방화와 유연화 역시 자본주의 사회의 특수성이 반영된 상품의 성화, 성의 상품화와 맞물리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와 경계의 목소리 또한 공존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섹슈얼리티와 가족생활과 같은 사적영역은 여타부분에 비해 문화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국가와 이념체제의 영향을 덜 받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섹슈얼리티를 위시한 사적영역에 관한 탐구는 논의의 수준과 다양한 층위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요컨대 공식적 담론과 도덕에 대한 분석과 동일한 비중으로 개인들의 선택적 행위를 경험적으로 연구해야만 섹슈얼리티에 관한 균형 잡힌 이해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한국사회 역시 성의 상품화는 이미 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어 지금은 월

선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와 보수적인 성담론 역시 공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보기술의 빠른 확산과 이를 빠르게 흡수하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취향과 개인화된 삶의 방식을 지향하면서 보수적인 성담론에 의한 섹슈얼리티논의는 선택권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섹슈얼리티 지형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섹슈얼리티 변화를 둘러싼 세대별, 성별, 계층별 격차는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성질서와 문화로 요약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남북한의 섹슈얼리티를 비교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진실과 거짓이 공존하는 논리적 위험이 수반되는 것이다.

III. 북한사회의 특성과 여성의 섹슈얼리티

국가체제에 따라 가족제도와 여성 정책의 차이는 분명하다. 예컨대 자유주의 가족제도의 경우에는 국가가 불간섭, 또는 최소한의 조정자로서 기능하고 있다면 사회주의국가에서는 국가가 직접적인 간여자가 되어 국민의 결혼·이혼·자녀양육 등에 깊이 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로서 북한의 섹슈얼리티 역시 국가의 공식적 간여가 우리사회에서 보다는 더욱 크게 관여되어 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목표로 하여 집단성의 이념에 근거한 인민의 문화를 강조해온 반면, 남한은 자유주의적인 원칙에 따라 표현론적 요건과 가치론적 요건을 개인의 취향에 의해 조절하는 개인성의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이로써 남한은 개인지향적 사회이고, 북한은 집단지향적 사회로 구별될 수 있음을 열두에 둔다면, 남·북한의 정치적 실체의 차이는 물론이요, 사회생활의 근거는 매우 다른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윤경태, 1994:133).

원칙적으로 사회주의권에서 개인수준에서 추구되는 사적 자율화의 구체적인 행위양식은 공적인 의무와 이익은 소홀히 하면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

하는 행위양식일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본질의 측면에서 볼 때, 사회주의 국가의 사람들이나 자본주의 사회의 사람들 모두가 회구하는 욕망이 상이하다고 선결하는 것은 대단히 비현실적으로 보인다. 실제로 북한을 비롯한 사회주의체제의 조직수준에서는 끈임 없이 집단주의를 장려하고 개인주의를 부정하도록 독려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공통적 욕구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에서 집단주의는 개인의 안일과 향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민의 이익, 당과 혁명의 이익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고상한 혁명정신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80년대 이후 지속되어온 경제침체로 인해 김창주의적 가치의 선호도는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는 귀순자들의 증언이 있어 왔다(서재진, 1995:299-308). 이런 점에 비추어 본다면 북한 사회의 성문화 역시 북한 당국의 공식적 제재와 훈시에도 불구하고 은밀하게 변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더욱이 80년대 중반이후 가중되어온 식량난은 중앙의 제재를 이완시키기에 충분한 것이라는 점에서 남녀관계 역시 변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⁵⁸⁾.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는 定型은 아닐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회구하고 있거나 적어도 가치 있는 삶의 방식으로 인지하는 이념형적 부분과 현대사회에 들어 더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 양태의 모습을 동시에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일부 탈북자의 증언에 의존하여 북한의 성문화가 크게 변화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더구나 현실적으로 북한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정확한 통계자료는 물론 북한사회에 관한 경험적 접근이 허락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러한 변화의 수준과 폭이 어느 정도인가 확인할 수 없다. 특히 섹슈얼리티는 그 특성상 규범적 측면이 강하게 유지되어온 사회일수록 규범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일탈로 규정하고 제재하는 관성적 힘이 크기 때문에 훨씬 더 은밀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개인의 선택과 결정권이 다양한 수준과 층위에서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한국사회와는 달리, 여전히 강력한 국가이데올로기에 의해 통제되고 북한 사회의 경우에는 섹슈얼리티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58)실제로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생활을 위한 대대춘과 위도의 문제로 가정생활이 붕괴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사회구성원의 자발적 선택의 결과로 해석기보다는 일시적, 조건적인 차선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북한주민들 대다수는 아직까지 섹슈얼리티를 개인의 선택적 취향과 사적 권리로 이해하기보다는 여전히 관습과 규범에 의해 통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북한의 경우 이념적으로는 남녀평등과 여성해방을 강조하지만, 90년에 체제화된 가족법에는 생활문화에 깊숙이 내재해 있는 가부장적 질서와 전통적인 가족가치를 명목적으로 인정할 만큼 전통적인 성의식이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가부장적 질서의 유지는 무엇보다 북한의 집단주의적 가치의 강조와 무관하지 않다. 북한의 집단주의는 사상과 성분을 중요시하고 가족이라는 사적 연줄망이 북한 주민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 즉 삶 자체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는데, 80년대 이후의 북한소설을 살펴보면 그때로 가족주의가 집단주의를 압도하는 모습이 자주 묘사되고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가족주의는 쉽게 가부장적 문화특성을 발휘하고 있는데, 북한사회에서 여성다운 여성에 대한 강조가 바로 그것이다.

북한의 가부장적 사고방식은 초기에 강력하게 실시된 '가정혁명화' 사업을 통해 이미 청산되었어야 할 봉건적 유습이다. 그러나 사회주의가족의 역기능이 심화되고 김일성주의에 따른 주체사상이 확립되면서 북한은 일상생활에 자리잡고 있는 가족주의적 요소를 국가의 범위로 확대하면서 북한의 가족주의는 더욱 강조되었다(조용관, 1998). 이에 국가를 사회주의 대가정으로, 당을 호주로, 수령을 아버지요, 인민을 수령의 자녀로 하는 국가주의적 가부장질을 가족단위를 통해 강화해 나갔던 것이다.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서열구조와 동족집단간의 조상숭배의 관념은 폐쇄한 체, 소위 사회주의적 가족 개념으로서 '대가정'이라는 용어를 통해 북한 사회전체를 하나의 가족으로 지칭하는 북한의 독특한 가(家)의식은 김일성 부자의 세습을 정당화하기 위함이었다(조용관, 1995). 그러나 '대가정'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사회의 세포단위로서 가정을 중시하는 가족중심적 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가족은 최저의 생산단위이자 사회주의이론의 학

습장이며 가족회합과 단합을 통해 사회주의 국가건설에 기여해야 하는 전통적, 도구적 가족주의로 회귀하고 있다. 요컨대 북한의 여성 및 가족정책은 사회주의 원리와 유교적 가부장제라는 이중의 원리로 운영되어 왔지만, 전제적으로 볼 때 평권초기에는 사회주의 원리가 강조되어 왔다면 한국전쟁 이후에 와서는 봉건적 가부장제가 부활되면서 1980년대를 기점으로 전통적인 가족관계와 여성의 역할은 더욱 분명하게 강조되고 있다(전상인, 1996).

따라서 사회주의 초기 이론에 대해 개방적인 자세를 견지하던 북한사회는 김일성 체제유지를 위해 가족주의의 강화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사실상 이론을 어렵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은 어머니이자 혁명전사로서 당의 정책에 적극 부합하는 사회주의적 인성 개조를 강조함으로써 슈퍼우먼의 이미지를 강화해 왔다. 이는 특히 1971년 김일성의 '여성을 혁명화, 노동계급화할 데 대하여'의 교시를 통해 여성의 재가정화가 강조되면서 여성의 가정에서의 위치와 여성다운 여성성이 강조되는 것을 기점으로 하여, 1976년 이래 김일성과 김정일이 생모인 '강반석, 김정숙 모범 교양'을 통해 여성들에게 전통성을 강조하면서 절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 여성상의 강조와 가족주의의 부활 부부 및 부모자녀관계는 물론 가사노동을 둘러싼 성별분업의 논리를 사회주의 이념과 착종시켜 새로운 가부장적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여성의 내면적 욕구와 자기정체성에 관한 성찰적 질문을 봉쇄하는 것이다. 그 결과 북한 사회는 여타 사회주의국가와 달리 강한 성별분업의 논리와 가부장적 사회문화를 유지하게 되었고, 이는 여성들로 하여금 가정과 사회에서 끊임없이 혁명화되고 노동계급화 되면서도 前사회주의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정과 자녀양육에 헌신하고 종속되는 봉건적 성역할의 모형이 강조되었다. 실제로 80년대 들어 북한사회는 복고적인 여성권⁵⁹⁾이 무각되면서 여성들에게 일과 가정 모두에서 승리를 거둘 것을 촉구하였다.

59) 예컨대 김일성의 어머니 김정숙이 '북한여성들의 모범'으로 미화되면서, 어머니, 아내 그리고 메느리로서의 여성상이 부각되었다(연속통일연구원, 1993:62).

1990년 10월 해방 후 산발적으로 존재해 온 혼인 및 가족관계를 규제하는 법률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을 통해 북한은 결혼과 이혼 등 가족의 성립과 해체에 국가의 규제를 강화하고 전통적 가족제도의 유산을 부활시킨다. 특히 어린이의 양육과 교양을 어머니의 우선적 역할로 규정하는 모성역할의 강조와 경로효친적 유교사상의 부활, 친족법위의 확대를 통한 혈연적 유대와 효의 강조는 사회주의 기본이념을 무색케 하는 반여성해방적 성격으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다(진수희, 1997:385). 따라서 다양한 교양수업과 오랜 동안의 이데올로기적 통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북한여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회회하고 성찰적 사고를 거쳐 남녀의 역할과 관계를 변화시키려는 일련의 노력을 기대할 수 없다.

그 결과 북한사회에서는 섹슈얼리티란 결혼 이외의 맥락에서는 기대할 수도 존재하지도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이것이 결혼 또는 결혼 제도 밖에서 성적인 관계들이나 사건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결혼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 섹슈얼리티는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우며, 따라서 가치의 대상에서 철저하게 배제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 여성들은 결혼중심적인 섹슈얼리티를 형성하고 그 속에서만 여성정체성을 형성해 간다. '여성'은 '남성과 결혼하는 사람'으로 규정되기 함상이어서 여성은 이성애적 관계 속에서 생식적 기능과 분리되고 가부장적 혈통성과 무관한 섹슈얼리티는 가져서도 가질 수도 없는 가부장적 존재인 것이다(허라금, 2000:316).

결혼 중심적인 섹슈얼리티는 사랑, 성, 결혼의 삼위일체론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기 때문에 결혼전 연애는 매우 간헐적이며, 연애 역시 결혼과 분리될 수 없다. 따라서 여성의 성규범은 대단히 엄격한 봉건적 특성이 유지되고 있으며, 이러한 성 규범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에 대한 백안시와 질시 역시 강하게 남아있다. 이러한 전통적 성규범이 강하게 유지되는 북한사회 역시 어느 사회에서처럼 청소년 시기에 이성애 대한 호기심이 있지만, 철저하게 청소년을 무성적 존재⁶⁰⁾로 간주한다. 따라서 청소년기 이들에 대한 성

60) 따라서 여학생들은 생리적 변화에 당황하게 되고, 이를 표시내지 않기 위한 갖가지 노력이 구사되고 있다. 여성 몸의 특징을 감추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행위들이 청소년기 주

교육이나 공식적인 정보는 거의 없다는 것이 탈북자들의 증언이다. 결혼 전까지 성에 무지한 여성을 당연시하는 북한사회에서는 혼전순결은 기본적인 덕목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성에 대한 노골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여성들은 '밭그라친' 일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데, 이는 혼전에 남자를 안다는 것은 처녀의 혼전 임신과 연결되기 때문이다⁶¹⁾. 특히 북한 사회는 통제된 율타리 내에서 생활하다 보니 지역 사회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익명성 보장이 안된다는 점에서 여성들의 몸가짐은 더욱 조심할 수밖에 없게 된다.

비록 1970년 이후 연애결혼이 증가되고 있지만, 여전히 연애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보편적이라고 한다. 특히 청소년의 남녀교제에 대해서는 생활 총화시간에 비판이 대상이 되며, 학교에서 학생이 연애를 한다고 소문이 나면 영락없이 비판무대에 올라야 하며 심한 경우에는 퇴학을 당하기도 한다(여금주 씨 증언: 박혜란(2001:123에서 재인용))

여성의 엄격한 정조를 강조하는 북한사회는 결혼방식 역시 봉태혼이 우세하며, 결혼의 주도권이 남성에게 주어지고 있다. 이는 가부장성을 강조한 북한 사회의 분위기도 있지만 당원을 획득하는 지름길인 군대를 가는 것이라는 점에서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당원을 획득하기 쉽고, 결과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구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80년대 이후 북한경제가 심각한 침체국면에 접어들어 노동력의 수요가 급감하면서 북한 당국은 여성을 경제영역에 유입시키려는 노력을 사실상 포기하면서 전 국민의 노동제급화를 채택해 온 북한은 경제의 침체와 더불어 여성노동력의 유희화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주로 결혼 퇴직제와 출산휴가 및 3자녀 이상 여성의 단축근무제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성들은 결혼 후 남성의 경제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물론 북한에서 가장 월급으로 한 가정의 생활을 꾸려나가기 어려우며, 특히 경제사정이 나빠진 후로는 여성

오한 파제일 만함 여성으로서의 자기정체성을 내면화하지 못하고 있다.

61)이에 대해 탈북자들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혼전임신에 대한 풍문을 전해주고 있다. 이에 대해 허라금(2001)은 때로는 이야기들을 통해 이성에 대한 관심의 위험성과 순결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북한의 전통적 성당론을 분석하고 있다(허라금, "청소년기 여성으로 성장하기", 『통일과 여성』, 이태출판부).

들이 식량 확보 작업량은 훨씬 증가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가정내 지위는 인정되고 있다.

공식적으로 연애와 결혼을 분리시키는 것을 부르조와 인생관으로 간주하고 비난하기 때문에 아직은 대부분이 좋아하는 이성상과 배우자 상은 일치하고 있다. 문학 속에 표현되어 있는 남성이 좋아하는 여성상은 여성다운 태도와 성격을 지니면서 외모도 뛰어나야 하며, 특히 남성을 잘 이해하는 여성이다. 또 여성이 선호하는 남성 상은 건강한 체격과 잘생긴 외모, 남성다운 성격에 미래지향적인 인물로 신뢰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임순희, 1996:187). 그러나 북한소설 속에 북한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신뢰감을 느끼는 계기는 당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남성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북한 젊은이들의 이성관은 점점 경제력과 권리, 안락함이라는 현실적 조건으로 비중이 바뀌고 있다고 한다.

IV. 북한여성의 사회화 과정

인간은 사회의 규범과 질서를 내면화하는 사회화 과정을 거친 뒤에야 비로소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게 된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여성들 역시 공식적, 비공식적 교육과정을 통해 북한 여성으로서 내면화된 역할과 사회적 인성을 함양하고 있다. 특히 여성은 성별 사회화 과정을 통해 형성된 성격체성은 생물학적 존재로서의 여성에서 사회적 여성으로 성장을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화 과정과 기제는 그 사회의 규범과 질서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한 사회의 가치와 인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화의 기제와 내용에 대한 이해가 절점이다.

사회화의 기제는 사회마다 다양하게 존재하며, 또 사회성원이 속해 있는 생애주기와 생활환경에 의해서도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데올로기적 통제가 강한 북한 사회의 경우는 주로 가족과 교육조직을 통해 집중적으로 사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전통적 집합주의의 하나인 가족주의

를 강화해온 북한사회는 가족과 조직을 일체화시킴으로써 여타 사회에서 보다 훨씬 강력한 사회화가 일어나고 있다. 사회조직의 구성원리는 7세에 소년단에 가입한 후 14세가 되면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에 가입(14-30세), 조선적업총동맹(31-65), 조선농업근로자 동맹(31-60), 조선민주녀성동맹(31-60, 이하 여맹으로 약칭) 등으로 이어지는 조직생활을 한다. 물론 그 외에 당이나 조선학생위원회, 조선문학예술총동맹 등의 사회조직에 가입할 수 있다. 소년단 가입 전의 어린이는 탁아소와 유치원 생활을 통해 가부장제 사회주의 질서를 학습하게 되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의 사회화는 국가와 가족의 가부장제, 가족주의라는 기제가 상호 중첩되고 있으면서도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진다는 특성이 있다.

또한 북한사회는 대중매체라는 사회화의 기제를 효과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북한식의 가부장적 사회주의를 철저하게 내면화시키고 있다. 북한의 가부장적 사회주의는 성체제와 사회주의라는 제제는러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이지만, 사회주의보다는 가부장적 성체제가 우선되는 상부구조이다(박현선, 1999).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은 사회주의적 대가정론을 통해 아버지로서의 수령과 어머니로서의 당, 자식으로서의 인민이라는 삼위일체적 관계를 완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가정주의는 경제가 어려워진 90년대 들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국가에 의한 인민생활의 보장이라는 국가주도의 복지가 가족중심의 부양으로 전환되면서 여성의 이중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즉 사회주의 전통에 따라 여성의 경제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여성에 의한 가족의 부양의무가 강화되는 가족책임주의는 여성부담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사회화의 특성은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훈육, 김일성, 김정일 부자에 대한 충성, 그리고 대가정관에 입각한 가족주의 원리가 사회화의 근간을 이루며, 이는 결과적으로 성차별적, 고정적 가치의 내면화와 연계되어 있다.

먼저 국가에 의한 사회화를 살펴보면, 국가는 아이들에게 아버지인 수령 김일성, 김정일 부자와 어머니인 당과 사회주의로 사회화, 학습된다. 90년대 이전까지 북한의 아이들은 엄마의 산전, 산후의 150일 휴가가 끝난 뒤에는

대체로 딱아소로 보내지는데, 이 딱아소의 교육내용은 철저하게 정치논리에 초점이 모아져 있다. 따라서 색 가려보기와 같은 간단한 놀이 이외에는 김일성의 우상화와 혁명완수를 위한 이념적 내용이 아이들의 춤과 노래에 철저하게 반영되어 있다. 유치원 교육에서 시간표 상으로 김일성, 김정일 숭상 교양은 1996년의 경우 76시간을 차지하고 있다. 국어와 노래와 춤이 114시간이고 셈세기, 그리기와 만들기, 체육놀이 등이 각 76시간을 차지하고 있지만(박재환, 1999:56), 모든 문제와 응용의 사례 역시 김일성, 김정일 숭상 교양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시간표 이상의 비율을 점하고 있다. 따라서 교과목의 운영과 수업방식에 있어 교사의 재량권은 거의 없으며, 교사의 중요한 업무는 당과 수양의 지침에 따라 구성되고 효과적으로 전달될 따름이다.

이러한 교과운영은 인민학교와 중학교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공부가 끝나면 학급별로 지정된 시간에 학교마다 몇 개방씩 최고급으로 꾸며놓은 김일성 원수님 혁명사상 연구실, 김정일 선생님 혁명력사 연구실 등에 들어가서 교과목과는 별도로 정치사상 학습을 한다”고 한다. 또한 교육내용 역시 심화되어 당과 사회주의가 어머니로 학습되고 있다(교사 리학철, 「아들 이야기」, 단편 소설 「비둘기는 난다」의 예). 결국 북한 사회에는 김일성, 김정일을 아버지로 당을 어머니로 내면화시키는 총체적 사회화 기제로 교육이 동원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또한 사회적 영역으로 돌아간 아이들에게 북한식 사회주의 이념을 사회화시키는 주요기제로 어린이 만화영화가 동원되기도 하는데, 북한의 만화영화는 대체로 선과 악의 이분법적 구도 속에서 선한 조선어린이가 지주계급, 미국, 일본 등의 악의 무리를 근면, 인내, 용기와 지혜로서 물리치는 내용이다. 특히 역사물의 만화에서는 완벽한 조선민의 역사를 형상화하고 지도자의 우상화화이며 대한 절대충성을 강조하는 지배논리를 추종하고 있다. 특기할 만한 것은 북한의 유년기, 아동기 교육에 있어 훈육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지만, 처벌과 같은 물리적 훈육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금지되어 있다는 점이다. 처벌을 빌리지 않고서도 북한의 중요한 생활교육을 시행하는 긍정 감화교양이나 충성동이, 효자동이 교육과 부모에게 무조건적 순종을 강조하는 전통

적인 양육방식에 의해 통합적인 훈육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훈육방법은 때때로 적지 않아 진정한 인성보다는 강압적인 권위에 눈치보고 주눅이 드는 왜곡된 성격의 소유자로 성장하며, 충성교육을 위시한 각종 이념교육이 토론보다는 주입식 교육이라는 점에서 그 부정적 결과가 지적되기도 한다(김정희, 2001: 282-287).

그러나 무엇보다도 강조될 수 있는 것은 모든 교육내용이나 훈육자료들이 갖고 있는 남성 중심성이다. 특히 아동문화의 남성중심성은 주요 인물과 삽화, 동물만화 목소리의 남아 편중, 생동감 있게 그려지는 활발한 남아와 수동적인 여아의 모습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또한 남아가 적극적인 문제 해결자로 묘사되는 데 비해 여성은 남아의 도움을 받거나 매사에 수동적인 모습으로 전형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물론 한국을 위시한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이러한 남성중심성은 쉽게 발견된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은 이러한 내용을 모니터랄하고 분석함으로써 시정할 수 있는 다양한 유관단체가 존재하는데 반해, 북한은 당에 의의제기를 할 수 있는 어떠한 단체나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또한 한국사회의 경우에는 공식적인 성역할의 사회화가 남성 중심적이지만, 점차 제도적으로 이를 수정하고자 할 뿐만 아니라 소자녀화, 그리고 양육의 주된 담당자로서 여성들의 갖는 의식이 급속하게 변화하면서 딸과 아들의 성역할 사회화의 유연성이 발휘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보화사회로의 급속한 이행을 통해 남한 사회의 청소년들은 쉽게 다양한 생활방식과 문화와 조우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식적 사회화의 남성 중심성을 벗어날 수 있다.

뿐만 아니다. 민중의 재현으로 여성들은 선한 여성임과 아울러 미모이며 남자의 보호를 받는 연약한 여성으로 묘사되고 있다. 간혹 씩씩하고 혁명과업을 위해 헌신하는 여성영웅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남성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고 자신의 공로를 남성에게 돌리는 덕성을 소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주의와 정면 대치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관은 일상생활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 모든 남녀관계의 특성을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부부관계는 명목적으로 혁명동지이지만, 실제로는 부양자와 피부양자이며 유교사회의

엄격한 성별분리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부계승계와 부계제사, 남아선호와 문화가 유지되고 있다. 북한의 이 같은 남녀차별적 문화는 기본적으로 가족과 여성의 혁명화, 노동계급화의 촉구를 통해 여성의 가족내 역할과 사회적 역할을 동시에 강조하고 이로써 가족혁명화를 매개로 한 가족과 사회의 일체를 형성하기 위함이다. 요컨대 가족은 사회화 기능, 정치사회화 기능을 통해 사회의 혁명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기체이며, 가족혁명화의 주요내용은 부모의 혁명화와 자녀의 혁명화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성역할에 근거하여 북한 여성들은 자녀를 혁명사상으로 교육하고 사회화시키는 핵심적 기체라는 점에서 더욱 통제의 대상이 되어 왔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직제로 강조되어온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 여사와 김정일의 생모인 김정숙이 여성사회화의 주요 전형으로 부각된다⁶²⁾. 김정숙·강반석 여사를 모델로 한 혁명적 형모양처론은 여성을 “시부모를 공경하는 며느리, 혁명을 내조하는 헌신적인 아내, 자녀양육에 심혈을 기울이는 혁명가의 어머니, 이웃에 화목한 여성”(조선청년사, 1967)으로 이는 북한여성의 이중적 이미지로 형상화 되지만, 사실상 혁명적 과업의 부분만을 제외하고는 봉건적 여성상에 다른 아니다.

1999년 탈북여성을 조사한 연구⁶³⁾ 가운데 또한 바람직한 여성상을 묻는

62) 물론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식도 ‘혁명투사’로 인식되지만 아버지의 역할이 부각되지 않는 이유는 김일성을 한자람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형상화시키기보다는 인민 전체와 어머니로 인식시키기 위한 고도의 정치 통제 전략의 일환이다.

63) 이 연구의 정확한 조사시점은 1999년 7월 12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조사방법으로는 중국의 연길 및 도문지역에 거주하는 탈북민인 여성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병행, 실시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자기응답식 질문지를 가지고 조사대상자가 자신의 솔직한 태도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본 설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개별 면접을 실시하였다. 도문, 연길 등 몇몇 지역에 산재하는 북한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총 400명의 질문지 가운데 264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가운데 교정 및 편집과정에서 분석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되는 20매의 질문지가 제외하여 최종적인 분석에 사용된 질문지는 탈북 여성의 경우 기혼여성의 268매, 미혼여성의 64매를 총 332매이다. 한편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여성과 남한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연구도 실시되었는데, 탈북여성은 전체 70명 가운데 68명이 응답하였다. 남한여성의 경우에는 20세 이상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1999년 9월 1일 ~ 31일까지 총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는데 최종적으로는 365매가 회수되었다. 그중 분석이 불가

항목을 통해 여성 폭한 여성의 가부장적 의식을 살펴본 결과,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여성들의 경우에는 '집안에서 인정받는 며느리'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어도 남한거주 탈북여성이나 남한 여성들보다는 여성의 주된 역할을 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전통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남한여성들은 가정의 안팎에서 자신의 능력을 다 발휘하는 슈퍼우먼을 이상적인 여성으로 내면화하고 있어서 분명한 대조를 보여준다(표 1 참조).

<표 1> 바람직한 여성상에 관한 집단별 태도 (단위: %, N=633)

집단별 \ 항목	(1)	(2)	(3)	(4)	(5)	(6)	계
중국거주탈북여성	25.2	29.2	27.6	4.0	5.2	8.8	100.0
남한거주탈북여성	16.9	20.0	63.1	-	-	-	100.0
남한여성	11.0	4.4	69.5	0.9	-	14.2	100.0

$$\chi^2=159.49, \quad p < .001$$

- (1) 남편에 대한 내조를 잘하는 아내
- (2) 어른이나 집안에서 인정받는 며느리
- (3) 가정생활을 하면서 직업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여성
- (4) 결혼하지 않고 직업에 전념하여 성공하는 여성
- (5) 자녀를 돌보며 가사에만 전념하는 여성
- (6) 가사일을 하면서 직업은 아니지만 사회활동이나 사회운동을 하는 여성

한편 남북한 여성들의 가부장적 성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7개의 문항(40)

높한 것으로 판정된 25개의 질문지를 제외하고는 기혼 214명, 미혼 126명의 총 340명이 분석대상으로 포함되었다.

로 구성된 척도를 통해 남북한 여성의 가부장적 태도에 관한 동의여부를 조사한 결과, 역시 전통적인 가부장 의식이 북한여성들에게 강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남한 여성들은 절대 다수(약 81%)가 보수적인 가부장적 의식에 찬성하지 않고 있음에 비해 중국거주 북한 여성들은 약 61% 가량이 남성중심의 가정생활과 차별적인 남녀의 역할을 지지하고 있었다. 북한여성의 가부장적 의식구조는 이미 귀순자들의 증언이나 90년대 이후 출간된 북한의 문학작품의 분석을 통해서도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다.

<표 2> 집단별 가부장적 성의식 지지도

(단위: %)

응답별 집단별	정말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정말 그렇지 않다	계
중국거주 탈북여성	12.2	48.7	29.4	9.7	-	100.0
남한거주 탈북여성	3.2	17.5	55.6	23.8	-	100.0
남한여성	-	1.5	17.7	61.9	18.9	100.0

$$\chi^2=386.01$$

$$p < .001$$

또한 이러한 가부장적 의식은 가족 내 성역할에서도 남녀구별적 태도로 나타나지만, 이러한 구별은 결과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과 혁명과제를 강조해온 북한사회에서 여성의 희생과 헌신이 더욱 강조되는 모순을 가져오는

- 64)가부장적 성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7가지 문항은 다음과 같다. (1)무무간에 의견이 다른 경우, 남편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2)남자는 사람을 앞에서 눈물을 보여서는 안된다 (3)결혼한 여자는 집에서 상필하는 것이 좋다 (4)가장으로서 남편은 가정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져야 한다 (5)여성이 잘되는 집은 남편이 성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6)아내가 바깥일을 해도 집안일과 자녀양육은 아내책임이다 (7)가정에서도 남자가 할 일과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다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사회주의이념에 따라 당의 공식적인 가치지향은 목표지향적이고 조국에 헌신하며 부철한 직업여성의 삶이 강조되지만, 현실적으로는 가족주의적 성향이 강조되면서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인생의 독립적인 주체자로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집단과 가족 속에 매몰되어 있는 수동적 자아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가족의 혁명화에 따라 강화되어온 가족주의로 인해 남편여비, 부장부수, 여필종부와 같은 전통적 성의식이 강하게 내면화 되어있기 때문이다(임순희, 1997). 따라서 부부관계는 전통적인 가치지향에 따라 남성 우위적인 형태가 강하며 차별적인 성역할 형태가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탈북자의 연구에서도 가정에서 중요한 일의 결정권은 남편이 전적으로 결정한다(38.5%)와 남편이 주로 결정하되 부인과 함께 상의하는(42.7%) 것으로 나타나 남편중심적 부부관계가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탈북자들이 남편의 역할로 인식하는 것은 주로 가족의 부양, 집안수리, 연탄찍기 등이며, 아내역할로 인식하는 것은 자녀돌보기, 생활비관리, 집안청소, 취사 및 조리로 응답하고 있어 차별적 성역할 의식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순형, 최연실 외, 1998).

탈북자와 남한여성을 비교한 다른 연구도 이와 동일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박미석, 장진정, 2000). 예컨대 남한 여성들의 경우에는 적어도 가정 대부분의 영역에서 자율적인 권한이 비교적 확고하게 주어지는 반면, 북한 여성은 가정생활과 관련된 대부분의 활동, 예컨대, 자녀수를 결정하는 일, 자녀교육방법, 휴일이나 휴가 보내는 방법, 집안세간 구입하는 일에서조차 남편의 결정이 지배적이다. 북한여성의 가정 내 지위는 남성에 의해 규정되고 있으며, 남편의 가사분담 참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가사분담의 결단자로서 여성은 사회적 생산노동의 참여에 관계없이 가사노동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이중의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찍이 북한당국이 여성들의 과중한 직장노동과 가사노동의 부담을 덜고자 밥공장, 반찬공장 등을 설치했으나, 북한 남성들의 소극적 태도와 북한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데 기인한다 (박미석, 장진정, 2000:194-197; 이순형, 이기영 외, 1998:304-305).

또한 북한은 90년에 채택된 가족법 제 9조에 의해 법정결혼 연령을 남자는 18세, 여자는 17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1971년 “남자는 30세, 여자는 28세가 된 다음 결혼하는 것이 좋다”는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만혼의 지배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만혼의 권장에도 불구하고 결혼력기는 남자 25-26세, 여자 23세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당국도 이를 묵인하고는 있지만 연상 남성과 손아래의 여성의 결혼이 당연시되는 추세라는 점에서 남성의 권위와 대표권은 연령적 질서 속에서 여전히 수용되고 있다. 이는 북한 여성들이 배우자 선택기준으로 사회주의적 가치와 현실적인 요소를 모두 고려할 만큼 남성 의존적이라는 점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즉 북한여성들은 남편을 가계부양자, 가족의 대표자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고 이상적인 남편감을 선호하는 것이다. 예컨대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배우자 선택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조건으로 당성과 성분을 꼽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 경제력이 중요해지면서 현금을 만지는 판매원이나 운전 수, 외화벌이 직종을 선호하고 있다고 한다(이순형, 이기춘 외, 1999).

<표 3> 집단별 배우자 선택기준⁶⁵⁾

(단위: %, N=653)

집단별 \ 선택요소	학벌	집안, 성분	경제능력	성격	외모	건강	직업	계
중국거주 탈북여성	14.4	29.2	23.7	10.1	7.0	8.6	7.0	100.0
남한거주 탈북여성	23.1	16.9	23.1	27.7	-	7.7	1.5	100.0
남한 여성	8.5	9.1	21.8	54.7	0.3	3.9	1.8	100.0

$$\chi^2=169.63 \quad p < .001$$

.001

65) 김영란, 김혜영(2000)의 글을 참조하라.

또한 북한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경험적 연구에 의하면, 북한 부모들의 희망 남아의 수는 주로 1명(64.49%)이고 희망 여아 수는 1명(88.19%)으로 답하고 있어 남북한 모두 소자녀를 선호하고 있지만, 여아는 2명 3명이 각각 8.1%, 0.79%에 그치면서도 남아는 희망 자녀수가 2명, 3명이 28.1% 3.0%로 응답하여 남아 선호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이순형, 이기춘, 김대년 외, 1999:52).

지금까지의 남북한 여성연구들은 거의 대부분이 남북한의 강한 가부장 문화를 근거로 통질적 측면을 강조하여 왔고, 이에 근거하여 남북의 통합 방안을 논의하여 왔다. 그러나 요사이 한국사회에서는 가족구조의 취약성과 가족성원 간의 개인주의적 성향 및 권리와 자율성에 관한 여성들의 자각은 전통적, 봉건적 의미에서의 성문화와 상당부분 바뀔을 빚고 있고 이런 점에서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심각한 경제난의 여파로 북한당국이 강화해온 가부장적 성질서가 동일한 강도로 유지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 중심적이며, 이중적인 성규범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북한의 획기적인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한 남북한 여성의 섹슈얼리티 격차는 쉽사리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V. 맺음말

우리사회는 지금 전지구적 변동을 야기하는 시장자유주의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고, 내부적으로는 이질화된 남과 북의 문화적 통합과 민족의 주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통일국가의 실현이라는 파중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통일은 대외적인 압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공해 줄 것임에 틀림없지만, 지난 50년에 걸친 남북한의 이질화는 통일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통일도 어렵지만 통일한국이 궁극적인 정착지는 더 더욱 아니라는 점에서 통일 후 갈등과 사회문제들이 일시적으로 폭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통일이 남과 북의 여성들에게 유리하기보다는 오히려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염려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남북한의 여성통합적 문화의 구축은 매우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통합적, 합의적 문화기반이 결여된 상태로는 남과 북의 여성들이 협사리 가치관의 충돌에 의해 상호 대립할 가능성 또한 농후할 뿐만 아니라 남과 북의 여성들이 하나된 목소리를 갖지 못할 경우 통일국가에서조차 가부장적 문화체제가 유지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사회 역시 급속히 변화하는 석슈얼리티의 지형을 어떻게 수용하게 될 것인가의 문제는 좀 더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야 논의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전통적 요소와 현대적 요소가 병존하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성별, 세대별 갈등은 더욱 치열해 질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을 통해 남성과 여성의 정체성을 구분하는 잣가지 전통적 관념과 인습은 일부 해체되고 재구성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석슈얼리티변화가 한국사회의 긍정적 가치로 자리매김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여러 가지 걸림돌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유체의 자본화까지 금상송하는 성의 상품화 현상이다.

그러나 북한사회에서는 전통적 가족주의에 기반한 가부장성을 강화해 오면서, 오히려 성의 경계와 위계적 질서가 강하게 구축되는 역사의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다. 지금과 같은 경제난이 더욱 확산하면 할수록 남성 중심의 성문화는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이에 대한 남북한 지속적인 연구와 토론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남북한의 소통가능한 성문화를 구축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금의 상호격차를 인정하고 어떻게 좁혀갈 것인가에 관해 여성계가 깊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통일과정이나 이후에 북쪽 여성과 남쪽 여성의 반목과 종속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의 여성들이 자기정체성의 핵심으로서 성정체성과 역할에 상충적인 태도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유연하고 평등한 남녀관계가 확보되는 미래지향적, 통일지향적 성문화를 구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성이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남과 북은 공히 여성 억압적이며 가부장

적 사회였으며, 아직까지도 가부장적 사회구조 하에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남쪽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일련의 시도들이 다양하게 구사되고 있는 반면, 북한에서는 아직까지 여성 억압적인 가부장적 질서에 대한 공개적인 문제제기나 대안문화조차 전무한 형국이다. 또한 한국사회는 그 특성상 다양한 문화와 행위양식과 조우하며, 이를 둘러싼 갈등과 논쟁 속에서 여성 스스로가 자신이 속한 사회구조를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반면에 북한 여성들의 경우는 전체주의 사회의 속성상 일방적으로 강한 가치동조(價值同調)가 이루어지기 쉽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과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남북한의 합리적, 소통적 커뮤니케이션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한 여성의 연대를 이루어내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 남·북한 여성문제에 있어 절대적인 해답이나 지름길은 없지만 남북이 정치, 사회적 상황의 차이에 따른 이질적인 삶의 양식과 경험을 지니고 있다는 전제 아래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여성에게 유리한 통일한국을 건설하기 위한 인식론적 합의를 위해 길고 긴 노력과 연구가 경주되어야 하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가족관련학술단체협의회 편, 1998, 『남북한 가족의 동질성 회복』, 도서출판 하우
 기사연 통일연구위원회, 1994, 『분단 50년의 구조와 현실』, 민중사.
 김귀옥, 김선임 외, 1997, 『북한여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대동.
 김애실, 1997, "경제체제와 남·북한 여성의 경제적 지위",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여성의 삶에 대한 비교』, 이대 한국여성연구원.
 김영관, 1998, "통일한국의 여성정책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부문",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36호.
 김영관, 김혜영, 2000, "남북한 여성의 사회의식에 관한 비교연구 및 수립방안", 『아시아여성연구』 제 39집.
 김혜영, 2000, "남북한 가족문화의 비교연구", 『사회와 문화』, 한국사회문화학회.
 남인숙, 1999, "남북한 사회문화에 내재한 가부장성에 관한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북한연구회.

- 도홍열, 1999, "남북한주민의 가족의식 비교", 『북한연구학회보』 3-2, 북한연구학회 문속채.
- 1997, "가정생활 속의 남·북한 여성의 삶", 상계서, 이대 한국여성연구원.
- 박기덕, 이종서 권, 1995, 『남·북한 제제비교와 통합모델의 모색』, 새종연구소.
- 박미석, 장진경, 2000, "남북한 가정생활 비교를 통한 여성의 역할에 관한 연구", 『아시아 여성연구』 제 39집.
- 박혜란, 1997, "남·북한 생활문화와 삶의 질", 상계서, 이대 한국여성연구원.
- 서재진, 1995, 『또 하나의 북한사회』, 나남.
- 손봉숙, 이경숙, 이은숙, 김애실, 1991, 『북한의 여성생활』, 나남.
- 윤미량, 1991, 『북한의 여성정책』, 한울.
- 이기춘, 이기영, 이은영, 이순형, 박영숙, 김대년, 최연실, 1997, 1998, "남북한의 생활문화의 이질화와 통합", II, 『대한가정학회지』 35권 6호, 36권 11호.
- 이문술, 1996, "남북한 사회의 민화와 전통유교문화", 『분단 반세기 남·북한의 사회와 문화』, 경남대국동문재연구소.
- 이은영, 1995, "통일국가의 성평등과 여성의 사회참여", 『한반도 통일국가의 체제구상』, 한겨레신문사.
- 임순희, 1997, "통일한국의 여성의 가치관", 『분단, 평화, 여성』 (II(장공자 외), 민주평화 통일학회의 북한회의).
- 장하진, 1996, "남·북한의 가족제도 및 여성의 역할", 『분단 반세기 남·북한의 사회와 문화』, 경남대국동문재연구소.**
- 전상인, 1995, "북한의 가족정책 변화연구", 『민족여성·가족생활의 회고와 전망』.
- 조용관, 1995 "북한가정정책의 변화와 가정윤리", 국립경향대학 중앙문제연구소, 『공안연구』 7권 1호.
- , 1998, "북한 가족정책의 변화와 전통적 가정문화", 안양대 복지행정연구소, 『복지행정연구』 14집.
- 전수희, 1997, "통일한국의 여성정책연구", 『마라치한 통일문화』, 민족통일연구원.
- 조형 권, 1997, 『양성평등과 한국의 법적 체계』, 이대출판부.
- 최연실, 1997, "가족중심의식과 남북한 사회의 통합", 『학생생활연구』, 생명생활연구소.
- 한국여성연구원 역, 2001, 『통일과 여성』, 이화여대 출판부.
- 한국여성개발원, 1992, 『북한여성의 지위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황무임, 1999, "북한의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안양대 복지행정연구소, 『복지행정연구』 15통계정, 『1998년 사회통계조사보고서』
- www.unikorea.go.kr/kr/load/B22/B222.htm
- 『내외통신』, 1993년 9월 16일.

변화하는 북한, 가족과 결혼

박현선 | 이화여대 강사, 사회학

1. 북한에서의 여성, 가족, 사회의 관계

1990년대 중반부터 심화된 북한의 경제적 위기는 북한의 모든 것을 변화시켰다. 그동안 국가가 지급해온 임금과 식량뿐 아니라 의료, 교육, 보험 등의 모든 사회서비스가 거의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는 곧 인민의 기본생계를 위협하는 것이었다. 인민들은 국가의 빈자리를 가족을 통해 채워나가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인민들은 가정에서 돈이 될만한 가재도구나 공용주택 배관다에서 키운 토끼 혹은 짐 앞 뒷밭에서 경작한 채소 등을 시장에 내다 팔아 필요한 식량과 생필품을 구하고 있다. 일례로 토끼 한 마리의 시장가격은 북한 화폐로 100원인데 이는 북한 교사의 한 달 임금과 맞먹는 가격이다. 따라서 국가가 배치해준 직장에서 받는 임금보다 장사나 부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금액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다. 북한에서 1997년 현재 4인 가족 기준으로 기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00원 정도가 필요하다. 북한의 노동자 한 달 임금이 70원에서 100원 정도이고, 가구 당 경제활동 인구가 2명이기 때문에 한 가구 당 많아야 200원 정도밖에는 벌지 못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부족한 1,800원은 장사를 통해 충당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165명을 대상으로 한 1999년의 조사(박현선, 1999, 「현대 북한의 가족제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에 의하면, 전체의 81.3%가 북한에서 장사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난이 심화된 1994년을 계기로 이전보다 장사하는 비중이 두 배 이상 높아

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장사나 부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여성들이다. 북한에서 남성이라면 무조건 직장에 나가야 하고, 이유 없이 직장에 6개월 이상 나가지 않으면 감옥에 가야하기에 장사를 본격적으로 하기 힘들다는 외적 조건도 작용하지만 남성들은 가부장제적 권위 의식 때문에 '체면'을 내세워 장사를 기피한다. 반면 여성의 경우 결혼을 하면 직장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기 때문에 장사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다는 조건뿐 아니라, 자식과 남편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책임 의식 때문에 장사에 뛰어들고 있다. 남성들의 체면과 여성들의 책임 의식의 기원을 일차적으로는 우리의 가부장제적 전통에서 찾을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북한에서 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여성들의 가족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여성들이 이미 위기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여성들의 위기대처능력에 의해 가족의 생존이 보장됨으로써 인민들의 국가에 대한 불만, 즉 임금과 식량을 30% 정도밖에 지급해주지 못하는 국가에 대한 불만을 가족 차원에서 여과할 수 있었다. 여성들의 '비사회주의적' 경제활동에 의해 가족의 생계가 보장되고, 가족에 의해 남성들의 '사회주의' 국가가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비사회주의적 경제활동이란 개인 소유형태의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여성들의 비사회주의적 경제활동, 2차부문의 급격한 확대는 여성들의 역할론 아니라, 가족관계와 구조까지 다음과 같이 변화시키고 있다.

2. 결혼의 자유와 결혼하지 않을 자유

사회주의 가족이론에 의하면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결혼의 자유'가 보장된다. 바로 결혼의 자유란 배우자 선택에 있어 경제적 고려가 제지되고 참된 성애와 상호존경에 기초하여 결혼 당사자가 아닌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자유의지에 의해 결혼이 성립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도 자유 결혼의 원칙을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그러나 결혼에 관한 제한적 규정들을 1990년 10월 24일에 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가속법'을 통해 찾아낼 수 있다. 가족법에서 결혼 연령은 남성 18세, 여성 17세부터이며(제9조), 4촌까지의 인척과 8촌까지의 혈족간에는 결혼할 수 없다(제10조)고하여 결혼연령과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결혼은 신분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법적으로 인정되며 국가의 보호를 받고, 결혼등록을 하지 않고는 부부생활을 할 수 없다(제11조)고 규정함으로써 법률혼제를 고수하고 있다. 이는 사실혼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며, 사실혼관계에서 태어난 자식들은 차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혼에 대한 법적인 제한 외에 국가와 직장으로부터의 규제가 추가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맑스-레닌 혹은 맑스-엥겔스에 의해 지향되었던 이념적 사회주의가 아닌 현존하였던 현실 사회주의 국가 모두에서 경험되었다. 국가로부터의 제한이란 결혼 시기나 결혼 후 거주 지역 등의 규제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에서는 대학재학중이나 군복부 중에 결혼할 수 없기에 보통 여성은 24-27세, 남성은 28-30세 이후에 결혼하고 있다. 평양에 거주하는 사람과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결혼할 경우, 결혼 후 평양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국가적 규제보다 구체적인 규제는 직장에 의한 규제이다. 현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직장은 단순한 노동의 장을 넘어 가족과 개인의 생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력의 장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공장과 기업은 노동자와 사무원들에게 주거지를 제공할 뿐 아니라, 자재의 병원, 보육시설 등을 가지고 있다. 공장과 기업의 책임자들은 이를 누구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노동자와 사무원들의 결혼과 출산, 자녀 교육 등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북한에서도 이들 책임자들은 결혼상대자를 소개해주는 중매자의 역할 뿐 아니라 결혼 상대자를 승인하는 결정자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만약 노동자와 사무원들이 직장 책임자가 승인하지 않는 결혼상대자와 결혼할 경우, 승진이나 주택 배정 등에서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은 경제난 이전에 일반화된 결혼에 대한 제약들로서, 이를 통해 북한에서 자유결혼의 원칙이 제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난 이후 결혼에 영향을 주는 조건은 외적 규제보다는 결혼당사자의 선택에 기인하고 있다. 물론 그러한 자발적 선택이 가족의 생계의 위협이라는 현실적 조건아래 초래된 것이다.

경제난 이후 경제활동이 가능한 모든 가족성원들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이전에는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주부나 자녀들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는데, 그 중에서도 주부와 딸들이 장사하는 비중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젊은 여성들이 장사를 위해 결혼을 늦추거나 아예 결혼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늘고 있다. 이처럼 여성들이 결혼을 회피하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가족의 생계 때문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여성들의 의식변화에서 비롯한 것이다. 즉 결혼하면 여성 자신이 장사를 하여 무책임한 남편을 부양하면서도 권위적인 남편을 섬겨야 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북한에서 볼 수 있는 결혼의 형태나 결혼식 풍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결혼형태로 볼 때, 연령이 낮을수록 연애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65명에 대한 북한이탈주민 조사를 통해 연령별 결혼형태를 살펴본 결과 20대는 100% 연애결혼이고, 30대는 53.5%, 40대는 27.6%, 50대 이상은 18.8%가 연애결혼을 하고 있다. 중매결혼을 할 경우, 소개자는 직장 상사나 가까운 친척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앞으로도 중매결혼보다는 연애결혼의 비중이 높아질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결혼할 때 여성은 살림살이를 남성은 주택을 책임진다. 주택은 남성의 직장 책임자가 해당 부처에 주택을 신청하면 국가로부터 공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준비에 있어 실질적인 부담은 여성들에게 무과된다. 여성들의 혼수품은 지방에 따라 달라, 함경도 지역은 여성들이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한다고 한다. 경제난 이후에는 혼수품이 간단한 예복을 주고받는 정도로 축소되었고, 주택 배정도 늦어져 부모님 집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국가에서 주택을 지을 여력이 없자 개인별로 자재를 사서 주택을 신축하도

목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적 경향과는 반대로 극히 일부이지만 경제난 이후 장사나 뇌물 등을 통해 부를 축적한 경우에, 자녀가 결혼할 때 주택을 구입해주는 경우까지 있다. 물론 사회주의 북한에서 주택의 개인소유가 허용될 수 없지만, 주택 매매가 암거래 형태로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암거래 가격은 30평 주택은 3,500원 정도, 아파트의 경우 많게는 3~4만원까지 한다고 한다.

결혼식 풍습은 북한에서 인민반장을 하다 1997년에 탈북한 39세 여성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알아낼 수 있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결혼할 때는 양가의 허락을 받아요. 먼저 남자 집에서 약혼 날짜를 잡고, 여자 집에서 약혼식을 해요. 그 때 남자 집에서 일채 음식을 해 가지고 오고, 여자한테 간단히 한복이라든가 화장품을 줘요. 그 대신 여자 집에서는 양복지 한 갑하고, 꼭 만년필을 주고, 혁명역사 많이 하라고 책을 줘요.

그 다음에 결혼식 날짜를 잡거든요. 서로 양가 합의해서 날짜를 잡지요. 내일이 결혼식이면 오늘 신부집에서 손님을 다 치루는데 국수는 꼭 해요. 그 다음날 남자가 차를 가지고 여자를 데리러 오는데 이때 선불 대장함을 가져와요. 여기에 사계절 옷하고 아기 날으면 쓸 포대 감하고 쌀하고 돈도 100원에서 50원 들어있어요. 또 청실홍실도 들어있고, 바늘 따라 실이 가고 남편 따라 여자가 간다고 실에다 색실을 예쁘게 한 것도 들어 있지요. 남자가 여자 집에서 음식이 차려진 큰상으로 된 자기 상을 받는데 사진 찍고 나서 상을 물려요. 큰상의 음식은 남자 양으로 해쳐서 먹으려면 먹고, 집에 가져가서 부모를 보여주겠다 하면 다 싸줘요.

여자 집을 떠나 남자 집에 가는데 만약 남자 집에서 10명에 여자 집에 왔으면 여자 집에서는 남자 집에 한 명이라도 더 가야 돼요. 여자도 남자 집에서 큰상을 받는데, 남자가 상의 음식을 해쳐 먹으면 여자도 그렇게 하고, 남자가 자기 상을 할어왔으면 여자도 음식을 싸 가지고 가요. 상을 물린 후 신랑집에서 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인사하면서 예담으로 가져온 것을 한 명 한 명한테 인사하면서 드리지요.

이러한 사례는 신당집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경우이지만, 북한에서는 신 부집이나 공공회관에서 직장상사나 담이나 근로단체 간부 등의 주례로 행해진다.

3. 남성 중심적 부계혈연제도와 비남성 지향적 양계제

북한은 혁명의 초기 단계인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기(해방~1946.2)와 사회주의혁명기(1946.2~1958.8)에는 봉건제적 가족을 혁명적으로 평등하게 변혁시키는 노력을 기울여 가족에서의 사회주의적 원리를 확립하였다. 특히 가부장제의 특징인 호주제가 1946년에 없어지고, 대신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공민증이 신분증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주체사상을 공식화한 1960년대부터 북한가족은 사회주의적 특징과 가부장제적 특징이 병존하는 이중적 성격을 띤다. 이는 사회, 국가적 차원에서 가족국가 개념이 사적 영역인 가족에까지 전이되었기 때문이다.

1980년대에 북한의 경제상황이 더욱 불안해지자 북한은 가족에서의 가부장제적 특징을 더욱 강화하게 된다. 가족의 부양의무가 사회주의에서는 원칙적으로 국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1990년의 가족법에서 가족의 부양의무를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가족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이는 주로 김일성의 어머니인 '강반석 여사'와 김정일의 어머니인 '김경숙여사'라는 여성모델, 여성상을 여성들에게 교양시키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여성상은 시부모 봉양을 잘하는 며느리, 남편의 혁명활동에 헌신적으로 내조하는 아내, 자녀를 건실한 혁명가로 키워내는 어머니, 자신이 열성적인 혁명가로 활동하는 주체적 여성이라는 다양한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내는 여성을 '혁명적'이면서도 '헌신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여성들은 어머니학교나 북한에서 유일한 여성조직인 조선민주여성동맹 등에서 그러한 모범을 따라 배우는 작업을 해왔다.

경제난에 처했을 때, 여성들이 곧바로 가족경제의 중요 담당자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준비작업에서 나온 것이다.

가부장제에서 호주제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제사와 재산의 호주 상속이다. 북한에서는 호주제가 법적으로 소멸되었을 뿐 아니라 사유재산이나 제사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호주제의 의미나 영향력이 약화된 조건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북한에서 제도로서의 호주제는 없어졌지만, 남성 중심적인 부계혈연제도와 이념으로서의 호주제는 존속하고 있다. 이는 곧 북한가족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부장제적 특징들로 가족우선성, 남편 지배-부인 순종, 남아선호 등을 의미한다. 더욱이 1990년 가족법에서 상속을 인정하고, 1970년대부터 제사가 허용됨으로써 그러한 경향을 제도적으로 강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경제난 이후 북한 가족에서 가부장제적 특징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난 이후 북한가족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할 수 있는 단초를 발견할 수 있다. 이는 경제난 이후 친정과의 정신적 유대나 물질적 지원관계가 강화됨으로써 비남성 지향적인 양계적 요소가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계중심 가족제도에 양계적 요소가 추가됨으로써 남성 중심적 부계혈연제도와 비남성 지향적 양계제가 공존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탈북자 11가족, 20명을 인터뷰한 결과(박현선, 1999), 11개 가족 중 8개 가족이 북한에서 핵가족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들의 북한에서 형성하였던 시댁과 친정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되는 북한에서 거주거리는 친족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시댁과 친정에 가까이 거주하는 가족은 각각 4개 가족으로 시댁이나 친정과 가까이 사는 가족이 동일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근접거주하는 핵가족의 경우 시댁이나 친정에 자주 방문함으로써 확대가족 유대의 흔적을 보이고 있다. 시댁과는 거주거리가 따라 물질적 지원관계가 달라져 근접거리에 거주한 경우에만 활발한 물질적인 지원관계를 형성하였다. 시댁과는 거주거리가 가깝던 멀던 상관없이 정신적 유대감을 거의 형성하지 못하였다. 반면 친정과는 거주거리와 무관하게 정신적 유대

감과 물질적 지원관계를 모두 형성하고 있었다.

성별로 정신적 유대관계의 차이를 볼 때, 남편들은 처가뿐 아니라 본가에 대해서도 거의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었다. 부인들은 시가에 대해서는 유대감을 형성하지 못하였지만 친정에 대해서는 매우 긴밀한 정신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었다.

친족별 물질적 지원관계를 보면, 핵가족과 시대와의 관계는 일방적 관계가 대부분이지만 친정과는 보다 상호부조 관계를 형성하였다. 시대와는 시대에 도움을 주거나(4개 가족) 시덕으로부터 도움을 받는(2개 가족) 가족이 대부분이고 상호도움을 주는 가족은 1개 가족에 불과했다. 반면 친정과의 관계는 친정에 도움을 주거나(3개 가족) 친정에서 도움을 받는(2개 가족) 가족 외에 상호도움을 교환하는 가족이 3개 가족에 해당하였다.

물질적 지원의 방향을 보면 자녀가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가족주의적 특징보다는 부모나 자녀중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쪽이 그렇지 않은 쪽을 도와주는 형태를 띠었다. 경제난 이후 경제적 여건에 따른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합리화의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북한 가족 어떻게 변할 것인가?

경제난의 심화 속에 비사회주의적 경제활동에 의한 가족의 유지는 단기적으로는 북한사회의 안정을 가져올 것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북한사회의 변화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비사회주의적 경제활동에 의한 시장적 기제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작동기제를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그렇게 되기 전에 대외적으로는 자본주의 국가와의 개방을 통해, 대내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해내고자 하며, 위기 극복의 정도에 따라 이러한 비사회주의적 경제활동에 대한 제재의 수위를 조정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여성들의 가족경제에 대한 기여도는 더욱 높아져 이것이 단기적으로 여성들의 지위향상을 가져오기보다는 오히려 가사와 노동에 대한 이

중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아울러 국가에 의해 강화된 가족에서의 가부장제적 특징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양제적 요소의 대두, 가장권의 약화 등 가족구조의 변화 가능성을 전망할 수 있다.

북한 여성, 어떻게 만날 것인가

김귀옥(경남대 전문대학원 북한학과 객원교수)

1. 남북공동선언과 여성의 과제

2000년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 이후 정부당국과 각 부문의 NGO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통일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이 있기 전부터 여성계는 일찍이 통일 준비하기 시작했다. 남북관계가 경직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던 1991년에서 94년 사이에 이미 진보적인 여성운동은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4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군위안부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실무회담이 지난 몇년간 베이징 등지에서 여러 차례 개최되었고, 이것은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에서 남북이 공동기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커다란 결실을 맺었다. '남북공동선언' 이후 이러한 남북 여성의 만남은 더욱 활발해져 2000년 하반기에는 다양한 단계가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하였다.¹⁾

이렇듯 북한 여성과 여러 차례 만나면서, 남한 여성과 여성운동은 우리가 안

- 1) 특히 1992년 9월 1~6일에 평양에서 열린 제3차 토론회는 남측 대표단이 관문점을 통과해 북을 방문한 최초의 민간교류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큰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에서 발행한 통일백서에서는 이런 여성들의 역할이 생략되었는데, 이를 통해서도 우리는 통일문제를 얼마나 남성중심으로 사고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정현직, 『한국 여성통일운동의 현황과 과제』, 『여성과 평화』 창간호, 당대 2000, 166~168면.
- 2) 2000년 10월 3일의 북조선 노동당 창립 55주년 기념식에는 13개 정당·사회단체와 함께 여성단체로는 유일하게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초청을 받아 북을 방문하였다. 이어 11월 19~25일에 우리민족서로돕기 여성위원회, 여성단체연합, 여성단체협의회, 새마을부녀회, YWCA 등 5개 단체 대표가 평양을 방문하며, 여성교류를 위한 실무 회담을 하였고, 금년 5월에 평양에서 연대회를 가질 것을 합의하였다.

아야 할 몇가지 과제를 인식하게 되었다. 첫째로, 북한 여성과의 만남 이전에 이미 남한 사회는 북한 여성 이미지와 만나고 있다. 이는 북한 여성의 진정한 모습에 대한 왜곡의 우려 못지않게, 남한 사회의 가부장적 담론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역기능을 할 공산이 크다. 따라서 남한의 여성과 여성운동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급격히 재구성되는 북한 여성 이미지를 분석하고, 그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지를 검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북한 여성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인가'에 대한 남한 여성운동의 현명한 대처 자세가 필요하다. 남북 여성간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겪게 될 차이와 동질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우리는 북한 여성에 대해 어떤 정형을 만들고 있는 것이나 아닌지,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서구적인 정교한 이론적 잣대로 그들을 재단하는 것이나 아닌지 등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오만한 자세로 동독 여성들을 평가했던 서독 여성들의 태도가 통일 후 오랫동안 동·서독 여성 사이의 불화를 낳았던 독일의 역사적 경험을 끊임이 반추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로, 여성교류는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남북교류 수준과 양에 비하자면 미미하기 짝이 없는 것이며, 이는 전체 통일과정에서 여성이 지니는 영향력을 냉정히 추정해보는 시급성이 될 수 있다. 우선 북한 여성과의 만남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남북 여성간의 교류를 촉진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해 필자는 앞에서 제기한 세 과제를 중심으로 향후 남한의 여성과 여성운동이 북한 여성과의 진정한 만남과 단결을 위해 어떤 지향점과 전략을 가져야 할지를 숙고해보고자 한다.

2. 남한 사회의 북한 여성 이미지

60년대, 70년대까지도 맥을 이어왔던 우리네 원 조선 여인상, 한국 여성상이 이곳에는 고스란히 온존해 있었다. 푸근함·공손함·절제·예의바름·성실·짜뉘편 살림 꾸리기, 그런 미덕들이 두루두루 모아진 기본품격, 발랄 까지지 않은 깊숙하고 넉넉한

우리네 제국의 여성상. 그렇다. 앞으로 남북간의 바람직한 길도 모르지기 여기에 귀일 될 것이다.⁶⁷⁾

특히나 아직 미혼인 남성 여러분. 기다립니다. 가정에서 부권을 상실한 채, 월급통장 꼭 권 마누라의 바가지에 하루도 편한 날이 없는 선배·상사들을 보면 떠오르는 것이 없으십니까? 신세대 이혼을 25퍼센트에 속하지 않으시려거든, 통일을 기다리십시오. 자신보다는 남을 위할 줄 아는 복녀들이 있습니다.⁶⁸⁾

위의 인용문이 보여주듯이 북한 사회가 조금씩 개방되면서 북을 다녀온 남한의 문인이나 북한이탈 남성들이 지니고 있는 북한 여성에 대한 이미지는 공통성을 지닌다. 특히 남한의 문인들이 만난 북측 안내원, 집대원, 지도원 여성들은 순수·소박함·수줍음으로 표상되고, 이들에 의해 북한 여성은 자연미·전통미·'민족적 원형미'로 찬미된다. 금상한 한복차림, 절박한 양장스타일, 엷은 화장, 수줍은 미소와 뺨의 홍조로 대변되는 북한 여성들의 모습은 순종·인내·경전·조신함을 비덕으로 하는 전통적 여성성으로 표상되고, 그 대치점에는 서구화된, 자신의 권리나 내세우고 거침과 권투적인 남한의 여성상이 놓이게 된다. 이는 통일을 염원하는 남한의 남성들에게 서구화되고 산업화되는 와중에서 남한이 잃어버린 전통적 여성성을 재발견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잃어버린 민족적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로 받아들여진다.

1960~70년대의 반공드라마에는 세 종류의 북한 여성 이미지가 등장하였다. 한편으로는 순수와 복력을 일삼는 열성 공산당원, 피도 눈물도 없는 악녀 그리고 수렁에 행목적으로 충성하는 로봇의 이미지가 복합된 카리스마를 지닌 여성이, 다른 한편으로는 권력층의 성의 노예로서의 여성 이미지가 있었다. 전자의 여성이 남자를 위해 군림하는, 여성성을 상실한 '중성적 존재'였다면,

67) 이호철, 『동아일보』 1998년 9월 8일자, 진로판, 「태세에 나타난 북한의 이미지 구성」, 『탈분단시대를 열며』, 100면에서 재인용.

68) 장영철, 『당신들이 그렇게 잘났어요』, 사회평론사 1997, 184면, 권혁범, 『통일교육에서 탈분단 시민교육으로: 평화, 인권 그리고 차이의 공존』, 『전환기의 민간통일교육』, 민족화해국민협의회 심포지엄 자료집, 21면에서 재인용.

후자는 '기쁨조'로 상징화되는 희생자 여성이었다. 세번째로 우리 매체에 등장하는 북한 여성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중노동을 하면서,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무식부식한 얼굴과 허름한 옷차림'의 가련한 여성 이미지이다.⁶⁹⁾ 이에 비한다면 최근에 자주 등장하는 북한 여성의 전통미에 대한 찬미는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개선만큼이나 북한에 대한 국민적 정서가 한결 부드러워졌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런 여성 이미지의 형성도 몇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북한 여성에게서 전통적 여성미의 재발견은 최근대전 여성성의 붕괴를 시도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고도로 복잡해진 악육감식의 남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남성들에게 전통과 사라진 전근대 세계를 향한 향수를 자극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 나아가 상기한 여성 이미지의 창조는 보다 위험한 방향으로 작용하여, 남한 남성들이 여기에서 쉽게 민족적 동질성을 추출해내고, 이를 민족적 정체성으로 고정시키면서, 단일한 정형 속에 융해시켜버리는 획일주의로 나갈 염려가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민족적 동질성은 그 안에 권위주의적 위계질서나 가부장적 문화를 내면화하면서, 남쪽이 '가부장적 통일'을 만들어낼 위험성을 충분히 지닌다. 이러한 획일주의 아래에서는 다양한 정체성은 인정되기 어려우며, 소수집단이나 개성을 지닌 개인이 숨쉴 공간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⁷⁰⁾ 동시에 이렇게 편희적인 민족적 정체성 설정은 남한의 폐미니즘 담론에 위협적인 대항담론으로 작용할 우려가 없지 않다. 또한 북한 여성의 전통적 여성미를 통해 민족적 동질성을 발견하려는 시도는 그 내용의 허구성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치성을 지닌다. 이는 민족주의가 지닌 명암을 직시하기를 거부하고, '민족주의'라는 미명하에 복고적 낭만주의로 회귀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약화시킬 위험을 태대하고 있음을 말한다.

북한 여성의 전통적 여성성의 이미지는 실제로 남한의 현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2000년 6월 27일자 『동아일보』는 한국의 30대 남성 29.3%가

69) 유선영, 「분단체제의 여성 이미지의 정치: 추방 혹은 포섭 혹은 미장류」, 『여성주의 시각에서 본 남북교류의 문제』, 2000년도 한국여성학회 3차 월례발표회(2000. 3. 17) 자료집, 42-50면.

70) 권혁명, 앞의 글, 21-22면.

북한 여성을 배우자로 맞을 생각이 있음을 밝혔다. 그 이유로는 '순박할 것 같다'(33.8%), '남편에게 순종할 것 같다'(20.9%), '같은 반쪽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19.6%), '검소하고 알뜰할 것 같다'(15.6%), '경조관념이 강할 것 같다'(7.8%)를 들었다고 한다.⁷¹⁾ 남북 정상회담의 열기로 전국민이 들떠 있을 당시에, 항간에는 '남북통일이 되면 누가 가장 손해를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무성하였는데, 여기에서 1순위로 떠오른 것이 남한 여성이었다. 북한 여성의 전통적 여성성에서 도피처를 찾고자 하는 남한 남성의 이러한 정서는 여성인권 보호를 위해 여성관련 법률이 제정되고, 이제 남성도 성희롱 조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으면 남패를 당하게 된 현실에 대한 남성들의 반발심이 작용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두 번에 걸쳐 진행된 이산가족상봉이 전국민을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넣으면서, 모성을 비롯한 전통적인 여성의 미덕이 강조되는 분위기를 더욱 강화시켰다는 페미니스트들의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모진 시집살이 견디낸 할머니' '3일 자고 떠난 남편 기다리다' 등과 같은, 언론을 도배한 '수절'이나 '정절'에 대한 기사가 바로 그것이고, 이를 통해 전통적인 여성 이미지 외에도 가족이 분단을 넘어서는 가치로 강조되었다는 지적도 나타나고 있다. 가족의 신성함을 강조하는 이런 기사와 나란히, '여성이 핏줄이라는 논리 앞에 어떻게 대상화되어가고, 어떻게 억압받는가를 함께 말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⁷²⁾ 오랜 냉전의 장벽을 뚫고 처음 화해를 모색하는 과정이니, 흠어진 혈육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가장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현재로서는 중요할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한 매개고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해 시비를 가리는 것은 필자 개인으로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가족이데올로기의 강조가 남한 사회에서 장기적으로 가부장제를 강화하는 데에 이바지할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북한 여성과의 올바른 만남을 위해서는 남한 여성들은 먼저 남한 사회에서

71) 유선영, 앞의 글, 49면에서 재인용.

72) 「탈분단시대의 가족과 여성: 남북 이산가족을 지켜보며」(과담), 『여성이론』 제3호, 84~97면 참조.

작동하는 북한 여성 이미지가 지닌 정치성과 허구성, 강화되고 있는 가족담론과 싸워나가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동시에 북한을 방문한 많은 문인들의 글에서, 너무 커진 격차로 인해 이제는 연민의 대상으로 정의되는 북한의 자연은 여성의 이미지로 재현되고, 북한의 여성은 '미덕과 너그러움을 갖춘 순종하는 주체'로 형상화되는 데서 드러나듯이, 북한과 북한 남성을 바라보는 남한 남성의 시선은 강자의 시선이자 내부식민지를 바라보는 제국주의자의 시선이기 쉽다.⁷³⁾ 보는 이의 위치에 대한 반성 없이 생산되는 지식이 지닌 위험성을 고려하자면, 북한과 북한 여성을 바라보는 우리 남한 여성의 시각에 대한 끊임없는 반성적 성찰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

3. 북한 사회 속의 북한 여성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북한 여성은 순간비행장에서 붉은 꽃술을 흔들며, '반갑습니다'를 외치는 모습으로 처음 다가온다. 만남의 반가움만으로도 눈물을 흘리는 여인들, 화장기 없는 검게 탄 얼굴, 수수한 한복차림 그리고 말을 붙이면 쉼쩍하고도 쾌활한 목소리로 대답하는 여인들. 이 북한 여성들은 우리에게 여전히 이질적인 존재들로 보기에, 북한 여성과의 진정한 만남을 위해서는 '북한 여성 제대로 알기'가 선행되어야 한다.

북한 여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 사회문화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 문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회주의적 민족주의 문화이다. 사회주의적 민족주의 문화란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것이다. 북한은 민족문화를 그대로 보존하기보다는 그것을 현실에 맞추어 변형하고, 이를 통해 노동자 농민 대중이 용이하게 문화를 향유하도록 배려하였다.⁷⁴⁾

73) 전호환, 앞의 글, 95~113면 참조.

74) 김귀옥, 『북한 여성,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제3차 여성평화 통일포럼(2000. 12. 15) 자료집, 7~14면.

더불어서 '우리 민족 체일주의'의 기치 아래 사대주의 문화를 배격하고 자주성을 견지하면서, '우리 식대로의 사회주의'를 천명한다. 그 다음으로 북한 문화의 중요한 특징은 집단주의이다. '하나의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사회이기에 개인간의 경쟁보다는 집단간의 경쟁이 중요하다. 특히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수령-당-인민대중이 삼위일체가 되어, 대가정을 이룬다. 이에 따라 조직생활과 여가생활은 결합되어 있고, 사적인 갈등에 대해서도 조직이 개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결국 공/사영역의 분리가 모호해졌다. 거기다가 북한의 사회문화는 여전히 항일무장투쟁 정신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다. 아직 제국주의 전쟁의 위협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않았다는 현실인식여다가 1995년 이후의 식량위기로 '고난의 행군'이 계속되자, 자력갱생과 선군정치를 표방하며 극도의 절약과 노동을 통한 헌신을 강조하는 절제된 생활문화를 고수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요약하자면 북한 사회문화는 고도의 긴장감과 집단성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런 북한의 사회문화가 지난 특수성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우리 식의 잣대로 북한 여성을 재단하게 될 것이고, 중국에는 그들에 대한 물이해를 자초하게 될 것이다.

북한 여성을 알기 위해서는 북의 사회문화 외에도 여성정책과 여성의 지위를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경우, 맑스-엥겔스의 여성해방관을 수용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여성평등을 대원칙으로 천명하였다. 이미 북한은 1946년에 '북조선의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을 공포하여 남녀평등을 법적으로 보장하였다. 또한 토지개혁을 통해 여성들에게도 일정 토지를 배분함으로써 건설한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였고, 동시에 여성인력을 계획경제 속에 전면적으로 배치하였다. 육아와 교육의 사회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탁아소 증설, 작업중 수유시간 보장, 산전산후 휴가 150일, 임신중인 여성의 야간작업 금지, 자녀 있는 여성의 노동시간 단축 등이 실현되었다. 또한 봉건적 가족관계의 반영인 호적 대신에 공민증으로 신원을 확인토록 하였고, 만 18세 이상의 모든 여성이 동등하게 공민증을 교부받을 수 있게 하였다.⁷⁵⁾

75) 윤미량, 『북한의 여성정책』, 한울 1993, 76, 113면.

또한 북한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대대적인 사상혁명을 도모하였는데, 이를 위해 북조선민주여성동맹(이하 '여맹')이 1945년 11월에 창설되었고, 1973년에는 170만의 명원을 거느리는 거대한 조직으로 발전하였다. 초기의 여맹이 사상교양사업과 노동력 지원사업을 동시에 수행한 데 비해, 1961년 이후로는 전자가 더 중요성을 지니게 된다. 특히 여맹은 가두여성(전업주부)의 사회적 참여와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가정의 혁명화'에 주력한다. 가정에 안주하려는 여성들을 비판하고, 전업주부들을 초대형 행사에 열심히 동원하면서, 가정을 사회와 공고히 결속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⁷⁶⁾

북한 정부의 적극적인 여성정책의 결과로 북한에서 여성의 사회참여율은 대단히 높다. 1991년 북의 발표에 따르면, 전체 노동력의 49%, 경공업 노동자의 70%, 안민학교 교사의 80%, 대학교수의 15%가 여성이었다. 그러나 기존 여성의 70~80%가 직장을 포기한다는 귀순자의 증언을 감안하면, 여성이 전체 노동력의 49%라는 수치에는 전업주부로 구성되는 가내각업반, 가두직원반의 인원이 포함된 듯 보인다. 또한 여성기술자·전문가의 비율이 북한 전체 인텔리의 40%인 58만 명이라는 발표가 있는데, 그렇다면 북한 관리직의 거의 40%가 여성이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에서 여성관리직이 그리 높은 비율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어서, 이 숫자는 가감하여 받아들이 필요가 있다.⁷⁷⁾ 또한 북한에서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높은 편이다. 1998년 7월 26일에 구성된 제10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경우 여성이 20.1%를 차지하고 있고, 상임위원회에서 여성의 비율은 8기와 9기에는 20%, 10기에는 11.8%이다. 당이나 행정기관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구소련이나 중국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지만, 남한에 비해서는 훨씬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제도적으로는 남녀평등이 상당히 실현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식량위기 이후 북한에서 여성의 상황은 훨씬 열악해진 것 같다. 우선 여성의 노동참여율이 현저히 낮아졌다.⁷⁸⁾ 많은 여성들이 가정으로 돌아간 것

76) 김귀옥, 앞의 글, 18~21면.

77) 김귀옥 외, 『북한 여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당대 2000, 42면; 윤미량, 앞의 책, 198~205면.

78) 지난해 필자가 북을 방문하였을 당시, 홍선옥 조선여성협회 위원장은 식량위기 이

외에도 경제위기는 국가가 감당하던 가사노동의 사회화나 모성보호비용을 개별 가정의 책임으로 전가하였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1990년대 이래로 ‘미풍양속’ ‘가족’ ‘전통’ 등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여성성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북한 사회에서 경제위기는 반대급부의 효과도 수반하고 있다. 즉 여성들이 사회적 위기에 대처하는 적극적인 주체로 나서면서, 농민시장·외화벌이·장마당 등에서 앞장서는 층이 되었고, 이를 통해 국가의 가부장적 태도를 넘어서서 독립심과 자신감을 높여가는 긍정적인 측면도 보이고 있다.⁷⁹⁾

그러나 북한 사회에서 통용되는 여성관을 들여다보면, 북한에서 여성의 지위를 가능하기가 간단치 않음을 알게 된다. 다시 말하면 제도적 평등이 곧바로 실질적 평등으로 이어진 것 같지는 않다. 북한 정부는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고, 여성의 평등권을 사회주의 질서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상정하였기에, 건국 초기에 북한이 지향한 여성관은 능동적이고 사회적인 혁명가로서의 여성이었고, 여성의 노동동원강제의 투입이 적극 장려되었다. 아마도 사회주의적 여성해방사상의 세계 외에도 반제반봉건혁명의 수행과 전후복구를 위해, 여성노동력의 생산현장에서의 투입이 불가피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1961년경부터 탈스-영겔스 사상에 기초한 북의 여성관은——김일성-김정일체제의 공고화와 함께——서서히 변화되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미 1962년 11월의 최고인민회의에서 여성들이 누리는 자유와 권리는 김일성 주석의 ‘깊은 사랑과 육친적 배려’에 의해 주어졌음이 강조되었고, 여성의 본연의 역할은 ‘알뜰한 주부·자애로운 어머니’에서 찾을 수 있으나, 동시에 여성은 ‘천리마운동의 기수’로서 사회주의 건설에 적극 참여할 것이 요구되었다. 이때부터 어머니로서의 여성상이 강조되면서, ‘강반석 내사를 따라 배우기’가 책극적으로 추진되나, 1980년대에 이르면 김정일위원장의 생모인 ‘김정숙 녀사 따라 배우기’가 더 전면에 등장하게 된다. 여명이 출판한 『강반석 내사를 따라 배우자』에서는 북한이 추구하는 여성상이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주 여성의 노동참여율이 50% 정도라고 말하였는데, 이 수치는 남한 여성의 노동참여율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79) 김귀옥, 앞의 글, 23면 참조.

녀사께서는 안해로서, 혁명가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또 혁명적 가정의 주부로서뿐만 아니라 직접 혁명활동을 전개하신 혁명가로서의 투쟁을 가장 큰 락으로 삼으셨고 가장 귀중한 영예로 여기시었다.

녀사의 빛나는 생애와 활동은 혁명하는 남권을 어떻게 도우며 자제분들을 어떻게 키우며 시부모는 어떻게 공대하고 가정은 어떻게 혁명해야 하는가를 우리 녀맹원들과 녀성들에게 가르쳐주는 생활과 투쟁의 본보기이다.⁸⁰⁾

북한 여성들에게 본보기로 내세워진 강반석 여사에 대한 위의 글에서는 혁명가로서의 여성이자, 동시에 어머니, 며느리 그리고 가정주부로서의 여성을 강조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여성에게 이중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강반석 여사나 김정숙 여사에 대한 많은 일화를 통해서도 현명하고 자상한 어머니, 순종적인 며느리, 헌신적인 주부, 가사노동의 전담자로서의 여성의 역할이 더 적극적으로 전달된다. 혁명가로서의 독자적인 역할은 강반석 여사의 경우에는 약화와 부녀회를 통한 정치교양이나 군복과 식량을 준비하는 것 등으로 나타났다면, 김정숙 여사의 경우에는 영화와 문헌 등을 통해 무장투쟁의 패어난 전공과 탁월한 전략전술이 있었다고 묘사된다. 김정숙 여사가 실제로 항일무장투쟁에 참여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우리의 관심을 끄는 부분은 북한이 이상적인 여성상에 무장투쟁의 공헌까지를 포함시켰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김정숙 여사는 “전사”로서의 역할까지 하였지만, 남편과의 관계는 철저하게 수직적이다. 그녀는 김일성 주석에게 헌신적인 충성심을 보여주어서, 그 일례로 항일투쟁중인 밀명을 떠나면서 손수저를 깨끗이 닦아 무궁화 꽃수건에 정갈하게 싸두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남편의 신발갈개를 만들었다는 일화가 소개되고 있다.⁸¹⁾

이런 맥락에서 북한의 여성관이나 여성의 지위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가족

80) 조선민주녀성동맹, 『강반석 녀사를 따라 배우자』, 동경: 조선청년사 1967, 2면, 윤미향, 앞의 책, 141면에서 재인용.

81) 같은 책, 149면.

의 역할이다. 북에서는 가정을 사회의 세포로 규정하고, 가족이 혁명화의 중요한 단위가 된다. 특히 '강반석·김정숙 따라 배우기'를 내세우기 시작하면서, 모성의 강조에 못지않게 혈연적 유대가 더 적극적으로 강조되었다. 특히 가정을 지키는 역할이 여성에게 부여되면서, 여성=가사전담자라는 전통적 여성관이 온존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김일성주석-김정일위원장으로 이어지는 정치권력의 이양이 사회적으로 남편-아들을 중심으로 하는 가부장적 가족질서를 정당화, 강화시키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실제로 김정일 위원장의 대두 이후 여명의 역할은 위축되고, 가정에 남는 여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⁸²⁾ 물론 이는 1980년대부터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노동력 수요가 감소하자, 여성을 노동력으로 동원할 필요성이 줄어드는 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가정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지만, 북한에서 근대 부르주아 사회 이후 일반적으로 강조되는 사적 영역으로서의 가정의 기능은 현저히 약화되었다. 예를 들면 여성은 조선의 전통문화에 맞게 '조선 치마저고리'를 입는 것이 좋다는 김정일위원장의 교시가 있을 후에 모든 여성들이 치마저고리를 착용하게 되는 것도 바로 사적 공간의 국가에의 종속을 의미한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대로 직장조직이나 지역조직이 고부간통이나 부부간통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국가가 가정이라는 사적인 세계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가정의 자율적인 기능은 대단히 약화된다. 뿐만 아니라 가정과 관련된 기사나 문학작품, 영화 등을 분석해보면, 자녀교육에 있어서 부친의 역할은 상당 부분 국가가 흡수하였다.⁸³⁾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통용되는 가정의 권위는 손윗사람에 대한 존중이 자연스레 내면화된 권위주의 사회의 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국가의 부름에 따라 가정 내에서도 스스로의 역할을 바꿀 채비가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영화나 소설에서는 어머니가 국가의 부름을 받아 가사를 돌볼 수 없을 때에

82) 같은 책, 123면.

83) 김귀옥, 앞의 책, 105면. 또한 국가에 의한 사적 영역의 개입 및 흡수는 식구의 과식을 국가들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형태여서, 흥미로운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유정화, 「근대국가주의와 여성: 독일, 나치정권의 여성정책」, 『역사비평』 제52호, 345-52면; 「나치 독일의 가족과 인구정책」, 『서양사론』 제65호, 131-54면 참조).

는 아버지가 기꺼이 가사를 담당하는 모범사례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의 가부장적 문화는 독특한 것이다. 북한 사회에서는 가부장제가 존립할 기반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첫째 사유재산의 철폐로 가부장제의 물질 기반이 없고, 둘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보장되고 있어서, 여성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동의 사회적 양육을 통해서도 국가가 전통적인 가정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다.⁸⁴⁾ 그런 점에서 북한의 가부장적 문화는 상당 정도 전통적인 여성관과 김일성-김정일 숭배체제가 가져다준 권위적 위계구조에 토대를 두고 작동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가부장적 문화가 지니는 독특성은 그것이 강조하는 '여성다움'에서도 잘 드러난다. 『조선녀성』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다.

녀성은 꽃이라네, 생활의 꽃이라네
한 가정을 알뜰살뜰 돌보는 꽃이라네
정다운 안해여 누나여 그대들 없다면
생활의 한자리가 비어 있으리
녀성은 꽃이라네 생활의 꽃이라네⁸⁵⁾

물론 녀성들이 자신의 해방과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요, ... 그러나 녀성들은 자신의 해방과 권리·평등만을 생각하는 나머지 조선 여성들이 예로부터 가지고 있는 고유하고 아름다운 품성을 잃어버려서는 안되오 ... 녀성은 녀성다워야 하오. 해질있고 검박한 언행과 몸가짐은 사람의 존위를 높여주며 존경과 신망을 받을 수 있게 하여주는 것이요.⁸⁶⁾

84) 윤미향, 앞의 책, 125면. 그외에도 김귀옥, 『현대 북한 대중매체를 통해서 본 북한 여성』, 『여성과 평화』 창간호, 당대 2000, 205~209면 참조.

85) 『평양신문』 1991. 1. 19, 김충남 작사·리종호 작곡.

86) 『녀성은 녀성다워야 하오』, 『조선녀성』, 1989, 4~5면..

‘여성을 꽃’으로 비유하는 것은 북한 사회주의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이다. 북이 여성의 혁명적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이런 은유를 사용하는 것은 여성의 아름다움이 대중에게 주는 감성적 효과를 염두에 둔 것 같다. 이는 한편으로는 북한 정치엘리트 집단 자체가 전통적인 여성상에 상당 정도 고착되어 있는 점에도 원인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에게 사적 영역에서까지 철저한 사회주의 혁명, 즉 영결스가 주창하는 여성해방을 관철하는 것을 주지한 뜻하다. 두번째 예시문에서 조선 여성의 고유한 품성이란 순종, 참을성, 다소곳한 태도, 어른 공경, 단정한 몸가짐, 예의바름 등을 포괄하는 것이다. 남녀차별이나 여성비하 사상이 담긴 구래의 전래동화 중 상당 부분은 ‘몽편적’이라는 이유로 폐기되기는 하였지만, 전래동화나 창작동화에 대한 분석에서도 여전히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을 구별하는 표현이나 성역할 설정이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면 ‘남품한’ ‘떡식함’ 등의 행동사는 남성애, ‘예쁜’ ‘수줍은’ 등의 행동사는 여성애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사회의 여성관이 지니는 전보적인 측면은 사회주의 국가의 건설이나 사회적 생산에의 참여에 대해 여성이 지니는 높은 자긍심에서 잘 드러난다. 특히 북한 소설은 신세대 여성들의 의식구조 변화를 잘 드러내고 있다. 이제 다소곳하고 남성에 순종하는 여성보다는 자신의 주장을 개진하고 능력이 있으며, 동시에 자립심이 강한 여성들이 자주 등장한다. 이들은 일이나 사랑에서 전부 적극적이다. 신세대 여성들은 사랑과 자신의 일을 일치시키려 하되, 양자의 갈등관계가 생겨날 때 이 여성들은 자신의 일을 포기하기를 거부한다. 건국 초기에는 사회주의 건설이나 사회적 생산에서 주어지는 여성의 역할에 대한 책임감이 강조되었지만, 최근의 소설로 올수록 여성들은 잘못된 길로 들어선 남성을 설득하기도 하고, 그래도 소용이 없을 경우에는 조국에 대한 애정과 일에 대한 책임감을 위해 과감히 애인을 떠나는 과단성을 보여준다. 농촌생활에 염증을 내며 도시로 가는 애인을 떠나보낸 후, 자신의 고향 마을을 개간하여 커다란 농업계획을 달성하는 여성의 사례는 북한의 영화나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이다. 이런 자의식과 자긍심은, 장기적으로 보자면 북한 여성의 자기발전과 해방에 중요한 토대를 이룰 수 있다.⁶¹⁾

그래서인지 북한을 방문한 남한 사람들은 북한의 여성으로부터 이중적인 인상을 얻게 된다. 한편으로는 앞에서 말한 대로 북의 여성들은 다소곳하고 순종적이며, 늘 치마를 착용하고, 담배나 술은 입에 대지도 않는다. 그러나 이 여성들은 쉽게 감동받고, 솔직하고 그리고 단호하게 행동한다. 마이크를 대어 주면, 그녀들은 망설이지 않고 씩씩하게 연설하거나 즐겁게 노래를 할 줄 안다. 즉, 북한 여성들은 훨씬 더 사회화되어 있다. 이렇게 북한 여성들이 지닌 양면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 여성을 몇가지 특성을 중심으로 정형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온몸이 번뜩거리는 한복치마를 입은 다소곳하고 순종적인 여성, 그리고 집체화된 집단문화를 내면화한 존재들로 정형화된 이면에는 그들이 지닌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내적 동력이나 자의식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북한 여성을 이해하기 전에 그들을 정형화하는 것은 함으로 위험한 방식이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선무른 정형화가 결국 여성운동 사이의 불화와 반목을 낳았던 통일독일의 사례를 고찰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남북 여성들이 독일과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면서, 여성해방의 과제를 함께 수행해갈 수 있을지를 성찰해야 할 것이다.

4. 독일 통일의 교훈: 동·서독 여성운동의 불화를 넘어서

통일독일의 사례는 일방에 의해 다량이 흡수·통합되었다는 점에서는 우리 현실과 차이가 있다. 남북간의 관계는 장기적인 대화와 교류를 통해 평화공존체제를 정착해나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 예측되기에 무차별적인 비교는 곤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론에 해당하는 부문에서 동/서독의 시행착오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동/서의 국경선을 넘어서는 여성주의가 가능한가? 이 질문은 제기치 않았던

87) 김귀옥, 앞의 책, 105, 130, 136면.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이후, 동/서독 여성들이 함께 던졌던 질문이다. 그러나 동/서독 여성 사이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여성주의는 가능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두 여성운동은 오랫동안 내적인 불화와 반목의 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먼저 왜 경계선을 가로지르는 통합된 여성운동이 불가능하였는가를 구명할 필요가 있다.

우선 동/서독 여성운동은 핵심과제가 서로 달랐다. 서독 여성들에게 주된 관심은 젠더 문제인 데 비해, 동독 여성에게는 전쟁·민족주의·경제위기·민주주의의 부재·사회의 붕괴 그리고 시민사회의 건설 등이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였다. 거기다가 동독 여성들이 40여 년간 외존해온 체제가 붕괴한 상황에서 여성문제 이전에 남성과 여성의 협력관계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동독 여성들이 생각하기에 여성문제는, 서독 페미니스트와는 달리 근원적인 불안요인들, 어떻게 어린이를 제대로 먹일 것인가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자유 대신에 생계의 안정이 필요했고, 해결해야 할 많은 일상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었다. 이에 비해 서독 여성들은 여전히 남녀관계나 낙태문제 등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어떻게 페미니즘을 확산시킬 수 있을지에 골몰하였다. 거기다가 동독 여성들은 다른 가치관과 목표를 지니고 있었다. 동/서독 여성들은 '해방'이나 '평등' 등의 개념을 동일하게 이해하고 있지도 않았고, 동독 여성들은 '페미니즘'이라는 용어에는 더더욱 관심이 없었다.

통일 이후 서로간에 접촉이 늘어나면서, 동/서독 여성운동은 종종 정체성 문제와 관련하여 논쟁과 상호비판을 주고받았고, 이 과정에서 동독 여성운동은 서쪽의 자매들에게 방어 메커니즘, 더 나아가서 적대감을 보이게까지 하였다. 비록 동독의 여성운동이 동독 공산당정부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지만, 그들의 자의식은 과거의 사고·판단·가치관 등을 그대로 지키고자 하였다. 특히 자신들이 그렇게 열심히 투쟁하면서 지켜온 사회주의 체제와 동독의 과거가 알고의 가치가 없는 홀리건 역사의 한 장으로 치부되는 것에 동독 여성들은 반발하였다.⁸⁸⁾ 더욱이 동독인들이 통일국가 내에서 '이동국면'으로 취급당하기

88) Nanette Funk, "Gibt es einen grenzüberschreitenden Feminismus zwischen Ost und West?," Christiane Lemke, Virginia Penrose und Uta Ruppert, Hgs., *Frauenbewegung und Frauenpolitik in Osteuropa*, Frankfurt/M., 1996, 36-39면.

시각하면서, 이런 '반발심으로 인한 정체성'(Trotzmentalitaet)은 오랫동안 옛 동독 지역의 남녀 모두를 사로잡은 공동의 정서였다."⁸⁹⁾

거기다가 통일국가 내에서 과거 동/서독 여성들은 노동시장의 부족한 자원을 둘러싸고 경쟁을 벌여야 했는데, 여기에서 연구소나 대학 등에 훨씬 막강한 연금을 지닌 서독 여성운동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였다. 또한 서독 여성들은 여성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훨씬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 이런 경쟁은 동/서독 여성운동의 단결을 깨뜨렸다. 특히 서독으로의 흡수통합이 이루어지고, 서방적인 가치관이 주된 준거기준으로 되면서, 서독 여성은 가르치는 자로 군림하고, 동독 여성에게는 배우는 자의 역할이 강요되었다. 생활양식, 화장, 옷차림에서 동독 여성들은 서독의 기준을 배워야 했다. 뿐만 아니라 과거 동독의 엘리트여성들은 대부분 실업자로 전락하였는데, 그들이 국가에 생계유지를 위해 신청하는 다양한 여성관련, 연구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가 서독 여성들에 의해 좌지우지되었고, 많은 재단이나 연구소의 책임자도 대부분이 서독 출신 여성에 의해 장악되었다. 그 결과 동/서독 여성간의 관계는 '권력관계'로 변모하였다."⁹⁰⁾

마찬가지로 양측의 여성들은 서로의 문화적 차이에 대해 불관용의 태도를 보여주었다. 동/서독 여성 사이의 담론에서는 '부정적인 정형'(negative stereotype)이 유통되었다. 동독 여성에게 서독이나 미국 여성은 남성혐오자로 간주되었고,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는 아이마저도 거부하는 여자들로 비쳤고, 서독 여성에게 동독 여성은 성차별주의에 유혹당하고, 페미니즘에는 관심도 없는, 가정에 종속된 존재로 여겨졌다. 이런 부정적인 정형화는 특히 물평

그외에도 Myra Marx Ferree, "The Time of Chaos was The Best," Feminist Mobilization and Demobilization in East Germany, *Gender & Society*, vol. 8, no. 4(December 1994), 597~623면 참조.

89) *Spiegel* 3, 1993, 56면; J. Reich, "Das Psychodrama um die politische Einheit," *Die Zeit* 33, 1994, 3면 참조.

90) 옛 동독 출신 여성들의 지위가 이렇게 열악해진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는 김미경, 『독일 통일과 구 동독지역의 여성: 왜 구 동독지역의 여성들은 '통일의 잃은 자'가 되었는가?』, 국제정치학회 2000년 연회 학술회의 자료집, 1~8면 참조. 그외에도 정현택, 『독일 통일과 여성인권』,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 일인학술회의 2001(2001. 2. 16~19) 자료집, 54~67면 참조.

등한 정치적 통합의 부담을 지고 있는 동독 여성들에게는 견딜 수 있는 일로 받아들여졌다. 또한 많은 서독 출신 여성들이 정부 프로젝트를 받아 동독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서독 여성들은 동독 여성의 살아온 삶에 대한 일방적인 저술가가 되고, 동독 여성들은 그 대상이 되면서, 이런 정형화는 더욱 고착되는 경향을 보였다.

동/서독 여성운동간의 10년에 걸친 불화와 갈등 이후, 최근에 와서 동/서 지역의 여성들은 서로 접근하면서, 여성문제에 대한 공동작업을 모색하기 시작하고 있다. 여성고용창출의 일환으로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과거 동독지역에 자생적인 여성운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여성도서관, 여성센터, 여성교육센터 등의 다양한 여성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다. 동/서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페미니즘을 위하여, 이한 양 지역 여성들은 새로운 행동규칙을 만들어가고 있다. 타자와의 차이를 인정하고, 타자를 비판하기보다는 먼저 이해하기, 갈등이 생겨나면 이를 고백하고 가시화하기, 사용되는 개념들의 서로 다른 의미들을 구명하기, 그리고 각각은 어떤 결정과정에 대해서도 이익을 제기할 권리를 인정하기 등이 그것이다. 또한 연구나 저술은 타자의 시각에서보다는 당자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동독 여성들의 '스스로 드러내기'가 타자에 의한 서술이나 분석보다 선호되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서독의 페미니스트들은 서부 독일 내에서도 페미니즘 자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정제를 넘어가는 페미니즘'을 주장하기보다는 구체적인 공동의 활동을 통해 서로간의 신뢰를 쌓아가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재정지원이나 프로젝트 선정에 있어서도 동독 여성들이 결정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더불어서 동/서독 여성들은 최근에 와서 대화와 의사소통의 기회를 넓혀가고 있다.⁹¹⁾

5. 남북을 아우르는 여성주의를 위하여

91) Nanette Funk, 앞의 글, 36~39면; Myra Marx Ferre, "Was heißt Feminismus?: Frauenbewegungen und feministische Identität von Frau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Christiane Lemke, Virginia Penrose und Uta Ruppert, Hgs., 앞의 책, 112~25면.

남북 여성의 만남에서 중요한 점은 남과 북의 여성이나 여성의 지위를 단순하게 비교·평가하려는 자세는 버리는 일이다. 우선 필요한 전략은 서로의 차이를 알고 이해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50여 년 동안 폐쇄된 집체 문화의 사회, 고난의 행군 시기를 보내면서 전국민이 생존에 몰부림치고 있는 북한 사회의 여성을 우리와 단순비교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마찬가지로 남북 사이의 동질성을 쉽게 추측해내려는 발상도 위험하다. 오히려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제대로 된 '북한 여성 알기'이다.

최근에 여성들 사이에서 북한의 '긍정적 이질성'을 통해 남북간의 '부정적 동질성'을 해체할 것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⁹²⁾ 특히 1990년대 들어와 북한 여성의 여성성에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북한 여성에 대한 두 가지 정형이 가능해졌다. 그 하나는 북한 여성의 여성미를 남한식 '미의 신화' 속으로 포섭시키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앞에서 이미 언급한 대로 민족문화의 정수로 간주되는 '전통적인 여성미'를 예찬하는 시각이다. 그러나 이 양자는 모두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북한 여성을 남한식 '미의 신화'에 통합시킬 경우, 북한 여성은 촌스럽고 구식인 패션과 미용으로 인해 주변부에 배치되면서 내무식민지를 아를 열려가 있다. 그러나 반대로 북한 여성이 지닌 전통적인 미가 강조될 경우, 이는 남북 사이에 부정적 동질성을 부채질하면서 가부장적·민족주의적 담론을 강화시킬 우려가 없지 않다.

진정한 남북 여성의 통합을 위해서 우리에게 '제3의 길'이 필요하다. 이는 다름아니라 북한 여성이 지닌 긍정적인 이질성을 무각시키는 것을 통해, 남의 여성에게 북의 여성들이 지닌 여성적 경제성 속에서 남한 사회에 필요한 대안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북한 여성들의 사회적 생산 참여에 대한 자긍심, 솔직함, 활달함, 공적 영역에서 쌓아온 자의식, 지역공동체에의 헌신 등은 남한 사회의 여성에게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덕목이다. 북한의 여성성이 지닌 이런 부분들을 부각시키면서, 북한 여성을 남한 사회의 담론에서 정당하게 자리매김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92) 조순경, 「가부장적 시장경제와 가부장적 계획경제의 만남: 남북 경제협력과 여성노동」, 『여성주의 시각에서 본 남북교류의 문제』, 2000년도 한국여성학회 3차 월례발표회 자료집, 22면 참조.

또한 북한 여성의 긍정적 이질성에 대한 찬사는 향후 남/북한 여성의 대등한 만남을 준비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혹자는 이런 주장은 북의 체제가 지닌 문제점, 예를 들면 개인승태나 여성에게 순종과 희생한 노동을 강요하는 사회분위기 등의 문제점을 덮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북한 여성이 지닌 부정적인 여성성의 측면이나 열악한 지위에 대한 비판과 투쟁은, 북한 여성 그들의 몫이다. 우리 남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남한 사회에서 통용되는 북한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와 가부장적 담론에 필요한 싸움을 계속하는 일이다. 남한 여성들은 북한 여성과의 만남에서 설부른 페미니즘을 설교해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남북간의 민간교류가 자칫 남성교류, 경제교류, 기독교 증 교류로 흐르고 있는 데 대한 여성운동의 비판이 필요하다. 경제력을 지니지 못한 여성의 경우, 북한 여성과의 교류를 뚫지 못하고 있고, 자연히 서로를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축소된다. 따라서 남북 여성교류에 대한 남한 여성계의 지속적인 요구, 여성교류에 대한 국가의 특별지원 요구, 정부의 경제지원에서 여성경제인들에 대한 우대조치 등을 통해서, 남북간의 여성교류를 확산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이다. 특히 금년 6,7월에 민간교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남한 여성운동은 여기에서 여성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북에서 여성의 정치참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권력층 내에서는 여성의 영향력이 미약하여, 여성을 배려하는 통일정책이 수립되지는 못한 것 같다. 따라서 우리 여성운동은 통일정책 수립과 그 집행과정에 여성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할당제 실시를 촉구해야 한다. 특히 통일관련 전문위원회에 여성비율을 높이고, 통일부 내에 여성담당 부서를 설치하는 것을 통해, 통일 정책에 여성의 참여가 늘어난다면, 이는 북한당국에 동일한 수준을 받게 만드는 압력수단이 되리라 생각한다. 정부당국간의 실무회담에서도 여성의제가 비중있게 다루어지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 북한에서는 NGO운동이 부재한 만큼, 당국간 논의를 통한 여성의제의 채택도 불가피한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여성들에게 통일을 향한 미래는 열려 있다. 우리 여성들이 회구하는 평

화강콘의 시대는 어떤 내부식민지도 생겨나지 않는, 성평등과 민주주의가 아울러 실현되는 공간이다. 그런 점에서 여성들은 '뺨뺨'에 호소하는 통일론, 통일이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주리라는 실리론을 넘어서서, 통일사회 자체가 대안사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위해 북한 여성과 단결하여 투쟁해야 할 것이다. □

2001

여성평화아카데미

겨울강좌

- 학교내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여교사 연수
- 일시 : 2001년 12월 21일 ~ 23일
- 장소 : 청소년봉도수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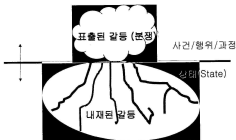
갈등의 평화로운 해결을 위한 이론

이 재 영
(KAC 평화담당 간사
EMU CTP 석사과정)

갈등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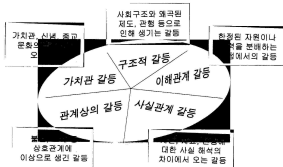
부정적 인식	긍정적 인식
*갈등은 역사적 산물 *평형상태의 상실과 부조화 등 역기능 강조 *갈등은 제도적, 권위적, 강압적 방법으로 해결내지 통제가능 *갈등이 없는 사회=건강한 사회	*갈등은 역사 변동의 원동력 *사회통합/발전을 위한 구조적 불연성 등 순기능 강조 *갈등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가능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사회=건강한 사회

분쟁과 갈등



: Escalation Spill-Over

갈등발생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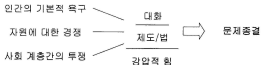


Christopher Moor (1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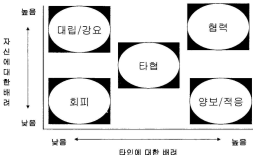
원인
(Why?)

방법
(How?)

결과
(What?)



갈등해결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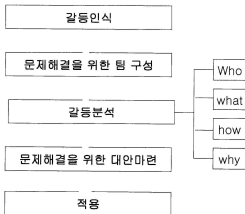


문제해결의 접근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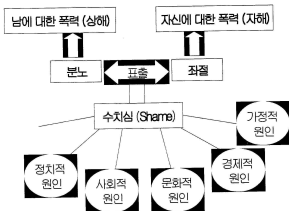
협상(Negotiation)	조장(Facilitation)	중재(Mediation)	재정(Arbitration)
제3자의 개입 없이 갈등 당사자들이 직접 문제해결을 위해 성과 목표를 따져가며 쌍방이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 자발적 합의 과정을 나타내는 것	내재된 갈등이 밖으로 드러났거나 또는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가 적절한 진행과 대화의 조절을 통하여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사회자의 역할을 하는 것	대립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중립적 관점에서 쌍방의 합의하에 갈등 당사자들 스스로 상충적 합의에 이르게끔 도와주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	갈등 당사자들이 아닌 제3자가 문제해결을 위해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계 발전을 위해 쌍방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제시하고 결정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것

← 약
문제해결과정의 통제력
강 →

문제 해결 과정



폭력의 원인분석



평화 형성의 단계

평화 조성

(Peacemaking)

서로 적대적인
쌍방을 떨어트려
놓음으로써
더 이상 폭력적
상황이 나빠지지
않도록 막는 것

평화 유지

(Peacekeeping)

나누어진 쌍방이
다시 폭력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고, 비폭력적인
현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

평화 건설

(Peacebuilding)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을 분석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평화적 관계를 지속
할 수 있는 하부
구조를 구축하는 것

평화건설 (Peacebuilding)

평화는 단순히 시간적 상황이나 상태가 아니라, 사회내부구조 전반에 걸쳐 만들어지고 지켜지는 역동적인 사회구조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갈등구조 해소를 위한 평화건설은 다양한 사회계층에 걸쳐, 그 사회 안에 화해를 위한 자원(resource)을 강화하고 외부의 지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하부구조를 만들어 가는 장기적인 계획을 요구한다.

결국, 평화라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화해를 이룩하고 지키고자 하는 다양한 구성원과 종합적인 활동이 기초가 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화해 (Reconciliation)

진실 (Truth)

인정, 명확,
폭로, 정확

자비 (Mercy)

수용, 용서,
후원, 치유, 동정

화해

정의 (Justice)

평등, 배상,
개선, 수정

평화 (Peace)

화합, 연합,
안녕, 안전, 존중

John Paul Lederach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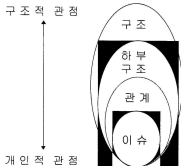
갈등변환 (Conflict Transformation)

갈등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겪을 수 밖에 없는 필연적인 삶의 한 부분이다. 따라서, 갈등을 완전히 해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지만, 갈등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표출되는 것은 개인적, 사회적으로 매우 불행한 일이므로 평화적 방법으로 갈등이 해소되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갈등변환의 개념은 갈등이 생성되고, 진전됨으로 생겨나는 개인적, 관계적, 구조적, 그리고, 문화적 변화들을 복합적으로 설명하는 렌즈를 공급하는 것이며, 각 단계별로 비폭력적 메커니즘을 통하여 평화적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준비된 개입(Intervention)을 의미한다.

이러한 노력이 제도와 사고에까지 영향을 주어 건설적이고 평화로운 문제해결의 문화가 생겨날 수 있도록 infrastructure를 만들어가는 과정과, 이를 계속적으로 지속해 갈 제도적 장치와 문화적 이해를 넓혀 나가는 전반의 움직임이 갈등변환 개념이다.

갈등변환을 위한 초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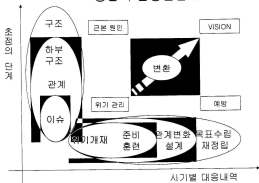
이슈 : 사람들이 나뉘고 대립하게 되는 가장 급박하고 가시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관계 : 하부구조 안에서 개입시점으로 사용될 수 있는 포인트나 관계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구조 : 갈등구도에 영향을 주고 지속되게 하는 구조적 문제점은 무엇인가?

비전 : 어떻게 당면 문제를 둘러싼 가시적 갈등이 관계적, 지역적, 구조적 변화의 기회가 되도록 할 수 있을까?

통합적 갈등변환 II



갈등변환을 위한 Key Questions

1) 갈등변환 전반에 관하여

-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 미래를 위한 공동의 비전은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 현실의 문제로부터 미래의 비전을 위해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가?
- 그 변화의 과정을 유도하고 지속하기 위
해 필요한 일은 무엇인가?

갈등분석 (Conflict Analysis)

갈등해결을 위한 행동 전략을 수립하려면 갈등을 둘러싼 다이내믹과 관저 및 쟁점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관점으로 갈등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관련된 쟁점들과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자.

갈등분석이란 무엇인가?

-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과 현 상황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배경을 이해하는 것
- 분명하게 드러나는 주요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당사자(집단)들을 파악하는 것
-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과 관점을 이해하는 것과 동시에 당사자들 서로 서로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
- 갈등상황을 지탱하고 있는 요소들과 경향들을 파악하는 것

☆ 갈등분석은 한번의 작업으로 끝나지 않으며 갈등을 둘러싼 상황이 변화·발전함에 따라 여러 번에 걸쳐 진행되는 작업 과정이다. 따라서 변화·발전하는 요소 및 상황에 맞게 행동전략도 수정해 나가야 한다.

1-2. 갈등분석 기법 (Tools for Conflict Analysis)

갈등분석의 기법

- 기법1. 갈등의 5단계 (Stages of conflict)
- 기법2. 연대표 (Timelines)
- 기법3. 갈등 지도 (Conflict mapping)
- 기법4. ABC 삼각형 (The ABC Triangle)
- 기법5. 양파 (The Onion)
- 기법6. 갈등 나무 (The Conflict Tree)
- 기법7. 영향력 분석 (Force-field analysis)
- 기법8. 기둥 (Pillars)
- 기법9. 피라미드 (The Pyramid)

위 9가지 기법들의 적용 순서는 사례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 또한 적용사례에 맞게 이 기법들을 응용해 보면 더욱 효과적으로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어느 조직이 갈등해결을 위해 행동을 풀입하려 할 때, 이 기법들을 사용하여 갈등 상황을 분석하면 조직 구성원들에게 공통의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이 기법들을 사용하는 갈등분석은 갈등 상황에 놓여 있는 당사자들에게 각각 다른 속의 입장과 관점에 대해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깊이 있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기법 : 갈등의 5단계 (Stages of conflict)

갈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활동성(activity)과 강도(intensity), 긴장감(tension), 폭력상태(violence)라는 차원의 각각 다른 정도와 관계들을 거치면서 변화해 간다. 따라서 갈등의 5단계 기법은 특정 시간대에서 갈등의 강도(intensity)가 강화되고 약화되는 과정을 그래프로 그리며 분석하는 것이다.

기법의 목적

- 갈등의 상승(escalation) 및 하강(de-escalation)의 주기와 단계를 눈으로 확인하기
- 현재가 어떤 상태인지를 판단하기
- 앞으로의 갈등을 예방하려면 이후 갈등의 상승 패턴을 예상해 보기

언제 사용해야 할까? 분석작업을 시작하면서 갈등의 패턴을 구별할 때, 나중에 전략을 수립할 때

음음 당사자들 각각의 관점에서 단계를 분석해 본다.

갈등의 5단계는

- 1단계 : 갈등 전단계 (pre-conflict)
- 2단계 : 대치 국면 (confrontation)
- 3단계 : 위기 국면 (crisis)
- 4단계 : 결말 (outcome)
- 5단계 : 갈등 이후 단계 (post-conflict)

기법 : 양파 (The Onion)

당사자들 각각이 갈등에 대해 말하는 바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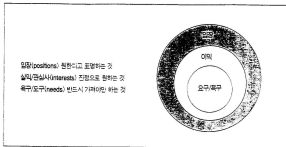
기법의 목적

- 각 당사자들이 표명하는 공적 입장을 넘어서서 당사자들의 실익(interests)과 욕구(needs)를 이해하기
- 향후 토론을 진전시키기 위한 기초로서 당사자들간의 공통 기반(common ground)을 발견하기

언제 사용해야 할까?

- 갈등 상황의 다이내믹을 이해하기 위한 분석을 시도할 때
- 갈등 당사자들간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준비할 때
- 중재 또는 협상 과정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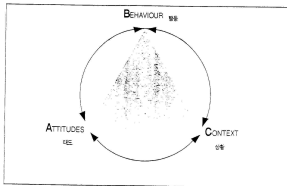
(그림 : 양파)



기법 : ABC 삼각형 (The ABC Triangle)

관동이 태도(Attitude), 행동(Behaviour), 상황/맥락(Context)이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면서 각 차원이 상호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에 기반하여 주요 당사자를 각자의 ABC에 대해 파악하는 분석 기법이다.

(그림 : ABC 삼각형)



기법의 목적

- 주요 당사자들 각자의 ABC를 파악하기
- 각자의 ABC가 갈등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 각 당사자의 욕구(needs) 및 가장 원하지 않는 것(fears)에 대해 ABC를 연관시키기
- 개입 지점을 파악하기

언제 사용해야 할까?

- 각 당사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자 할 때
- 이후 갈등해결을 위한 행동/개입을 통해 개선되어질 수 있는 지점들을 파악하려 할 때
- ABC 중 한 차원에서 변화가 다른 차원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예측하는 것이 필요할 때

용어

각 당사자별로 ABC 삼각형을 완성한 후, 삼각형의 중앙에 해당 당사자의 주요 욕구/요구(needs)나 외하고 싶은 것(fears)을 적시한다.

기법 : 갈등 나무 (The Conflict Tree)

갈등의 주요 정점들을 찾기 위해 나무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시각적 도구

기법의 목적

- 갈등의 원인과 결과에 관해 토론을 촉진시키기
- 핵심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합의하기
- 갈등을 둘러싼 문제들 중에서 해결/개입의 우선 순위 정하기
- 원인과 결과를 서로서로 연관시키고, 조직의 초점에도 연관시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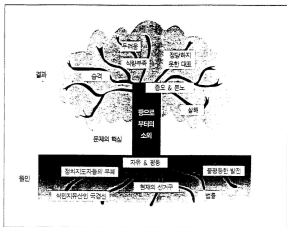
언제 사용해야 할까?

- 한 집단 내에서 갈등 상황의 핵심 문제에 대한 이견이 있을 때
- 어떤 문제부터 개입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할 때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

- 핵심 문제는 무엇인가?
-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 이 문제로부터 초래된 결과들은 무엇인가?
- 우리가 개입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갈등나무 기법은 하나의 팀, 조직/기관, 집단 또는 공동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들을 식별한 후 각각에 대해 (1) 핵심문제, (2) 원인, (3) 결과라는 세 가지 카테고리들로 분류하는 방법이다.



기법 : 갈등 지도 (Conflict mapping)

갈등 당사자들간의 관계의 성격(협력적/비협력적/적대적) 및 힘의 균형 등을 보여주는 지도를 그림으로써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기법이다.

기법의 목적

- 관련 당사자들간의 관계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기
- 권력의 소재를 파악하기
- 각 당사자들의 활동이나 접촉면의 상대를 점검하기
- 같은 편 또는 동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 상대들을 파악하기
- 갈등해결을 위한 행동/개입을 시작할 수 있는 지점을 파악하기
- 이미 진행된 일들에 대해 점검/평가하기

언제 사용해야 할까?

- 분석 과정에서는 다른 분석기법들과 함께 초기에 사용
- 전략수립 과정에서는 행동 개시 지점을 파악하고자 할 때

용어

관련 당사자들과 영향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권, 권력 관계, 기본적인 욕구(needs)²⁾와 가장 원하지 않는 것(fears) 등을 지도로 그려보는 것

적극적 청취 기술(Active Listening)

박수선 (평화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팀장)

적극적인 듣기의 목적, 기능

- 말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지금 자신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주의깊게 듣고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
- 말하는 사람의 본뜻이 듣는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 갈등 상황과정에 쌓인 감정을 존중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이완되고 내적인 긴장을 해소하게 된다.
- 당사자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 동안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풀이해보는 기회를 갖게 된다.

적극적인 듣기 요령

상대방의 말을 듣는 데는 노력이 필요하다. 말을 하는 사람에게 온전히 주의를 집중하라.

민내심을 가지고 들어라.

일단 개인적인 감정이나 의견을 접어라.

- 말하는 사람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상체도 약간 그쪽으로 기울인다.
- 미마를 손을 서로 마주친다.
- 말하는 이의 이야기에 대한 관심 및 이해의 표시로 고개를 자주 끄덕인다.
- 이야기 내용에 따라 적절한 표정을 지어보이고 감감을 표한다.
- 불분명한 대목에 대해 효과적인 질문을 함으로써 말하는 이의 메시지가 정확히 전달-이해되도록 한다.
- 마지막 속의 '관련 질문'이 아니라 '열린 질문'을 통해 당사자의 입장과 감정 및 생각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를 얻는다.

바꾸어 말하기(Paraphrasing)

- 바꾸어 말하기는 내가 상대방의 말을 주의깊게 듣고 있다는 것,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
- 바꾸어 말하기는 상대가 말한 것을 단순히 반복하는 것, 내가 대답하기 전에 상대가 말하고, 느끼고 의 미하고 있는 것을 정확히 그리고 상대방이 만족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재진술하라.
- 상대는 처음 말한 것을 분명히 하고 추가할 기회를 준 데 대해 고맙게 느낄 것이다. 진술이 개념뿐만 아니라 감정을 포함하고 있을 때 는 바꾸어 말하기는 더 힘들어진다. 비언어적 만시 또한 중요하다.
- 내가 말하기 전에 "당신이 ~라고 말했고 나는 ~라고 말한다." 우선 상대방이 말한 것("당신은 ~라고 말 했다")을 이야기하고 그 후에 대답하라. ("나는 ~라고 말한다.")

중재(Mediation)

1. 중재의 3원칙

(1) 중립성 Neutrality - Impartiality

중재인은 중재를 할 때 분쟁의 당사자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지켜야 한다.

- 중립성이 의심되는 사람에게는 분쟁의 당사자들이 중재를 부탁하지 않는다. 중재인의 요청도 거부한다.
- 중재인이 권파적인 태도를 취하면 중재의 효과가 상실되고 중재 드문 당사자가 중재를 거부할 수 있다.
- 중립적인 입장에서 중재를 해야 분쟁의 당사자들 모두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줄 수 있다.
- 어떤 분쟁의 정황에 대해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그 분쟁에 중재인이 될 수 없다.
- = 중립의 후가지 형태 =
- 소극적 중립 : 명징중립, 제한적, 현상유지적
- 적극적 중립 : 넓은 의미의 중립, 분쟁 당사자간 합의 불균형, 정보-자원의 권중 상태일 때 균형잡기 등

(2) 자율성 Voluntariness - Autonomy

중재는 분쟁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중재에 참여해 직접 모든 결정을 내리며 스스로 해결책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 분쟁의 당사자가 분쟁의 해결을 원할 때 중재가 성립될 수 있다. 당사자 모두 또는 어느 한쪽이 분쟁의 해결을 원하지 않으면 그 분쟁은 중재를 통해 해결될 수 없다.
- 당사자들이 100% 자발적으로 중재에 임하기를 기다리기에는 분쟁의 사회적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분쟁 당사자들에게 중재에 임할 것을 권유할 수는 있다(예: 조정전치주의).
- 중재석상에서 모든 결정권은 분쟁 당사자들에게 있다. 중재인은 중재석상에서 분쟁 당사자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 당사자들은 스스로 판단해서 자신이 직접 만든 해결책에 더 애착과 만족을 느낀다. 그래야만 합의안도 스스로 실행하게 된다.

(3) 비공개 Confidentiality

중재인은 중재과정에서 오고 모든 대화내용에 대해 당사자의 허락없이 외부 혹은 다른 당사자에게 공개해서는 안된다

- 중재석상에서 오가는 이야기가 외부에 절대 공개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분쟁 당사자들이 자유롭고 자신편취하게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다. 정보의 자유로운 교류없이는 진정한 해결책을 찾기 힘들다.
- 언론발표-연구 등의 목적으로 중재내용을 공개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2. 중재의 절차, 과정

중재의 5단계

준비단계	• 분쟁 당사자 또는 중립자의 중재요청 • 중재 참가자 선정 • 중재 절차 및 전략 구상 • 중재 참가자 교육 (필요할 경우) • 중재 시간 - 장소 - 비용 등 협의
1단계 : 도입 Introduction	중재의 원칙 및 절차, 그리고 중재 참가자들이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당사자들의 중의를 얻는다. • 중재의 3원칙 • Groundrules • 우호감 - 친밀감 조성
2단계 : 이야기 듣기 Story-Telling	각 분쟁 당사자들이 차례로 분쟁의 원인과 진행과정,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요구사항, 감정 등을 이야기하도록 한다. • Active Listening • 공감 • Paraphrasing • 효과적인 질문하기
3단계 : 쟁점 규명 Issue-Clarifying	쟁점을 구체적으로 밝히나가고 분쟁의 근본원인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한다.⁴⁾ • Position-Interests의 분리 • Underlying Interests/Needs/Problems
4단계 : 문제 해결 Problem Solving	쟁점 혹은 분쟁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고 당사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함께 모색한다. • Brainstorming • Reframing. • Search for Common Ground • Transforming Relationship • Fragmentation • Caucus
5단계 : 합의 Agreement	단계에서 만들어낸 해결책을 토대로 최종적인 합의문을 작성하고 미행을 확실한다. • Types of Agreement • Joint-Monitoring • 합의서 작성법

3. 문제해결 과정에서의 4원칙 Roger Fisher & William Ury, 'Getting to Yes', 1981)

1. 사람과 문제를 분리하라 Separate the People from the Problem
2. 입장이 아닌 실익에 초점을 맞추라 Focus on Interests, Not Positions
3. 상생적인 대안을 개발하라 Invent Options for Mutual Gain
4.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라 Insist on Using Objective Criteria

평화교육

김정수(평화를만드는여성의 정책기획위원장)

사회구조의 변화(Working on the Social Fabric), 즉 갈등의 근원이 되는 상황과 그에 대한 태도를 바꾸기 위한 많은 활동들에서,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세 가지 주제 가운데 하나,

- 평화와 정의를 위한 교육
-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 증대
- 민주주의의 발전

갈등의 잠재적 요소, 심각한 사회-정치적 갈등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갈등 이상의 사회 구조의 뿌리인 신념, 가치, 태도에 의해 지지되는 역사와 제도들이 장기적 차원에서 다뤄져야 함. 즉 공개된 갈등의 강력함과 폭력성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들 사회구조의 문제를 위급해야 함.

■ 평화의 개념

소극적 평화 : 전쟁과 물리적 폭력의 부재로서의 평화

적극적 평화 : 사회의 제도적, 구조적 폭력이 극복된 정의에 기반한 평화

■ 폭력의 개념 (잠재적, 물리적, 구조적, 문화적 폭력)

구조적 폭력: 노르웨이의 평화연구가 요한 갈통(Johan Galtung)의 개념

"인간이나 인간집단의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자기실현의 현상(actual realization)이 그 사람들의 잠재적인 실현가능성(potential realization) 이하로 억압당하는 영향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폭력이 작용한다." 즉 폭력이란 실현가능성

과 현실의 격차를 확대하고 이 격차의 축소를 방해하도록 작용하는 것.

예) 선진국에서 80세까지 살 수 있는 사람이 개발도상국에서 어려서 기아로 사망하거나 질병으로 약을 구하지 못해 죽을 때, 여기에 폭력이 작용.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AIDS로 사망하는 것은 선진국의 초국적 제약회사에서 AIDS 백신이나 약의 가격을 통제,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 약이 너무 비싸서 치료를 하지 못하고 사망하게 될 때, 여기서 AIDS와 치료약을 둘러싼 구조적 폭력이 작용.

또는 IMF 통화관리체제 하에서의 구조조정은 구조적 폭력의 사례 가운데 하나.

■ 평화교육

1. 차이와 다양성을 수용하고 연결함을 통해 세계연석(global awareness)형성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자기와 다른 사람들, 지구와 더불어 조화롭게 살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지구화와 재부족화(retribalization, 분권화 fragmentation)의 현실 속에서 국가의 테두리를 넘어선 교육을 통해 어떻게 다양성, 차이(다름)를 인정하여 공존하고, 관용하여 평화롭게 살 것인가에 관심을 가진다.

2.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 현재의 문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습득. 미래에 대한 질문(예: “현재와 같이 진행되면 어떤 미래가 될 것인가?”, “어떻게 더 나은 세계를 건설할 것인가? 등)에 대하여 사람들의 창조적 상상력을 이용하여 긍정적 미래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그려본다.

3. 참여자 중심의 평화교육: 자기 존중, 관용, 공감, 정의, 공평 등의 태도를 개발하여, 수동적 방관자가 아닌 이 세계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록 함으로써 협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평화감수성 훈련의 필요성)

4. 문제제기로서의 평화교육

'문제제기교육'(Problem Posing Education)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발견하는 세계에서의 삶의 방식을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킨다. 사람들은 고정된 존재로서의 세계가 아닌, 과정과 변환(transformation)으로서의 세계를 보게된다.

(파울로 프레이리)

5. '저항의 문화'를 형성하는 평화교육: 현재의 공식-비공식 평화교육에 대한 비판은 사람들은 각자에게 부드럽지만 대하도록 하는 데 의존한다는 것. 평화교육 실천가들은 평화교육이 미디어와 정부의 부정적 선전, 사회의 공공연한 폭력성, 권력 있는 그룹에 의한 조작 등에 대항하는 '저항의 문화'(culture of resistance)를 형성해야 할 필요성을 전감하고 있다.

■ 평화교육을 바라보는 두 가지 방법

1. 과정(process)으로서의 평화교육

사회의 중요한 문제와 경향(trends)에 초점을 맞추고, 학교와 대학을 통해 적극적인 평화를 향상시키는 장기적이고도 광범위한 기반을 갖춘 프로그램, '평화교육은 절망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이다'(Kevin O'Donnell) 평화교육은 세계의 문제에 대하여 어떤 견해인 대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업, 경쟁, 협동, 연관된 행동(associated behavior)을 통해 평화형성(peacemaking)을 지향하는 하나의 과정.

2. 예방(prevention)으로서의 평화교육

구체적인 갈등/분쟁을 해결하고 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다 집중적인 활동, “예방이 치료/치유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낫다” (Kevin Clements) 에) 분노감, 좌절, 공격성, 스테레오 타입 줄이기 훈련 등

다름 '에' 대하여

● 대상 : 초등학교 2-6학년

● 과정

① 학생들과 함께 언제 그들이 자신이 '다르다'고 느끼는지, 어떻게 느껴지는지 등에 대해서 토론한다. 토론은 다름으로 인해 부정적으로 느꼈던 것을 말하는 데 집중될 것이다.

② “모든 사람은 때때로 '다르다' 이것은 반드시 부정적일 필요는 없다. 종종 자신이 남과 다름으로 인해 아주 이익이 될 때가 있다”라고 선생님이 설명한다. 다름으로 인한 긍정적 측면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학생들을 격려한다.

● 토론 주제

① 만약 내가 우리 반에서 유일한 여학생 혹은 남학생이라면 어떨까? 그로 인한 장점은 무엇일까?

② 만약 내가 유일한 장애인이라면?

③ 만약 내가 백인학교에서 유일한 유색인이라면?

④ 만약 내가 우리반에서 유일하게 배구를 좋아하는 아이라면?

⑤ 만약 내가 오늘 유일하게 도시락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다면?

● 주의사항 : 너무 심각하지 않은 소재들을 선택하여 토론하도록 한다.

'분노'에 대한 목록 작성하기

● 대상 : 초등학교 1-6학년

● 과정

① '분노'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최대한 많이 나열하도록 한다.

② 목록을 보면서, 어떤 방식의 표현이 위험하고 상처를 주고 공격적이진지 이야기하도록 하고 여기서 '추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설명한다.

③ 분노를 폭발시킬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전체 학생들로 하여금 목록에 대한 반응을 권도마임을 통해 표현하도록 한다. 분노의 다양한 표현을 가지고 여러번 권도마임으로 만 든다.

● 토론

① 목록 가운데 어떤 것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위험한 것인가?

② 이들 가운데 어떤 것이 사람들을 더 문제에 빠뜨리게 할까?

③ 분노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 가운데 경험한 것이 있으면 소개해보도록 한다.

‘공격성’에 대하여

● 대상 : 초등학교 4-6학년

● 과정

① 칠판에 ‘공격’이란 단어를 쓰고, 그 의미가 ‘사람들을 신체적 혹은 감정적으로 해치려는 시도’라고 설명한다.

② 질문: 공격적으로 행동한 적이 있는가? 어떤 사람을 해치려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가?

③ 설명: 갈등상황에서 화나거나 좌절한 사람들은 종종 공격적으로 행동한다는 점, 그러나 앞으로 몇 주동안 학생들은 감정을 비공격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는 점들에 대해 설명한다.

● 토론

① 사람들은 왜 공격적으로 행동하는가?

② 공격적 행동의 결과는 무엇인가?

③ 공격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을까?

④ 무엇이 공격적으로 행동하도록 만드는가? 동등

⑤ 고학년 어린이들과는 공동체와 세계의 공격적 행동들에 대해서 조사해 볼 수 있다. 여기서 ‘사람들은 본래적으로 공격적인가?’라고 물어봄으로써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또 다른 질문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혹은 그렇지 못한 행동은 무엇인가?’ 등에 대해 질문할 수 있다.

■ 공식적 평화교육과 비공식적 평화교육

1. 공식적 평화교육 : 평화는 다음과 같은 주제에서 교육될 수 있다.

- * 종교교육: 각 종교의 평화사상을 찾아봄
- * 역사: 비폭력과 평화건설을 위한 중요한 사례 연구.
- * 지리: 편견 차단, 인간의 상호연관성을 보여줌.
- * 과학: 인간의 기본적 요구와 과학적 책임에 대한 질문을 제기함
- * 문학: 평화와 갈등에 대한 작품을 읽고 분석함

(사례)

① 팔레스타인의 평화단체

다양하게 실천되고 있는 평화교육 : 공식-비공식 영역, 어린이-성인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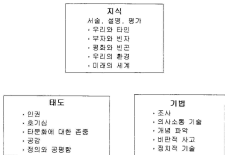
상, 공통으로 인지되는 문제에 대응하여 그 내용과 방법이 개발될 때 가장 성공적임.

- 팔레스타인의 평화단체 PIR(Pathway Into Reconciliation, 화해로의 오솔길)은 정식 교과외 구성을 포함하는 평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과과정 개발 팀(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요르단)은 함께 공동의 평화교육 커리큘럼을 개발.
- 목표: 가치(보편적 인권, 민주주의, 다원주의), 내용(갈등의 역사에 관한 다양한 견해), 기법(문단을 피하고 적극적으로 청취하는 법) 등을 통합시키는 것.
- 과정 :
 - 각 나라의 교육부가 사용하는 기존의 커리큘럼 연구, 위의 가치, 내용, 기법을 문화적으로 주의깊게 소개하는 방법을 발전시킴
 - 문학, 역사, 국민훈리, 사회학 등에 초청.
 - 2년의 홍보기간 후 16개의 이스라엘-유대인 학교,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학교, 팔레스타인학교 등에서 사용하여, 약 2000명의 학생들이 이 교육을 받게 됨.

② 영국의 '세계 학습'(World Studies) 프로젝트의 특징

- 목적: 적극적 평화의 함양
- 특징: 미래를 지향, 학생들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와 자신이 바라는 미래에 대해 생각하도록 함.
- 다학제적 영역을 포괄함 : 커리큘럼 안에서 다양한 주제들에 통합되도록 함
- '평화교육' 보다는 '세계 학습'이라 불린 것은, 때로 '평화교육'이란 표현이 의도하지 않은 정치권의 관심을 자극할 수 있기에 바람직하지 않음. 영국정부는 평화교육은 비국적이라 비판하고 금지하려 시도한 바 있음.

《세계학습》의 대상



2. 비공식적 평화교육

학교평화교육의 한계는 교육의 목적이 구체적 실천보다는 시험에서의 성공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음, 평화교육의 많은 부분이 사람들이 일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비공식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학교평화교육과 마찬가지로, 비공식적 평화교육 역시 우선적으로 평화의 태도를 다루고, 그 목적은 개인의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평화교육을 위해서 규칙화된 교사-학생 관계 보다는 안락한 분위기(개방적이고 사람들이 그들에게 중요한 문제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행동과 태도에 대해 성찰하고 미래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어려운 과제에 착수할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준비된 것)가 조성될 필요가 있다.

〈국내초·중·고생 평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주제	프로그램 이름	교육대상	단체명
다름과 차이 그리고 공존	여제동무평화교육	초등학생	남북어린이여제동무
비폭력, 화해, 통일	평화학교	중고생	YMCA 청소년부
타문화 이해, 상호문화 존중, 관용의 체험학습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	초중고생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차이와 차별을 주제로 한 통일교육, 평화체험학습	평화교육으로서의 통일교육과정안	중고등학생	통일을 생각하는 서울교사모임

〈평화인권연대〉 '평화행진'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명	평화행진 2000, 평화행진 2001
교육횟수 교육형태와 기간	총 2회 (매년 1회) 반평화지역에 대한 사전체험조사활동(1주일), 평화캠프(11개의 워킹으로 구성, 3박 4일), 평화행진(1박 2일)
교육목적	1. 민주적 시민으로서의 평화문화 창출 2. 평화적 심성과 가치관 훈련
교육내용	1. 의사소통, 갈등해결을 위한 중재자 훈련, 대안적 평화습관 만들기, 자발적 참여를 위한 훈련 2. 군사주의와 여성, 군사주의와 환경, 세계화와 군사화, 군축, 세계 평화운동 3. 여성폭력, 시위문화, 표현의 자유, 대체복무제도, 환경문제
교육방법	발제, 강의, 질의응답, 토론 / 체험학습, 놀이, 참여, 상황극, 조별 이야기
기대효과	1. 평화를 준비하는 대안마을 구현 2. 자율적 평화마인드 갖기 3. 평화가치 실천하기 4. 서로에 대한 관용과 연대 구현

2001년 통일부 용역과제, 국내외 평화교육사회의 통일교육발안회의 적용방안연구, 평화불만 드는여성회

■ 평화교육의 실천분야

평화교육 - 자원들		
	높은 단계의 자원들	낮은 단계의 자원들
장기적	▶ 지속가능한 평화형성을 지향하는 장기적 공식 평화교육 프로그램 - 정의와 평화 문제에 관한 학교와 대학의 커리큘럼 중심의 프로그램, - 라디오 프로그램 - 평화, 갈등연구에 대한 웹사이트, 인터넷 상의 자료	▶ 지속가능한 평화성을 지향하는 단기적 공식/비공식의 평화교육 활동 - 지역그룹에게 평화와 정의 문제말하기, - 학교에서 활동할 간단한 평화-정의 관련 자료 - 의식화 이벤트-평화축회, 대중세미나 등
단기적	▶ 긴급한 평화-정의 문제에 대한 단기적 공식/비공식 평화교육 프로그램 - 교사, 학생을 위한 중재훈련 - 평화-정의관련 활동가를 위한 분쟁 해결과정(conflict-handling course) - 국제적 의식화 캠페인 - 평화 모니터링 훈련 - 인권보호를 위한 대중교육프로그램	▶ 긴급한 평화-정의 관련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적 비공식 평화교육 활동 - 대중 프로그램 개최, 평화/정의를 위한 대중음악모임 - 인권침해에 대한 의사결정 기관에 면지 - 분쟁 상황의 공동체 지도자들을 위한 중재기술 훈련

■ 해외 평화교육 사례

1. 북아일랜드의 상호이해교육

- 학교분리(School Separation-가톨릭, 개신교 학교 분리), 1997년 현재 95%의 학생들 분리학교에 다님
- 카톨릭-개신교 학교의 교류: 1970년부터 실험적 프로젝트로 시작, 초등학교 학생들은 정규 학과목에서 만나 수업, 중등교사들이 '아일랜드 역사학습' 프로그램 제작, 학생들의 공동현장학습(역사적 유적지, 박물관, 지역공동체 등), 교육부에 의한 Inter-School Contact(1987년부터) 등으로 1999년 현재

초등학교의 1/3, 중등학교의 1/2가 참여

- 통합학교(Integrated School): 전체 학생의 2-3% 정도로 참여학교와 NGO 단체들에 의해 이들 학교들의 커리큘럼 개발, 방과후 활동, 갈등해결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고 있음

- 통합교육(Integrated Education): 학부도 단체들의 노력으로 시작,

- 상호이해교육(EMU, Education for Mutual Understanding): 1970년대 초반부터 교사와 학부도, 학생들의 관심이 표명되기 시작, 1988년 <EMU를 위한 교사 가이드라인> 제작, EMU와 '문화적 유산'(Cultural Heritage)가 공식 커리큘럼에 포함

- EMU의 주제:

- ① 자기와 타인에 대한 존중과 관계형성을 촉진함

- ② 갈등의 이해와 창의적 해결

- ③ 상호의존성에 대한 자각

- ④ 문화적 다양성 이해

- EMU는 단일교과, 지식위주, 학교중심 교육과정을 넘어서 범교과적(Cross-curricular) 통합적 교육으로,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 다양한 종교교육, 아일랜드어의 공식사용, 학교 밖의 공동체로의 교육현장 확대, 북아일랜드의 역사와 현실과 이해 등의 내용으로 확대되고 있음

2. 독일: 정치교육으로서의 평화교육

- 독일의 경우는 전후에 미군정에 의한 철저한 탈나치화 정책과 더불어 민주주의와 사회적 시장경제가 정착하면서, 서독인 사이에서는 '민족적 동질성'보다는 체제에 대한 애호심이 더 강조, 즉 독일의 열기보다는 사회적 시장경제-사회복지제도-볼루타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세 가지 체제에 대한 애착이 더 강하였음.

- 서독: 통일교육을 독자적으로 매어내어 가르치기보다는, '정치교육'의 일환으로 교수되어, 통일문제는 항상 민주주의적 가치의 실현문제와 결합

- 주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평화교육에 대한 지원은 그 규모가 방대고, 또

한 정부는 공교육에 평화교육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도입

- 통일교육처럼 독자적인 교과를 설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사회과 과목 도처에서 평화교육을 시도
- 주 정부는 평화교육을 실시하는 민간단체나 교육협회 등에 대한 재정도 광범위하게 지원
- 공교육에서 실시하는 평화교육의 내용의 진보성. 예) 사회과 학습내용 - '병역거부와 대체봉사'에 대한 토론 (당장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학생들이 군입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오랜 병역거부자운동을 통해 관찰된 대체봉사의 일환으로 사회사업기관에 가서 일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토론시키는 과정)
- 지구화(Globlaization) 시대에 새로운 삶의 대안을 찾아가는교육방식: 제3세계의 빈곤과 원조문제, 인종주의 극복의 문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국인 이주자, 특히 터키인을 위시한 아랍인들이 지닌 이슬람문화 등과 어떻게 공존하며, 어떻게 다문화화를 수용할 것인가의 문제 등

• 독일의 학교에서는 1970-80년대에 "평화"가 매우 중요한 테마 교과서에서 다루어졌음.

- 공격성, 폭력, 평화개념
- 군비우정, 군비축소, 군사위협
- 동서갈등
- 남북갈등
- 지역갈등
- 안보정책의 이론적 배경 / 대안적 평화개념
- 독일연방군, NATO, 바르샤바 조약기구
- 국제기구 (유엔, 유네스코 등)
- 군대의 전쟁과 평화협정
- 사회적 방어
- 무기수출
- 군사-산업 복합체/군비지출
- 지대와 폭력의 변화 가능성

- 비엔튀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주의 하우프슐레(Hauptschule)
9학년 사회과. 수업시간- 5시간, 학습내용은 3가지 중점분야로

<학습목표>

- (1) 평화와 비평화의 개념을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 (2)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정치·사회적, 개인적 수단을 익히고, 필요한 경우에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학습내용>

- (1) 개인간, 사회간, 국가간 영역에서 나타나는 평화와 비평화
 - 소규모 집단과 대규모 집단에서의 인간행동
- (2) 슬픔과 참혹함의 실상
 - 전쟁의 슬픔과 참혹함, 전쟁포로, 가족들의 고통
 - 추방과 난민의 고통
- (3) 평화를 위한 참여의 가능성
 - 방위태세: 독일연방군, 국방의무와 병역거부
 - 정치적, 사회적 기여: 예를 들어 유연과 유연의 구조기관들, 외교, 무역, 개발도상국 원조, 문화교육, 도시자매결연 등
 - 개인적 기여: 예를 들어 여행을 통한 개별적 접촉, 캠페인, 학생교육 등

3. 남아공의 민주화과정과 교육개혁

• 남아공: 1994년 4월 민주적 선거를 통해 수 백년간 지속된 제국주의적 아파르트헤이트에 대한 투쟁을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로의 평화적 전환으로 이룩, 이후 인종분리정책의 골격을 해체하고 모든 남아공 사람들의 안녕을 존중하는 제도로 대체할 거대한 국가적 프로젝트 착수

• 1994년 이후의 교육개혁은 국가 '재건개발 프로젝트(Reconstruction & Development Project)'의 핵심부분

① 정부는 아파르트헤이트의 파괴적 유산을 극복하여 민주주의, 인권, 평등, 사회정의의 수렴하는 교육제도의 형성

② 평생교육제도의 설립을 통해 남아공 국민들이 21세기의 거대한 경제적 사회적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 첫 번째 시기(1994-1997)의 중심과제: 과거 소수 백인 지배층 중심의 법률, 분리주의

적이고 인종차별적인 자원분배 조직, 기구, 정부를 비인종주의적이고 비성차별주적인 특징을 가진 민주적 질서로 대체. 남아공국민들은 비전있는 정책, 새로운 조직, 기구, 통치기구, 자원조달 방식 등을 건전한 입법을 통해 마련하고자 함.

- 두 번째 시기(1998-2000): 트리자노 프로그램(Tirano program, working together)을 통한 제도개혁을 심화하였는데, 핵심정책의 목표는 국가의 목적지향적이고 주도적인 개입으로 교육제도 전반에 걸쳐 개혁정책의 내용이 전달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강력한 책임감을 부여

- 세 번째 시기(2000- 현재): 제도개혁에 대한 핵심적 도전에 직면, 보다 평등하고 질적으로 수준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표준과 학습자의 성과를 증가시키는 데 초점. 이 단계의 핵심적 특징은 모든 분야에서 기구의 개혁 과정을 심화시키는 것.

- 남아공은 이러한 교육정책의 틀을 짜는 데 정부 단독으로 하지 않고 여타 공공영역, 시민사회, 그리고 외부의 파트너 사이의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파트너십의 도움을 받고 있다. 그것이 양질의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는 믿을 때문이다. 결국 남아공의 교육개혁은 21세기로부터의 도전과 기회를 과거문제의 극복으로부터 출발하고자 한 것이다. 미래에 남아공이 직면하고 있는 많은 도전의 뿌리가 과거에 있기 때문이라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 남아공 교육의 과제

- 양질, 책임성, 투명성, 효율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적 서비스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 인종차별주의와 계속해서 투쟁하고, 정채성을 재신하며, 불평등을 계속해서 줄여나간다.

- 가능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 시민사회와의 혁신적인 파트너십을 추구하여 혁신적인 교육자 공동체를 건설한다.

- 일반교육·계속교육·고등교육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다.

■ 한국에서의 평화교육의 적용가능성

해의 평화교육의 공통점을 한국의 교육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1. 가치관

- 한국의 통일교육의 지향점(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유지)과 평화교육의 일반적 지향점(다름과 차이의 인정과 관용, 수용, 공존과 공생, 화해와 평화 등)의 가치관의 충돌,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인식
- 적극적 평화에 대한 인식의 부족, 국가·군사안보 중심의 가치관: 해외의 평화교육은 적극적 평화와 인간안보를 기존의 안보개념에 포함시키고 있음.
- 현재 학교교육은 현실적으로 대학입시, 세계화 시대의 경쟁력 향상등을 지향, 이는 평화교육의 일반적 가치관과 충돌
- 이상의 가치관 충돌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2. 정체성

- 해외 평화교육(갈등해결훈련을 포함하여)은 다양한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수용을 전제로 하고 있음. 다음의 수용과 관용의 정신은 다양한 정체성(인종, 성별, 종교, 문화)의 현실 속에서 공존과 공생을 위한 필수적 덕목. 그러나 한국민족, 한국역사, 한국사회의 단일적 특색은 단일정체성, 한반도 중심주의, 타민족에 대한 배타주의, 약자에 대한 우월주의 등을 배태. 다양한 정체성 혹은 다중적 정체성을 형성할 계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어떻게 단일한 정체성의 사회 속에서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을까?

3. 방법론

- 평화교육은 학생들의 적극적 학습을 통해 이루어지는 참여교육, 여기서 교사의 역할은 주관적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학생들의 평화의 능력의 개발하고, 가치관을 형성하며, 평화의 내용을 함께 토론하는 facilitator의 역할. 현재의 학교교육현실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한 교재 혹은 매뉴얼이 필요하고, 교사들 또한 훈련의 기회가 주어져야 함.
- 장기적인 평화교육 계획과 재정조달이 필요함

4. 참여방식(교육대상)

- 해외의 분쟁지역의 평화교육은 분쟁당사자들이 직접 대면하여 갈등과 분쟁의 역사와 현실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을 함께 모색. 한국의 경우, 최대의 갈등당사자인 남과 북은 함께 만나기 어려운 현실.
- 남-남대화, 혹은 학교에서의 갈등해결 훈련프로그램이 실시되고, 교사에 의한 중재나 또래중재가 발전된다면, 남한사회 구성원들의 갈등해결과 평화건설능력이 향상될 것

참고문헌,

2001 통일부 용역과제, 『국내외 평화교육 사례의 통일교육에의 적용방안연구』, 평화여성회,
Working with Conflict, RTC(Responding to Conflict), Zed Books, 2000, 『갈등해결씨우기: 이론, 방법, 적용』, 2001에서 재인용.

미국의 학교폭력, 집단괴롭힘을 해결하기 위한 “또래중재”(Peer Mediation)

김정수(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정책기획위원장)

“또래중재인”(Peer Mediator)

학생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왕따를 당하는지, 괴롭힘을 당하는지 가장 먼저 알아챌 수 있는 같은 학생들로,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조기에 개입해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고 다시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

미, 롱어일랜드 브라이언트 고교 - 미국에서 또래중재 프로그램을 최초로 실시

- 다양한 인종구성으로 학교폭력사건이 많은 곳으로 악명이 높던 곳
- 1983년 SMART(School Mediators Alternative Resolution Team)이라는 학교갈등해결전문팀이 학교측과 상의, 코오디네이터를 학교에 파견, 상주도록 함
- 학교, 학생, 학부모 대상 25명 선발, 중재활동 훈련(20시간)
- SMART 2년의 프로그램의 결과
 - * 88명의 학생과 23명의 성인이 중재훈련, 학교는 무기소지, 심각한 폭력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을 모두 중재에 회부, 당사자들과 또래중재인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함, 학생들이 중재요청도 다(多).
 - * 260건의 분쟁이 중재인을 통해 해결, 이후 90% 정도가 합의사항을 지키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620명의 학생이 친구, 교사, 부모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재석상에 나옴. 이중 30 여명이 스스로 중재인이 됨

* 또래중재 프로그램이 실시된 결과, 학생들의 대도나 인간관계가 향상. (예: 싸움으로 인한 연간 정학건수가 도입직전 63건, 프로그램 시행후 첫째 34건, 다음해 18건으로 줄어듦)

99년 현재 미국 각지의 8,500 정도의 학교에서 또래중재 프로그램을 실시, 미국 각급 공립학교의 10%에 해당하는 수치

학생중재인(또래중재인)의 중재성공률(86%)은 전문중재인(75%내외)보다 높은 편 (라스베이거스 클락 카운티 교육위원회 김제)

줄어들기 시작한 학교폭력

- 1996년 한해 12-18세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범죄 교내(255,000건), 학교 밖(671,000건) - 학교폭행으로 부상당한 고3의 경우 17% (6명의 1명 꼴)

- 1993년을 기점으로 학교폭력 사건이 줄어들기 시작. 예) 12-18세 학생에 대한 학교범죄 발생율(100명당 범죄발생건수) -- 93년 16.4% --> 96년 12.8%

- 요인: 클린턴의 '안전한 학교만들기'(School Safety) 캠페인, 다양한 폭력 예방 프로그램, 특히, 또래 중재를 비롯한 갈등해결교육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이 중요한 요인

갈등해결교육의 의의(ESR, Educators for Social Responsibility 사회적 책임을 생각하는 교육자모임의 캐롤 원틀) 갈등의 연속인 인간의 삶에서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로 진출하기 전에 꼭 터득해야 할 것

- 일상생활에 빈발하는 각종 갈등/분쟁을 효율적이고도 평화롭게 푸는 능력

-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인을 알아보고 합리적인 해법을 찾는 문제해결

능력

- 다원주의 사회를 사는 데 필수적인 다양성에 대한 존중
- 다른 사람과 의견이나 이해관계가 다를 때 자신의 자세 등을 키우는 데 꼭 필요한 것

미국의 갈등해결프로그램은 개별학교 차원을 넘어 교육구(School District) 또는 주(State) 정부가 도입, 관내학교에서 시행

<오하이오주의 사례>

- 1990년 주정부, 의회, 법원 공동으로 '분쟁해결 및 갈등관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탄생
- 1990년 8월 '학교갈등관리 3개년 프로젝트' 출범 '포괄적 갈등관리 프로그램'
- * 학생, 교사, 교장·교감 등 행정직, 학부모, 경찰 등 지역사회 관계자 등 학교문제에 관련된 사람들이 참여 종합적으로 문제해결을 모색
- * 20개학교 시범운영, 94년부터 본격시행
- 주의회로부터 연간 50만달러 배정, 각 학교에 교사·학생훈련비로 1500달러씩 지원
- 97년까지 총283개의 초·중·고교가 프로그램에 참여
- * 주내 14개 지역에 설치된 트레이닝 센터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이 갈등해결 및 중재에 대한 훈련(2일)
- * 학교당 4~8명, 동료학생 또는 교사의 추천을 받아 또래중재인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주말 등을 이용하여 20~30시간 훈련
- * 훈련을 받은 교사와 학생, 행정직 등은 학교에 돌아가서 팀을 구성, 각자 자기 학교에서 갈등해결프로그램을 추진
- 위원회 측은 각 학교를 방문, 시행과정상의 여러문제에 대해 자문, 교사,들이 학교에서 갈등해결에 관해 가르칠 때 필요한 교재와 교육자료들을 개발, 무료로 배포(영어, 수학, 역사, 미술 등 여러과목에서 갈등해결과 연계해 가르칠 수 있는 교육자료집)

학교에서의 또래 중재 프로그램 조직

학생들이 스스로 서로 도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할 때, 그들에게 자율성이란 선물을 주는 것이다.(Naomi Drew)

초등학교에서의 또래중재의 단계

- ① 어린이들은 '원/원 가이드라인'을 이용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 ②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 때 어린이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와줄 또래중재자를 찾는다.
- ③ 갈등/분쟁이 아주 심각하고 해결하는 데 오래 걸리는 것이라면, 성인(교사)의 참관 하에 또래에 의해 정식으로 중재 약속이 정해져야 한다.
- ④ 문제가 그래도 잘 해결되지 않으면, 훈련받은 성인중재자가 요구된다.

Win-Win Guidelines 윈/윈 지침	윈/윈 지침서 사용규칙
1. 필요시 (충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갖는다. 분노를 적절하게 표현(alternative way)하도록 한다. (Cool off) 2. 갈등 당사자들은 각기 느낌과 자신들이 이해한 바대로 "I-message"를 사용하여 문제를 진술하도록 한다. 이때, 비난을 하거나, 이름을 거론하거나, 간섭이 있어서는 안된다. (I-Message) 3. 각자 상대방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진술한다.* (Say back) 4. 각자 자신들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책임이 있는지 말한다. (Take responsibility) 5. 함께 문제해결방안을 생각하고(brainstrom), 모두를 만족시키는(윈/윈) 방안을 선택한다. (Brainstrom solutions) 6. 문제가 해결된 것을 확인하고, 서로 용서하고, 고마움을 표시한다. (Affirm, forgive, thanks)	1. 상대방을 존중한다. 2. 상대방이 말할 때 경청한다. 3. 정직함 4. 비난, 이름 거론, 간섭하지 않는다. 5. 모두 편안함을 느끼는 결론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또래 중재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단계별 가이드

1 단계: 교사들의 갈등해결

평화조성 기술 학습(주1회)과 학생들에게 소개

평화로운 학교 분위기를 위한 필수코스요, 학교의 모든 교직원들에게 윈/윈 가이드라인을 소개, 갈등상황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이들 학생들에게 소개

2 단계: 학교 갈등해결위원회 구성

- 훈련계획과 실행
- 또래중재자 선발

- 갈등해결/포려중재 기술 실행시 교직원과 학생들 지원
- 갈등해결/포려중재 프로그램 평가
- 직접 중재자로 지명되어 중재활동

3 단계: 포려중재자 선발을 위한 기준 마련

- 후보자가 다른 학생들로부터 존중받는가?
- 공정하고 정직한가?
- 자신들의 생활 속에서 갈등해결 기술을 사용하는가?
- 다른 사람의 비밀을 지킬 수 있는가?
- 편견에서 자유로운가?
- 포려중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할애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 평화조성(peacemaking)에 헌신적인가?
 - o 성별, 인종적 배경, 성적(공부를 잘하는 학생 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한 학생도 포함되어야), 학년(고학년만 선발하지 않도록) 등에 있어서 적절하게 배분
 - o 'negative role model'을 고려할 수도 있음: 문제아도 포려중재자가 될 수 있음. 이를 통해 학생 자신과 학교가 변화될 가능성

4 단계: 포려중재자 후보자 추천 혹은 자원 신청

5 단계: 신청자 서류 심사

6 단계: 중재의 시기와 장소 결정

- 중재를 위한 특별장소 마련 (학교 식당, 운동장, 교무실, 상담실 등)
- 포려중재자가 눈에 쉽게 발견될 수 있도록, 모자나 T-셔츠 등을 착용하도록. 혹은 button

7 단계: 또래중재자 훈련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Fairfax County) 공립고등학교 또래중재 훈련과정의 내용))

1학기 ○ 학교에서의 갈등에 대한 조사 ○ 중재과정 조사 ○ 갈등에 대해 진단하기 ○ 갈등을 다른 방식으로 다루기	2학기 ○ 상이한 관점에 대한 인식 ○ 의사소통기술에 대한 점검 ○ 분노 조절하기 ○ 현재의 갈등문제에서 감정과 분노에 대한 연구
3학기 ○ 문제해결 ○ 갈등 중재 ○ 의견 줄이기 - 학교와 공동체에 중재 확산	4학기 ○ 오늘날의 문제에 대한 탐구 ○ 공동체에서의 문제해결 접근 연구 ○ 평화원리 개발 ○ 갈등중재 ○ 중재를 통해 학교에 끼친 영향 평가

8 단계: 또래중재자들을 학생들에게 소개, 또래중재 시작

9 단계: 또래 중재자들의 follow-up 모임과 연말 평가

또래중재 과정(고등학교 사례)

1. 분쟁당사자들의 자발적 중재요청

범죄 등이 아닌, 학생 사이의 행동이나 물건을 둘러싼 분쟁이 주요 중재의 내용이 됨. 예) 꾸미퍼뜨리기, 헐뜯, 이름 부르기, 약한 학생괴롭힘, 책이나 옷을 빌리고 돌려주지 않음 등

2. 분쟁에 대한 사실확인

3. 또래중재자 선발

4. 또래중재자의 사전준비

5. 중재

① 분쟁당사자로부터 중재규칙에 대한 동의받음

- 문제 상황/사실을 규명하고자 노력함
-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함
-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음
- 상대방이 자신의 끝까지 말하도록 함
- 진실을 밝힐 것
- 비밀을 지킬 것 등

② 청취(사실확인)

-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사건에 대한 페러프레이징)
-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는지 (감정에 대한 페러프레이징)

③ 문제해결 방안/대안 모색

-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겠는가?
- 다양한 대안들에 대한 brainstorming

④ 대안의 선택

6. 합의서 작성과 실행 확인

참고문헌

강영진, "미국의 학교폭력·집단괴롭힘 해결 노하우 '또래중재인'으로 '왕따' 없앤다" 「신동아」, 99년 3월호

Nsoeni Drew, *Learning the Skills of Peacemaking: A K-6 Activity Guide on Resolving Conflict, communicating, Cooperating, Tolerance*: Jalmar Press, 1995, pp.23-27.

Virginia Fairfax County, *Peer Mediation Manual*

